

2008 연차보고서

A small square icon with a white border and a dark purple fill, positioned at the top-left corner of the KIRI logo box.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 연차보고서

2009. 4

『2008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보험연구원은 보험을 비롯한 경제·금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2월에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원년인 2008년 한 해 동안 보험연구원은 경기침체기의 환경극복을 위한 경영전략 제시, 급격한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지원,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에 연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현실 적합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노력의 결과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합금융서비스 환경하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첫 번째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지난 한 해 보험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성과와 FY2009에 수행할 연구과제 등 연구원 전반에 대해 백서 형태로 작성하여 보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차보고서는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문은 개원 초년도에 수행한 연구성과물을 금융·보험 산업 전망과 동향 분석, 경영전략 선진화 연구, 보험 관련 제도 선진화 연구, 보험산업 지속성장 기회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연구, 금융·보험 이슈 연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문은 FY2009에 수행 예정인 주요 연구과제에 대한 개요를 담았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FY2008과 FY2009 동안의 보험·금융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보험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세 번째 부문은 보험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관련 활동으로 등재학술지인 『보험금융연구』 및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등의 정기간행물 내용과 보험·금융 산업과 관련한 세미나 및 공동연구 등 주요 대내외 활동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문은 보험연구원 일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 연구조직과 각 연구실의 주요 연구영역 및 기능 등에 대한 소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보고서에 그간의 연구성과를 담아서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연구원 출범 이전부터 지속된 보험업계, 정부와 감독 당국, 학계 등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사료되며, 다시 한 번 저를 포함한 모든 연구진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연구원은 연차보고서가 연구원의 연구성과나 활동에 대한 결과물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보험·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담아내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보험·금융 산업 전반에 걸친 생생한 종합보고서로서 권위와 유용성을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은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더불어 금융상품판매업법의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경기침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보험연구원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와 같은 연구수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연구원의 기초연구 능력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권 최고의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발간되는 연차보고서가 보험연구원의 다양한 연구활동과 보험산업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9년 4월

보험연구원 원장 나 동 민

나동민

I. FY 2008 주요 연구

013	1.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014	2009년 금융·보험 산업 전망
020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추이 분석
021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022	유가급등이 자동차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022	영리의료법인 추진에 따른 보험산업의 진입방안
024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025	기업의 바람직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과제
026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물차 손익변화와 대응
027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상관관계 분석
029	2. 금융·보험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전략 선진화 연구
030	보험설계사의 특성 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03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036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038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040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042	햇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044	구조화 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047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049	3. 보험 관련 제도의 선진화 연구
050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053	보험분쟁의 재판 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056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059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061	국제보험회계기준의 특성과 대응과제
063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의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065	4.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회 확대 연구
066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 방안
069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072	탄소배출권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074	퇴직연금의 급여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077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성에 관한 연구
079	보험산업 글로벌화 요인 분석 및 정책방향

081 5.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연구

- 082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 분석
- 08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086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기관 성과 평가체계

089 6. 금융·보험 이슈 연구

보험금융연구

- 090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규제 비교 분석
- 091 경제변수가 생명보험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
- 092 인구고령화가 인적자본 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093 교차모집에서 설계사의 보험회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094 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 구조가 경영성과 및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CEO Report

- 096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방안
- 097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098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Insurance Business Report

- 100 보험부채의 리스크 마진 측정 및 적용
- 101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 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102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사업 진출방안
- 103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104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105 보험회사의 헛지펀드 활용방안
- 106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주간 이슈 · KiRi Weekly

- 108 보험지주회사 규제개선 방향 및 운영모델
- 109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금융위기설 진단
- 110 AIG의 부실원인과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111 생명보험회사의 통합상품 동향과 시사점: 장기간병보험을 중심으로
- 112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납부제도 개선방안
- 113 일본 야마토생명의 파산원인과 시사점
- 114 국내 GA 채널의 현황과 향후 대응

Contents

115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기능에 대한 검토: 최종대부기능을 중심으로
116	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논란에 대한 검토
117	금융위기 이후 미국 보험감독 체제 개편 논의와 전망
118	우리나라 가계저축률 저하, 그 원인과 시사점
119	생명보험회사의 손익구조 평가 및 시사점
120	신브레튼우즈체제 도입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121	이론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2	미국 통합감독대상 프로그램 실패의 교훈
123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리스크 관리
124	보험신탁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선진화
126	변액보험 시장점유율 변화와 판매 측면의 시사점
127	오바마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28	미국 생보사의 변액연금 최저보증 헷징과 시사점
129	퇴직연금제도 시행 3년에 대한 종합평가 및 과제
130	통화정책의 유효성 점검과 대안적 제도 검토
131	보험계약의 강력범죄 악용 방지방안
132	실험경제학에서 본 보험사기 등 부정행위 유발요인
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134	최근 방카슈랑스 실적추이와 향후 과제
135	최근의 소비부진과 부(富)의 효과
136	미국 보험평점제도 관련 동향 및 시사점

II. FY 2009 주요 연구계획

141	1. 경기침체기의 환경극복을 위한 경영전략 제시
142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143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144	자산관리서비스 업무효율성 제고방안
147	2. 급격한 제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148	금융상품 판매제도 변화의 보험산업 영향 및 대응
149	보험산업 내 경쟁정책 연구
151	보험규제의 국제적 조화방안
152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153	주요국의 산재보험 운용주체 개혁사례 분석
155	GLM을 활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산출방법 연구

157	3. 금융산업 내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158	보증보험의 효과적 리스크 관리방안
159	최저보증과 투자옵션 결정에 내재된 계약자 행동리스크: 변액연금
161	퇴직연금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방안
162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및 요율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164	보험거래 선진화를 위한 약관제도 개선방안
166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 요율차등화제도 연구
169	4. 금융겸업화 대비 종합금융 연구
170	보험회사 대출고객군의 특성 분석
172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부진의 원인과 보험수요 분석
174	보험계약자 지급결제수단의 내생적 선택과 시사점
176	내부통제를 통한 금융그룹의 위험 감소방안

Ⅲ. FY 2008 연구 관련 활동

180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181	2.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182	3.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183	4. 금융·보험 산업 연구 관련 세미나
184	5.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185	6. 금융·보험 도서 정보제공

Ⅳ. 일반 현황

188	1. 경영비전
188	2. 연혁
188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189	4. 임직원 현황
190	5. 실별 연구 분야 및 연구진
193	6.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 2008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연구보고서

경제·금융·보험 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정책/경영보고서

금융·보험 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경영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

조사보고서

금융·보험 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상품·정책·시장 측면의 조사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보험금융연구(구 보험개발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3월, 7월, 11월 연3회 발간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Insurance Business Report(중간)

사례조사, 제도 비교 등 비교적 자유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연구결과를 소개

주간이슈

웹 주간지 『KiRi Weekly』의 일부분으로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I.

FY2008 주요 연구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금융·보험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전략 선진화 연구

보험 관련 제도의 선진화 연구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회 확대 연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연구

금융·보험 이슈 연구

1

Chapter

금융 ·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2009년 금융 · 보험 산업 전망
-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추이 분석
-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 유가급등이 자동차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영리의료법인 추진에 따른 보험산업의 진입방안
-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 기업의 바람직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과제
-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률차 손익변화와 대응
-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상관관계 분석

2009년 금융·보험 산업 전망

동향분석실 | 정책보고서 · CEO Report

014

연구배경 2008년 11월에 발간된 『2009년 보험 산업 전망과 과제』에서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불안의 여파로 2009년 세계경제는 급속히 침체될 것이며, 국내경제도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증가로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어 경제성장률이 3%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 보고서는 보험산업도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FY2008에 3.8%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이후, FY2009에는 성장세를 일부 회복하여 5.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가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가 상호작용을 하는 악순환으로 인해 장기 불황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경제도 세계경제의 침체 가속,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빠르게 하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침체는 2009년 후반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불확실성 고조로 인하여 국내외 경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거시경제 및 보험산업 전망치를 수정·보완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2월에 『FY2009 보험산업 수정 전망과 대응과제』를 발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예상보다 빠르게 전이되면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침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선진국의 경기악화와 신흥개도국의 성장동력 저하라는 동시적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침체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요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국이 계획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추진되더라도 세계경제의 본격적 회복은 2010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침체,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경제도 수출과 내수가 동반 급락하여 실질 GDP 성장률이 2008년 연평균 2.5%로 2007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9년에도 국내경제는 금융과 실물경제 간 악순환, 수출감소와 내수 침체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극심한 침체국면이 전개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6%로 급강하할 전망이다. 경기침체의 가속과 더불어 부실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물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총수요 감소,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대에서 안정되고, 대외거래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욱 크게 감소하면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의 유동성 부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말 정책당국의 적극적 대응과 국제 공조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2009년 국내경제는 수출감소와 내수침체로 경제성장률이 -2.6%로 급락하여,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도 3.7%에 머무를 전망이다. 생명보험은 금융시장의 불안, 실물경제의 침체로 FY2008은 -2.5% 역성장할 것이며, FY2009에도 1.3% 성장에 그치는 등 본격적인 성장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은 글로벌 시장과 동조 현상을 지속하면서 약세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향후 신용경색 해소, 경기호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원/달러환율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지속, 수출급감 등으로 당분간 급격한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 전망

보험산업 전망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지난 3년 연
속 두 자리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FY2008부터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대폭 둔
화되어 FY2008 1.3%, FY2009에는 3.7%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경상
GDP)도 2008년 11.6%, 2009년 11.4%로 감소할 전
망이다.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수입보험료 성장둔
화와 투자 여건 악화로 FY2009에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426조 3천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생명보험	61.5(14.4)	66.5(8.1)	75.1(13.0)	73.2(-2.5)	74.2(1.3)
손해보험	25.7(10.8)	29.6(15.0)	34.0(14.9)	37.3(9.6)	40.4(8.3)
전 체	87.2(13.3)	96.0(10.1)	109.1(13.6)	110.4(1.3)	114.5(3.7)

이며, FY2009에도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1.3%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본격적인 성장세 회복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개인보험은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수요둔화와 해약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FY2009에 1.4%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보험 중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의 구조적 저성장세와 질병보험 판매의 지속적 축소 등 뚜렷한 성장동력이 부재하고 주 성장요인이었던 유지를 제고효과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0%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다.

개인보험 중 생존보험은 일시납을 중심으로 변액연금 신규 가입의 급격한 감소와 일반계정 연금의 성장둔화로 2.5%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인보험 중 생사혼합보험은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저성장세와 저금리환경에 따른 일반생사혼합보험의 지속적인 수요감소로 인해 2.3%의 낮은 성장이 전망된다. 단체보험도 퇴직연금시장 활성화로 인한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기업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부정적 요인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 미만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경영수지는 해약 등에 의한 보험영업수지 적자 지속과 채권금리 하락으로 투자영업이익이 축소되는 등 상반기를 중심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억원, %)

보험종목	FY2007		FY2008(E)		FY2009(F)	
	보험료	증가률	보험료	증가률	보험료	증가률
개인보험	679,058	13.4	673,222	-0.9	682,447	1.4
생존	223,900	24.0	219,102	-2.1	224,526	2.5
사망	306,812	4.3	305,084	-0.6	305,388	0.1
생사혼합	148,345	19.4	149,035	0.5	152,533	2.3
단체보험	71,898	9.7	59,134	-17.8	59,351	0.4
일반단체	11,712	-5.4	10,557	-9.9	9,615	-8.9
퇴직보험	49,606	0.3	36,666	-26.1	34,795	-5.1
퇴직연금	10,580	186.0	11,910	12.6	14,941	25.4
합 계	750,956	13.0	732,357	-2.5	741,799	1.3

*변액보험은 종목별로 개인보험에 포함되었음.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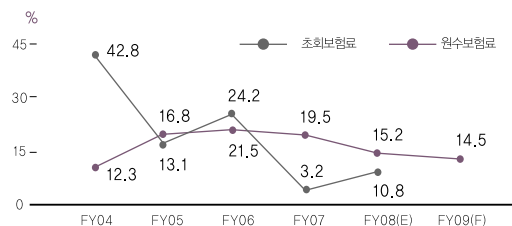
FY2008 4~12월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적인 고성장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0.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FY2008 4/4분기에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자동차보험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장기성 손해보험(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연금)의 성장세도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FY2008에 9.6%, FY2009에도 8.3% 성장하여 생명보험에 비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은 경기침체로 자동차등록대수 및 고급차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채널의 비중 확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FY2009에는 -3.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FY2008 중반 고유가로 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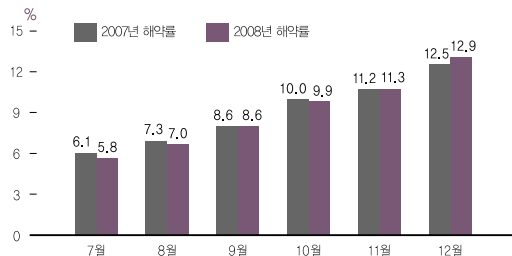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겠으나,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 유지로 FY2008에 9.6%, FY2009에도 8.3% 성장하여 생명보험에 비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운행거리 단축과 사고율 감소로 보험료가 인하되었고 할인대상 차량이 증가하였다는 점도 자동차보험 역성장의 주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최근 손해를 상승 추세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 성장률은 다소 회복될 수는 있겠으나 그 영향은 FY2009보다는 FY2010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손해보험 성장률 추이



장기손해보험 해약률 추이



*해약률 = (효력상실액 + 해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장기손해보험은 상해·질병·통합형 보험의 높은 성장세와 저축성 보험의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FY2009에는 1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회 보험료가 FY2008 4~12월에 전년동기 대비 10.8%

성장하여 성장잠재력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장기손해보험은 당분간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손해보험 해약률은 FY2008 4~12월에 12.9%로 전년동기 대비 0.4%p 증가에 그쳤으나, 11월 이후 해약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경기침체로 생계형 해약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의 지속적인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상·특종·보종 보험의 높은 성장률로 인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 가겠으나 FY2008 4/4분기 이후 성장 폭이 둔화되어 FY2009에는 7.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 중 화재보험은 일반물건의 보험료 인하, 민간부문의 투자부진과 건설경기 침체 등 부정적 영향에 따라 역성장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해상보험은 수출입 물동량의 감소와 함께 선박 및 항공기의 항로통합과 계선증가 등 수요감소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또 특종보험은 민간부문의 투자부진과 건설경기 침체로 기술보험과 종합보험 등 기업성 보험이 부진을 보이는 반면, 상해보험 등 가계성 보험의 고성장이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보증보험은 금융위기로 인한 제1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보증물량 자체는 늘어나겠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불량물건 증대로 인수심사가 강화되어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보험종목	FY2007		FY2008(E)		FY2009(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화재	3,075	-1.8	2,797	-9.0	2,576	-7.9
해상	6,518	3.1	8,560	31.3	9,024	5.4
자동차	108,095	12.0	108,851	0.7	105,041	-3.5
보종	9,940	-13.0	11,321	13.9	12,759	12.7
특종	28,371	9.0	30,385	6.9	32,546	7.3
장기	163,436	19.5	188,225	15.2	215,595	14.5
개인	9,995	25.3	12,869	28.8	16,369	27.2
퇴직보험	8,258	26.2	6,414	-22.3	4,701	-26.7
퇴직연금	2,133	61.0	3,195	49.8	4,866	52.3
합계	339,818	14.9	372,567	9.6	403,478	8.3

*특종보험은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 포함.

개인연금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FY2009에도 27.2%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 관련 보험시장은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으로 퇴직연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겠으나 퇴직보험 해약액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으므로 성장률이 -0.4%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FY2008 4~12월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은 75.5%로 전년 대비 0.2% 개선되었으나 향후 손해율은 FY2008 75.8%, FY2009에는 77.8%로 다소 악화될 것이다.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 증가와 해약률 상승으로 FY2008 24.1%, FY2009에는 24.3%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FY2008 손해보험사 전체 당기순이익은 손해율 및 사업비율 상승으로 다소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며, FY2009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욱 상승하여 악화 폭이 증대될 전망이다.

재무건전성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경우 재투자수익률의 하락으로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는 자산운용과 지급여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신계약 감소와 보유계약의 해약률 상승으로 보험영업의 수익구조도 악화되는 양상이므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없을 경우 하락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본시장 변동 가능성이 여전하여 투자영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험영업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주요

대응과제

보험회사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현재의 금융위기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수익보다는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미래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며, 대주주를 중심으로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여 건전성을 개선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고객의 유지를 통해 추가 보험수요를 유도하는 방식의 마케팅에 주력하고, 대규모의 해약사태가 발생하지 않

신계약 감소와 보유계약의 해약률 상승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 '저성장-저금리'의 침체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도록 철저한 해약률 관리 대책을 마련하며, 소득계층별 특성 파악과 차별화된 판매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세계 최고속의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지속적 급여 인화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민영연금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퇴직연금일시금의 연금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장기간병 보험 사업영위를 위한 언더라이팅·의료비심사 역량, 의료기관 네트워크 역량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소비 증가와 전반적인 의료비용 증가에 대비하여 위험률 변동, 가입조건 변경, 계약기간 변경 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품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녹색성장, 저탄소 배출 등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은 세계적인 흐름이므로 이들 산업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다양한 판매채널이 도입됨에 따라 고객별·상품별 목표시장을 분석하고 향후 성장가능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채널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검토편진전에 따라 금융상품의 제판분리가 지속되는 추세로 금융상품 판매전문업의 도입방안이 금년 중에 마련될 예정이므로,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회사별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언더라이팅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위험요소들의 상대위험도를 적절히 평가하여 요율분석과 마케팅 전략 이외에도 역선택과 보험사기 방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경기침체에 따른 신차 판매위축, 온라인 판매채널의 확대에 인한 가격경쟁 등으로 보험료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손해율 통제를 통한 수익성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 저하로 금리역마진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산운용수익률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보험의 특성상 장기적인 부채 듀레이션과 일치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대상을 발굴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장·신용·금리 등과 같은 보험회사의 다양한 내재 리스크를 통합하여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통합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를 둘러싼 리스크 환경 변화요인과 리스크 노출정도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조직의 확충 및 개편과 더불어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및 새로운 재무건전성 체계로의 이행 등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 및 계리 분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리스크의 중요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재인식도 요구된다.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추이 분석

최영목(부연구위원) | 테마 진단

보험동향 2008년 봄호

020

국내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영업부문에 적자가 지속되면서 투자영업부문의 실적이 당기순이익을 결정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은 경기 사이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근 경기부진으로 인해 보험영업과 투자영업 모두에서 불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을 분석하여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이익률(ROA)은 FY1990~FY2006 동안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FY2001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형사의 자산이익률은 대형사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시장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하락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이익률을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 매출액투자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로 분해하여 그 추이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매출액(보유보험료) 대비 보험영업이익으로 측정한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은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투자영업이익으로 측정한 매출액투자영업이익률은 대체로 8.0% 전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자산운용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등락 폭이 크다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총자산 대비 매출액으로 측정한 총자

산회전율은 FY1993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FY2006 현재에는 0.5%로서 매출액이 총자산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를 반영하는 순자산비율은 FY1997에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각각 3.2%와 7.1%에서 FY2006에 각각 11.8%와 8.8%를 기록하여 대형사가 큰 폭의 개선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은 대형사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FY2006 현재 150~200% 사이의 '양호' 판정에 해당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회사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의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우선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손해율 축소와 고정비용 절감 노력을 통하여 보험영업부문의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출액투자영업이익률은 자산운용 여건에 따라 등락 폭이 큰 상황이므로 투자영업부문에서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형사의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이 FY1999 이후 중소형사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후부터 대형사의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미루어 보험영업부문의 수익성 제고가 견실한 재무구조 달성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손해보험회사들은 이익잉여금의 확충, 유상증자, 금리 및 주가 변화에 따른 시장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김세환(수석연구원) | 테마 진단

보험동향 2008년 봄호

신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영리의료법인 설립허용과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재편이 예상된다. 따라서 민영건강보험도 국민건강보험 보충형 건강보험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보건정책당국은 국민의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에만 의존해 왔으므로, 민영건강보험은 상당한 민간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여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FY2006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보장을 위해 민영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총보험료는 7조 4,623억 원(저축성 보험료 제외)이며, 민영보험사는 이중 6조 665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동 자원이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에 직접 공급되고, 정부당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추가재원의 투입 없이도 의료보장성을 현재 수준보다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영건강보험의 발전모델을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형·중복형·보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폐지한 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탈퇴한 의료기관이 민영건강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규정이 폐지되어야 하는 바, 이의 폐지는 전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므로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민영건강보험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충형 보험모델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비 지불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소유·운영하여 의료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직접제공방식과 달리 보험회사가 재정만을 담당하고 의료서비스는 별개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간접공급방식에서는 의료비 보상을 위해 상환방식이나 제3자 지급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제3자 지급방식이란 피보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후 의료기관이 제3자인 보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며, 보험자는 청구된 진료비를 피보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비를 지급한 후 이 비용을 다시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상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및 소비자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제3자 지급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민영건강보험은 상환방식이기 때문에진료비용에 대한 심사권한이 없으나 제3자 지급방식이 도입되는 경우 과잉의료공급을 막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영건강보험에 투입되고 있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의

료보장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 보험을, 그 이상의 선택적 의료서비스는 민영건강 보험을 통해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민 영건강보험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 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리 라 본다.

유가급등이 자동차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기승도(전문연구위원) | 테마 진단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2008년 상반기에 전 세계는 유가급등 현상을 경험하였다. 최근의 유가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준이다. 이러한 유가급등 현상은 세계경기 변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과거 제1차(1973년) 및 제2차(1979) 오일쇼크의 경우 유가급등이 세계경제를 침체시킨 원인이었다.

한편, 자동차보험산업은 경기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편이다. 휘발유(또는 경유) 가격이 올라가면 운전자의 운행이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경기가 침체되면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추세가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지급보험금의 원가가 상승함으로써 계약자들의 연성사기 등 모럴헤저드가 증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유가급등과 자동차보험산업 간의 이와 같은 관계를 주목하고 유가급등이 자동차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자동차보

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유가상승은 경기침체로 연결될 수 있고,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을 어떻게 구사하는지에 따라 경기침체가 현실화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정부의 경기침체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효율인하 경쟁에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즉, 유가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단기간에 그칠 경우 효율인하 경쟁을 자제하고, 장기화될 경우 손해를 개선효과에 맞추어 효율을 조정해야 한다.

셋째, 유가급등으로 경기침체가 확실할 경우 자동차대수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경영목표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이 아닌 수익률 극대화가 되어야 한다.

영리의료법인 추진에 따른 보험산업의 진입방안

조용운(연구위원) | 테마 진단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영리의료법인 허용 논의는 1995년 시장개방 논의와 더불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찬반 논의가 지속되어 오다가 2008년 중 기획재정부가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관련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의료산업의 발전과 보험산업의 고용창출 및 새로운 사업기반 확보를 위해 보험산업의 자본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인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사례

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영리의료법인 자본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의료기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고, 민간기관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과 기타법인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병원이 있다. 1976년부터 개설되기 시작한 비영리의료법인은 그 수가 계속 증가하여 2006년 현재 368개로 병원 전체의 26.9%를 점유하고 있다.

비영리의료법인은 수익성 저하로 이익잉여금 축적을 통한 자기자본 투자가 어렵고, 높은 차입금 의존도 등으로 외부의 장기 차입을 통한 투자도 곤란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의료법인별 재무상황에서 보면 영리법인인 개인병원은 흑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영리의료법인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재무현황을 볼 때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리의료법인을 제도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병원이 공공 소유이지만, 근래 민간영리병원이 증가하고 있고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볼 때 영리의료법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본참여 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의 영리의료법인 소유나 자본참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융법)」 제24조에 의하여 제한적이다. 그러나 병원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사업으로 인정하도록 보험업법 등을 개정하면 자본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병원업을 인정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영리의료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 자본참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보험지주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의료법인 소유나 자본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어 보험회사가 자본참여를 하게 되면 의료법인의 재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과 의료산업 발전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보험산업은 통합형 보험의 형태로 의료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가입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통합형 보험은 해외에서도 극소수의 사례만 있고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또한 통합형 보험 형태로 의료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영리의료법인에 자본참여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김세환(수석연구원) · 황진태(부연구위원) | 테마 진단

보험동향 2008년 가을호

20세기에 접어들어 토지이용의 변화와 함께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로 기후변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보험산업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가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산업도 기후변화로 인한 고객들의 리스크 및 보장 니즈의 변화를 이해하고, 기후 관련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손실방지 솔루션과 상품개발 등 미래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기상의 장기적 트렌드를 변경시킬 뿐 아니라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재산보험리스크(property risk)가 증가한다. 그리고 폭우나 폭설 등으로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거나, 아열대화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감소, 악천후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와 탄소배출량 규제에 의한 경영자 책임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보험 · 여행자보험 ·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종류의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열대성 질병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고 천식 발생률이 높아지며, 혹한 및 혹서 발생으로 사망률(mortality)과 질병률(morbidity)도 영향을 받으므로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의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리스크 변화에 대비해 선진국의 보험산업은 전통적 보험리스크모델에 기후과학을 접목한 새로운 리스크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있고, 면책조항 부가 및 가격인상, 파생상품 활용 등 금융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손실통제기법과 같은 물리적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에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탄소배출권시장의 새로운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신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한 예로 보험료를 운행거리에 연동시키거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자동차보험상품, 녹색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할인하는 주택보험상품,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 존재 여부와 배출량 관리나 탄소공시 등 기후변화 대응상태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차등화시키는 임원배상책임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전 세계적으로 550억달러(2006년)가 투자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풍속이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발전량 저하를 보장해 주는 전문보험상품도 등장하였다. 더욱이 탄소배출권의 가격변동 리스크 보장, 개발도상국의 청정개발 메커니즘(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프로젝트의 이행을 보장하는 실험적인 보험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 보험회사는 자본의 직접투자 활동을 통해 피투자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녹색금융 내지 사회적 책임 투자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 스스로도 녹색경영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화 수단을 통해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이득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 보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전

락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진국 보험산업의 기후변화 전략 및 대응방안을 참고하여 그린 마케팅을 활용한 보험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바람직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서성민(연구위원) | 테마 진단

보험동향 2008년 가을호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마지막 노후자금인 퇴직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중요시되고 있다. 만일 퇴직연금제도가 잘못 운영되어 부실화될 경우 기업경영의 안전성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얼마나 높게 시현되고 있는가, 운용 및 자산관리 관련 수수료는 얼마나 저렴한가 등 과거 성과에 기초한 정성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단기적인 수익률 변동과 수수료 수준 차이만을 고려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력과 운용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는 단기적 변동성이 매우 큰 수익률 등과 같은 정량적 평가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능력 및 운용체제의 질 등과 같은 정성적 평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을 분류하고, 이에 기초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정보비대칭성의 완화 차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수탁자가 수행해야 할 핵심역할 중 하나로 보고, 제도의 운영을 책임지는 수탁자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전문성·자산운용력·서비스·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 법령 및 후생노동성 통지에서 규정하여 전문적 수준, 서비스 내용, 수수료 등에 대하여 평가한 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초기단계이다 보니,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법규나 가이드라인이 아직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에서 간접적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은 일부 존재하고 있어서 전적으로 사용자(기업)의 판단과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합리적인 선정기준 없이 수익편향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의 초기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진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직연금상품의 특성에 부합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특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의 기본 역량은 단기적인 운용성과가 아니라 보다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경쟁력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정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설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률차손익변화와 대응

이경희(전문연구위원) · 서성민(연구원) | 테마 진단

보험동향 2008년 겨울호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률차익은 보험산업 고유의 이익으로서 경쟁력 및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위험률차익 관련 성과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익률 수준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 간 격차도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보험회사들의 대응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성과지표가 악화된 것은 동 부문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위험률차익률(1-지급보험금/위험보험료)이 낮아진 데 기인한 것이다. 2005~2008년 위험보험료 규모는 평균 8.5% 증대되었으나, 지급보험금은 11.5%나 증가하여 위험률차익률이 하락하였다. 이러한

하락현상은 보험회사 내부적으로는 사망보장 비중이 낮아지고, 생존보장 비중이 높아지는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종신보험의 초기 선택효과 소진, 비대면판매채널 활용도 증가와 같은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상품 포트폴리오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파악되는데,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는 생존보장부문의 위험보험료가 전체 위험보험료의 60% 수준을 초과하면서 위험률차익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또한, 비대면채널의 경우 언더라이팅 절차가 생략된 저가형 건강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사고발생률이 현저히 높아 위험률차익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외부 요인의 기여도 크다고 판단된다. 소득증대 및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기 암 검진사업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질병의 조기발견이 가능해지고,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질병 발병 시 생존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을 통한 수검자 수는 연간 390만명을 넘어섰으며, 수검률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발병 사실도 모르고 사망에 이르렀을 질병의 조기발견이 크게 높아졌다. 보험계약자가 발병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진단·수술·입원 등 일련의 급부를 연쇄적으로 청구함으로써 관련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사회적·경제적 요인의 변화가 지속될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률차익 관련 성과는 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생존담보 관련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품 기간을 단기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급부지급 형태, 지급 횟수, 건강 관련 정보 측면에서 생존보장과 사망보장 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률 변동 및 자동갱신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반적으로 위험률차익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목표 이익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상품설계 측면에서는 중복보장 문제를 개선하고 생존보장과 사망보장을 적절히 혼합하여 자연 헷지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대면채널의 사고발생률이 대면채널에 비해 상당수준 높기 때문에 비대면채널은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양호한 담보 및 표적집단에 대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상관관계 분석

유진아(부연구위원) | 테마 진단

보험동향 2008년 겨울호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연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여 동 금리가 2.0%에 이르고 있으나, 정책금리 인하로 인한 정책효과는 불확실하다. 이와 같은 파

급효과는 금융시장 가격의 반응속도와 이에 따른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시장금리를 은행 그리고 가계 및 기업의 자본비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자본비용과 정책금리의 장·단기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금리의 인하는 시장금리의 하락을 동반하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기업보다는 가계의 대출금리가 더욱 빠르게 하락하여 가계의 소비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고에서는 미국 및 유로 지역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IMF 보고서의 결과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였다.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이들 지역에서 기업을 포함한 가계의 자본비용은 정책금리의 인상 또는 인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금리는 제반 경제변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은 자본시장에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여 정책금리의 변동에 따른 자본비용의 상승 또는 하락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리 또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장기적으로 정책금리는 기업의 자본비용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리의 하락이 기업채권 수익률 등의 즉각적인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투자의 즉각적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채권 수익률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와 같은 은행의 자본비용은 정책금리의 변동에 대하여 1~2개월 내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가계의 자본조달은 은행의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책금리가 가계의 자본비용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책금리 인하가 가계의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및 소비 활동에까지 연결된다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불황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주택담보 대출을 통하여 소비자 금융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은 최소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 대출은 만기가 30년에 이르러 해당 대출 금리는 정책금리 이외의 여러 경제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장기 대출 채권은 단기 채권에 비하여 불확실성에 더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경제환경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책금리 인하결과, 미국 또는 유럽지역보다 우리나라 가계의 대출금리는 비교적 빠른 하락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자본비용 하락으로 인하여 가계소비가 증진된다면 경기불황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금융위기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심화된 경제환경에서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이에 대비하므로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진작 효과는 정상적인 상황보다 작을 수 있다.

Chapter

2

금융 · 보험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전략 선진화 연구

- 보험설계사의 특성 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헛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구조화 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보험설계사의 특성 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연구위원) · 권오경(연구위원) | 연구보고서

030

연구배경

현재의 보험판매채널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성격과 기능이 상이한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보험판매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함께 상호협력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에 기존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쟁적 우위의 확보는 채널 종사자뿐만 아니라 제조자인 보험회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설계사 조직의 고능률화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상품 측면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보험상품이 판매되는 보험시장은 상당부분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으나, 겸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타 금융상품의 특성이 융합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시행될 자본시장법으로 통합적인 금융상품의 등장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사 측면에서는, 최근 외국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고소득 설계사가 증가하고 있고 과거와 비교해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국내 설계사 조직은 저능률 설계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의 사례로 금융겸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요 보험회사의 경우 전통적 채널, 특히 전속 채널이 빠르게 붕괴된 사례가 나타났다. 이들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는 기존 채널구조 개편을 통해 독립채널의 확보에 집중하는 것과 함께 현행 존속 채널은 고능률화 조직으로 재편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주요 국가에서 대형 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전속 판매채널이다. 대형보험회사는 강력한 채널 통제력을 바탕으로 로열티가 높은 고객을 관리하고 회사 손익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및 수익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전속 조직을 중심으로 성장해 오면서 독특한 보험판매전략과 기업관행을 정착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국내 보험판매전략이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되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전통 판매채널이면서 특히 생보의 주력 판매채널인 설계사의 경우 겸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미래보험시장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보험환경에서 보험소비자의 구매요인과 설계사의 특성 및 성과와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경쟁력 있는 설계사 조직을 육성 및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 아이디어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새로운 겸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의 고능률화 특성을 파악하고, 보험회사가 경쟁력 있는 설계사 조직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전통 판매채널인 설계사의 보험판매 활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고객지향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고객지향성 및 설계사의 개별적 특성과 설계사의 성과(소득)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설계사의 고능률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검증되었던 판매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판매실적 간의 관계가 보험 측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규명하고, 고능률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수행하였다.

첫째, 보험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고객지향성, 서비스 신뢰, 서비스 만족, 몰입 및 서비스 충성도)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자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보험판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출한 후 이들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설정하고 가설검정을 실시하여 요인들 간의 상호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둘째, 인과관계모형에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고객지향성과 보험설계사의 다양한 특성(인구통계학적 특성, 기타 특성)이 보험설계사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먼저 고객지향성을 구성하는 요인(독립변수)들과 고객지향성 점수(종속변수)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개별 설계사의 고객지향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그 다음으로 고객지향성과 및 개별 설계사의 특성과 보험설계사 성과와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 두 분석을 종합하여 보험설계사의 고능률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핵심논제였던 고객지향성, 설계사의 소득 수준 및 전문성을 기준으로 고능률과 저능률 설계사 집단 간의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 보험설계사의 고능률화 목적은 보험회사측면에서 보면 회사의 영업성과 및 수익성 향상이며, 설계사 측면에서 보면 지속적 인 고소득의 확보이다. 그런데 이 둘은 대체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보험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고객지향성, 서비스 신뢰, 서비스 만족, 몰입 및 서비스 충성도) 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고객지향성은 충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판매자의 고능률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비스 신뢰는 몰입과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고능률화를 위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객의 서비스 만족수준 역시 고능률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혀졌다.

고객지향성 및 보험설계사의 특성(인구통계학적 특성, 기타 특성)과 보험설계사의 성과와의 관계 분석결과, 설계사의 고능률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설계사의 특성으로는 고객지향성 수준, 설계사 경력, 교육수준, 설계사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설계사의 보험판매 외 기타 경력, 설계사의 기부활동 등인 것으로 나타났

다. 끝으로 보험설계사의 고능률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상기 두 분석을 종합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마케팅 개념들을 보험판매에 적용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고, 확인된 마케팅 개념과 설계사의 개별적 특성들을 활용함으로써 설계사의 고능률화를 위한 요건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를 활용함으로써 보험영업의 실무적 측면에서 보다 진전된 설계사 또는 판매조직의 관리(채용, 교육, 보수 및 유지 등)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유경원(연구위원) · 이혜은(연구위원) | 연구보고서

033

연구배경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래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위기설들이 제기되었고 사라졌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사라지는 통상적인 위기설과는 달리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위기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자료가 부족할 때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동 문제에 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재발되고 위기로 확대·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에 비해 가계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정태적 평가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바로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재생산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아울러 총량개념에 입각하여 가계부채를 평가할 경우 어떤 유형의 가구가 건전하고 어떤 유형의 가구가 부실위험에 직면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가계부채의 분포에 따라서는 현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가계부채에 관한 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거시자료 분석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보다 정

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에 관한 올바른 평가와 경제적 의의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가계는 특성에 따라 채무 상환능력이 상이하기에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분포를 이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가계부채의 금융시장 전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담보로서 작용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 보유와 가계부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동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원인을 거시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증가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가계부채의 경제적 의의 및 소비자 금융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재무상태를 정태 및 동태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가계부채와 관련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부채의 분포가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총량지표로 나타낸 가계채무 상환능력 평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소득 측면에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는 양호하지만 3배 이상의 높은 가구가 5%나 되고 이러한 가구는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고소득계층에도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전체적으로는 1배 이하지만 금융자산에 비해 금융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가구가 전 소득 계층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넷째,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동시에 감안하는 경우 약 80%의 가구가 안정적인(3배 미만) 것으로 평가되지만 약 3%의 가구는 두 지표가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부채와 자산보유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가 금융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의 총자산보유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채규모가 큰 가구는 금융자산 규모가 적어 유동성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이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결과는 금융부채의 크기가 부동산 구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여섯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는 신규 부채의 증가보다는 기존 차주가구의 부채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적지 않은 수의 가구의 부채가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의 부채증가가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보유는 소득 내지 부동산 자산 취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 및 자산을 통한 상환능력이 떨어져 앞으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경우 이들 위험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둘째,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보다는 향후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소비자출 및 소비심리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축적 미흡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거시경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금융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 일시적인 소득변동 내지 경기변동에도 소비지출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기의 진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및 부채 분포를 감안할 때 향후 가계부문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것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미시 및 거시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재무상태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고, 정태 및 동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로 보인다. 특히 소득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경우 안정적인 소득흐름의 확보가, 자산가격 변화에 민감한 중·고소득계층의 경우 자산가격의 안정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진 익(연구위원) | 경영보고서

036

연구배경

국내외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가운데 공적연금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개인고객 스스로가 생애관리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됨에 따라 생애설계(소득과 소비수준을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재무설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은 아직 본격화 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고객과 금융회사 양자 모두가 자산관리서비스 개념과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도 이유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국내에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 개선사항, 인프라 개선사항, 업무 개선사항을 검토하였다.

주요내용

현재까지 법률적으로 통용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산관리서비스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자산관리서비스 개념을 “복합적인 재무계획을 요구하는 고객을 대

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서비스”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즉 집합투자자와 비교할 때, 자산관리서비스는 형식면에서 각 계좌의 개별적 관리를 전제로 하며, 내용면에서 복합적 재무설계라는 특성을 갖는 한편, 표준형에 대비되는 맞춤형 구조를 추구한다.

한편,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는 복합성(프로그램의 내용)과 맞춤형(프로그램 구조)이 자산관리서비스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자산관리서비스는 개별적 형식에 주목하던 SMA-프로그램에서 투자대상의 복합성에 초점을 맞춘 MDA-프로그램과 맞춤형 서비스가 강조되는 UMA-프로그램으로 진화해 왔다.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시장에서 복합금융회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복합적인 내용과 맞춤형 구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합성, 효율성, 맞춤형 관점에서 국내 현황을 평가해 보면, 자산관리서비스가 본격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인 면인 개별성에 주목하고 있는바, 고객별 계좌가 개별적으로 관리되면 그 내용이나 구조에서 표준형 집합투자자와 차별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서비스로 간주된다. 하지만 논리적인 면에서 보거나 해외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자산관리서비스는 복합적인 내용과 맞춤형 구조를 기준으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내 금융소비자

국내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정립하고, 국내에서 자산관리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복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사항·맞춤형 구현을 위한 업무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가 누릴 수 있는 효용 차원에서 집합투자와는 명확히 차별화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요청된다는 점에서도 복합성과 맞춤형이라는 특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복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서 보험신탁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자산관리서비스의 기본적인 기능이 생애설계(고객의 소비수준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은행상품·금융투자상품·보험상품·연금상품이 하나의 신탁계약에서 복합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자산관리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사항으로서 개방형-판매플랫폼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과 업무절차 자동화를 개선사항으로 제안하였다. 스폰서가 관련 비용을 절감하여 대상고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면 이와 같은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적합성 원칙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폰서가 표준화된 투자정책서와 성과 보고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것은 이러한 수단을 통해 고객과 스폰서 양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적

합성 원칙 관련 분쟁이 쉽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어 온 복합적 내용과 맞춤형 구조에 주목하면 국내 자산관리서비스 시장은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보험신탁과 개방형-판매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스폰서는 업무절차 자동화, 표준화된 투자정책서와 성과보고기준 활용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경쟁회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차별적인 내용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금융제도실 | 조사보고서

038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물경제의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경제의 침체가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내수부진 지속과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감소로 실물부문 부실과 금융부문 부실 사이에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금융정책당국, 금융회사, 연구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신용경색 완화방안을 모색하고 국내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기업·가계 부문의 현황 파악을 통해 위기 심화가능성을 진단한 후, 현안과 제로서 공적보증기관이 기업자금조달 관련 신용위험을 인수함으로써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공적보증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위기 관리체계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요내용

먼저 부문별(금융·기업·가계) 위기 현황을 진단하면서 신용경색 심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금융부문의 경우, 경영 여건이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부실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신용경색을 완화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실질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기업부문의 경우,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이자상환 능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조선·건설·운송 등), 소규모 기업, 내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와 부실채권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의 레버리지 축소와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

다만, 전반적인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낮고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효과를 거둘 경우 기업부문의 부실이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계부문의 경우, 현재의 가계부실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득감소와 자산가치 하락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소득흐름의 확보를, 자산가치 변화에 민감한 중·고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자산가격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각각 계층별 목표 설정을 통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정책당국이 신용경색 완화와 경기침체 최소화를 위해 저금리·확대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향후 정책당국은 기준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은행의 부분적 국유화, 배드뱅크 확대, 가계소비 부양을 위한 유동성 일괄지급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향후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기업·가계·정부 부문별 현황파악을 통해 위기심화 가능성을 진단한 후, 단기 현안과제로서 효과적인 신용경색 완화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장기과제로서 향후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물부문 부실과 금융부문 부실 사이의 악순환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위험을 인수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자가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로 전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민간부문에 적체되어 있는 유동성이 기업부문으로 순환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민간 중심의 신용위험 전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공적보증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결론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기존 공적기관들(보증기금·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의 현행 기능을 확대하여 신용위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공적보증기관의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공적보증 펀드를 조성하고 동 펀드가 신용디폴트스왑(CDS: credit default swap)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책당국이 판단하여 신용경색 현상이 심각한 부문에 대해 은행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시 보증을 제공하면서, 무한대의 보증한도와 100%의 보증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현행 관행적 금융위기관리체계로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거시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기관리체계를 제도

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위기의 정의와 관리원칙을 법제화하고, 금융시스템위기 발생 여부를 판정하고 사후처리를 담당할 주체와 절차를 법에 규정하는 한편, 동 주체에 대한 책임, 업무범위, 권한 등을 사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 더불어 공적보증기관도 금융위기관리체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도적인 시사점도 도출하고 있다. 부동산금융과 관련해서는 호황기에 과도한 자산확대 경쟁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완할 것과, 호황기에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을 억제하기 위해 감독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구조화증권시장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금융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구조화증권 관련 감독규제가 보완되어야 한다.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이진면(연구위원) · 이정환(선임연구위원) · 최이섭(연구위원) · 정중영(동의대) · 최태영(부경대) | 조사보고서

040

연구배경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의 이슬람 지역 경제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오일머니의 유입 등에 힘입어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G7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대를 간신히 넘었겠지만 이슬람 지역, 특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6%대의 견고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오일머니에 의한 시설투자 증가가 이슬람 보험, 즉 타카풀(Takaful)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타카풀시장의 규모는 2005년 기준 43억달러 수준이지만, 연평균 약 20%의 성장을 거듭하여 2010년에는 약 1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 및 낮은 보험 침투도로 인해 AIG, Allianz, HSBC, 동경해상 HD 등 다국적 보험그룹의 타카풀시장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 역시 경영위험 분산과 수익원 다변화 그리고 신시장 개척 차원에서 타카풀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슬람 주요 국가들의 금융 및 보험 시장 현황과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하고, 다국적 보험회사의 진출사례들을 검토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의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의 조사대상 국가는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보험산업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동 5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과 동남아시아 2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순서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슬람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이슬람 금융의 개요 및 현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Ⅲ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타카풀의 개념, 운용구조, 사업모델 그리고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기술하였다. Ⅳ장에서는 상기 7개 국가들의 경제 및 금융환경과 더불어 타카풀시장 현황 및 관련 법률과 감독제도 등을 소개함으로써 신시장으로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였다. V장에서는 현재 타카풀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보험회사들의 진출과정, 현재까지의 성과와 중장기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VI장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타카풀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국내 보험회사들의 바람직한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

최근 세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는 금융부문이 실물부문과 분리되어 복잡한 파생상품들을 국제금융시장에 무분별하게 유통시킴으로써 금융버블을 키워온 데

헷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진 익(연구위원) · 김상수(산업은행) · 변귀영(모닝스타코리아 투자자문) · 유시용(중앙대) · 김종훈(한화증권) | 조사보고서

042

연구배경 조만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사모투자펀드 관련 규정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국내에서의 헷지펀드 설정이 허용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사모펀드와 헷지펀드가 통합되면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헷지펀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헷지펀드의 성과와 위험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분분한 상태이다. 기본적으로 헷지펀드가 적절히 활용되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와 같은 대형손실위험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정에서 헷지펀드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감독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헷지펀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와 금융회사는 헷지펀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향후 자산운용업의 핵심이 될 헷지펀드의 운용전략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시장에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주요내용 법률적으로 통용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헷지펀드의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SEC, 2004). 다만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운용재량권을 보유한 운용자에 의해 운용되는 집합적 투자기구가 헷지펀드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IOSCO(2003)에 따르면 헷지펀드에서는 ①차입(leverage), 공매도(short selling), 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하거나, ②일

부 유형의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편, ③사전에 약정된 시점에서만 환매가 가능하고, ④운용보수와 별도로 성과보수를 요구하는 투자기구로서, ⑤운용자 스스로가 함께 투자한다.

이와 같은 정의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헷지펀드는 뮤추얼펀드와 차별되는 몇 가지 제도적 특징을 갖는다.

첫째, 헷지펀드는 전문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적 투자기구인 만큼 감독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감독기관에 등록하고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뮤추얼펀드와 상이하다.

둘째, 헷지펀드는 차입·공매도·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것들의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뮤추얼펀드와 구별된다.

셋째, 헷지펀드는 비상장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일부 자산에만 집중하여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장 유가증권에의 투자가 제한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다변화해야 하는 뮤추얼펀드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처럼 뮤추얼펀드와 다른 특징을 갖는 헷지펀드 운용전략은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될 수 있다. 우선 시장방향성전략은 시장상황의 변화가 예상될 때 체계적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해당 변화가능성을 활용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헷지펀드는 유가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뮤추얼펀드와 유사하나, 그 운용전략이 뮤추얼펀드의 운용 전략과 차별되기 때문에 대체투자자산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특정 투자기구가 헷지펀드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운용 전략에 의해 판단되는 만큼 헷지펀드 투자 실행에 앞서 그 운용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기업구조조정전략은 유가증권의 발행기업과 관련하여 인수·합병이나 파산이 예상될 때 해당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활용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한편, 차익거래전략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2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해당 관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우 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활용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끝으로 투자기회활용전략은 투자기회의 변화가 예상될 때 투자자산 간 배분을 재조정함으로써 해당 변화가능성을 활용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결론 헷지펀드도 상장 유가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운용대상이 뮤추얼펀드와 차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헷지펀드가 대체투자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 운용전략이 전통적 투자기구인 뮤추얼펀드의 운용 전략과 차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어떤 투자기구가 헷지펀드인지 아니면 뮤추얼펀드인지 여부는 해당 투자기구가 활용할 수 있는 운용전략에 의해 판단된다. 또한 헷지펀드가 활용하는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운용전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헷지펀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나 금융회사라면 우선적으로 헷지펀드의 운용전략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구조화 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이민환(연구위원) · 임준환(농협 경제연구소) · 최 원(선임연구위원) | 2009 발간 예정 보고서

044

연구배경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위기발생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단은 미국 모기지시장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이었다.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위기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형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처인 도매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어 유동성 경색 현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글로벌 모기지업체와 투자은행의 연쇄파산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초기 선진국 금융시장에 국한되었던 금융위기가 2008년 9월 이후 기초 경제 여건이 건실한 신흥국들로 확산되어 일부 국가가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었다. 그리고 현재에는 금융위기가 대량실업, 소비 및 투자 급감 등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기 드문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S&L 위기, 아시아 통화위기, 일본의 자산버블 등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금융위기는 국지적인 성격이 강했고 이처럼 위기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된 예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금

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그 확산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 대응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러한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이번 금융위기는 모기지 대출의 구조화 금융상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06년 말 현재 미국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시장규모는 1.37조달러로 전체 모기지 대출 규모의 13.7%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증권화가 가속화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구조화 상품 등이 급신장하였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하락, 이자율 상승 등으로 모기지의 펀더멘탈이 악화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신용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대형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처인 도매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유동성 경색현상이 발생하였다. 이후 글로벌 국영 모기지업체인 GSE(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와 리먼브라더스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이어졌으며, 전 세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한편, 구조화 금융 또는 구조화 신용은 전통적 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효율적인 위험전가 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증권화와 신용파생상품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을 구조화 금융을 통한 불안정한 리스크 전이로 규정하고 구조화 금융의 특징 및 그 위험전파과정을 규명하는 한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금융정책과 국제 공조 상황을 설명하였다.

을 결합한 신종 금융상품이다. 이의 대표적인 상품은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인데 CDO는개별 채권(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이나 개별 대출(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의 풀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로 된 상품이다. 이때 발행되는 새로운 채권은 트랜치(tranche)라고 불리는 일종의 선순위/후순위 구조를 반영하여 투자자에게 다양한 위험-수익 구조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CDO는 준거자산인 담보자산군의 풀과 트랜칭 구조가 복잡해 정교한 모형을 통하지 않고는 가격결정 및 헷지를 통한 위험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은행이 소유한 SIV(structured investment vehicle)는 금융기관과 SIV 간의 관계가 현행 회계처리법상 금융기관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부외거래에 속해 있어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감독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용위험을 분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CDO의 경우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메자닌 트랜치(mezzanine tranche)와 지분 트랜치(equity tranche)를 집중적으로 구매하여 장기보유하는 전략을 취했다. 또한 CDO로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우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높은 레버리지와 담보자산의 낮은 유

동성, 그리고 시장가가 아닌 모형에 따른 담보가치 산정 등으로 인해 서브프라임 사태발생 이후 CDO의 담보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자금을 제공한 은행들로부터 계속되는 마진콜이 들어왔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이루어지면서 펀드의 유동성이 악화되자 금융기관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유동성을 가진 보유자산들을 우선적으로 처분하면서 전 세계 증시 폭락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금융위기에 대해 미국의 금융정책당국이 취한 정책적 대응은 정책금리의 인하와 양적완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었다. FRB는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초기 정책대응으로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다. 이후 금융시장 경색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FRB는 발권력을 통해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FRB는 기존 정책수단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FRB가 취한 최초의 정책은 연방은행 대출의 일종인 1차 신용의 기간화였다. 이로 인해 1차 신용의 대출기간은 최대 90일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자 FRB는 TAF(Term Auction Facility)를 도입하였다. 또한 TSLF(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PDCF(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등 다양한 유동성 공급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는 방안으로 FDIC가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을 하는 TLGP(Temporary Liquidity Guarantee Program) 등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유동성 부족문제가 신용위험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로 확대되면서 미재무부는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를 도입하여 재무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직접 매입하도록 하였고, CPP(Capital Purchase Program)에 따라 자본투입을 실시하였다.

리먼브러더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개되면서 국제적인 공조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2008년 10월 개최된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47개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결론 현재 금융위기는 실물부문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서 경제여건이 어디까지 악화될지 예측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근본요인이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변과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규제·감독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최형선(부연구위원) | 2009 발간 예정 보고서

047

연구배경 금융겸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금융기관들은 고객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의 판매와 더불어 지급결제기능을 통해 다양한 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금융겸업화 확산이라는 환경적 변화로 인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보고서는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다양한 참여모델을 소개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먼저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한 기본개념과 논의를 정리하였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주거래은행 계약을 통해 펌핑방식으로 지급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개별 은행의 지급결제 공동망에 그대로 의존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지급결제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 간 금융거래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은행공동망)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은행공동망) 참여 논의는 자본시장법의 추진과 함께 금융투자업이 지급결제기능 확보의 필요

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까지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사례는 서민금융기관이 유일했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과 금융투자업은 모두 서민금융기관과 같이 대표금융기관 방식을 통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표금융기관 방식의 경우 리스크 집중 문제 및 이와 관련한 업무감독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금융투자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식은 금융결제원에는 직접 참여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되, 중앙은행과의 결제업무는 대행 은행을 통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도 금융투자업과 동일한 방식의 참여유형을 제안하였다. 다만, 지급결제용 유동성에 있어서는 전액 분리계정 및 외부 예탁을 통해 결제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고, 예금업무의 침해가능성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보험산업도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액지급결제기능을 확보하고자 은행공동망에 참여함으로써 소액지급결제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겸업화 추세의 확산으로 보험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사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식에 대해서 국내외 사례를 비교·검토하였다. 우선, EU와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검토한 후, 국내사례인 서민금융기관과 금융투자업의 검토를 통해 국내의 사례에 대한 전체적인 비교 및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기능 참여와 관련하여 참여모델, 결제리스크, 유동성 계좌 등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다양한 논의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지급결제 수행방안을 분석 및 제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외사례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방식으로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2001년 캐나다에 이어 2009년 EU에서도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검토결과,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참여유형은 결제 및 청산 시스템에 있어서 캐나다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설정과 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고유자산과의 분리를 요구한 EU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급결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본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전액 외부 예탁방식이 국내외의 어떠한 지급결제체제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보고서 전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은행공동망의 직접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참여방식은 보험회사가 고객을 위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선택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도 보험료 거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 VAN망이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뱅크 등 다양한 방안을 선택하거나 혼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민간 VAN망의 경우 비용이 저렴할 수 있으나 인터넷 뱅킹을 위한 전자금융망의 활용

과 지로납부 등에 있어서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 뱅크의 경우 지점망이 없는 은행으로서 예금 수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지점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며, 지주회사 형태의 자회사가 아니면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 보험회사의 은행 공동망을 통한 소액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단순히 수수료 절감에 있다기보다는 종합금융서비스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점업화시대에 생존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소액지급결제를 위한 은행 공동망 참여가 막대한 IT 설비투자자와 금융결제원에 가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서비스의 범위와 편리성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회사마다 비용부담이나 세부 서비스별 필요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Chapter

3

보험 관련 제도의 선진화 연구

-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보험분쟁의 재판 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국제보험회계기준의 특성과 대응과제
-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의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기승도(전문연구위원) | 연구보고서

050

연구배경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규모도 크다. 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및 피해자의 심리적 손해까지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 비용이 2004년에 14조 5천억원으로 GDP의 1.86%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자동차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자가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FY2007 기준으로 10조원을 초과하였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중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보험금도 FY2002에 약 5조원에서 FY2007에 약 7조 2천억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규모를 추정하고, 사회적 비용의 유발요인을 규명하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자동차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손해보험회사에 집계된 자동차보험 통계를 활용하여 FY2007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보았다.

FY2007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총규모는 약 15조원으로 2007년 GDP 대비 약 1.61%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인 일본(0.83%)·영국(0.7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 자동차 운행이 많은 미국(2.0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자

동차 운행용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개인용이 약 8조원, 업무용이 약 4조원, 영업용이 약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용도별로 구분할 때,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은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용과 업무용(특히 개인소유)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원인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 통계를 활용한 회귀분석(OLS)을 시행하였다.

사회적 비용의 Index 분석결과 인적요인인 성·연령·운전경력 등은 모두 사회적 비용 발생을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 변수 중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사고발생률이 높고 사고심도는 낮으며, 사회적 비용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계층별 분석결과를 보면, 저연령계층(25세 이하 계층)은 사고빈도, 사고심도 및 사회적 비용이 주요 연령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연령계층(60세 이상)의 경우도 저연령계층과 유사하게 사회적 비용 수준이 주요 연령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전경력을 보면, 운전경력이 짧을수록 사고위험도와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 여부와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통법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였고, 현행 도로교통제도, 자동차보험제도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위반 유형별로 사고위험도 및 사회적 비용 발생위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할수록 사고발생률과 사회적 비용의 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사고를 억제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제도인 사고점수별 할인할증제도와 사고건수별 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사고건수별 제도가 사회적 위험도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초보운전자·저연령자·고령자의 자동차 사고 감소를 위해서 체험적 운전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험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들 사회적 비용 발생위험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이 체험적 운전교육제도이다. 영국에서는 Pass Plus라는 체험적 운전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Pass Plus 제도는 동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운전교육제도와 자동차보험제도를 연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행 운전교육제도를 체험적 운전교육제도로 개선하고, 운전교육제도와 연계된 자동차보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자에 대한 면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령자의 경우 주요 연령계층에 비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가 자동차 운행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확인 주기를 단축하거나, 고령자에 부합된 운전적성검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을 살인미수혐의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음주예방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동제한장치(ignition interlock)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센티브 기준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인센티브 기준 요율제도 중 하나는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초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사고 발생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제도 중에서 교통법규위반제도를 강화하고, 할인할증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법규위반제도는 평가대

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인할증제도의 경우는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의 전면적 도입에 논란이 있을 경우 소액사고를 대상으로 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째, 지역별 요율차등화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데 더 노력하도록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역별 요율차등화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분쟁의 재판 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오영수(선임연구위원) · 김경환(수석연구위원) · 이종욱(연구위원) | 정책보고서

053

연구배경 최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금융겸업화 등으로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보험상품도 복잡해지고, 이로 인하여 보험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보험의 특성상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품이 많은 데다가, 보험금 지급 시에도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소비자는 정작 자신이 기대한 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보험분쟁은 대부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보험소비자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절차로서 위상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비해 정보력, 전문성, 경제적 지위 등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이다. 다소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도 전형적인 피해구제책인 재판 이외에 이를 실제적으로 대체할 수 있고 보험소비자의 불만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보험분쟁에 있어서도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판 외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분쟁에 대한 ADR은 주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틀 속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그 처리실적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 그 원인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보험분쟁에 대한 ADR을 활성화하고 선진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먼저 우리나라의 분쟁해결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행 분쟁조정제도는 잘 이용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점, 보험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만이 유일한 접근수단인 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어 있어 독립적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위상이 미흡한 점, 그리고 금융분쟁조정 관련 규정이 매우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높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영국·호주·미국 및 일본의 보험ADR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여기에서는 각국의 보험분쟁 처리연혁과 제도개요 및 특징을 함께 기술함으로써 보험분쟁해결제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선진국은 최근 ADR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운영을 단일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독립성을 부여하는 한편 그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추세에 있다. 더불어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최근에는 규제당국이 개입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먼저 보험분쟁에 있어 분쟁조정과 대법원 판례 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분쟁조정이 재판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원에서의 소비자 승소율이 분쟁조정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대법원과 분쟁조정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양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사례 분석에서도 분쟁조정이 대법원 판례를 전적으로 따르고 있어 그 예측력이 높으며, 양자 간에는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ADR 제도의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고자 Shavell(1995)을 토대로한 경제학적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ADR 제도가 분쟁당사자들의 유인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합리적인 분쟁당사자들은 분쟁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므로, 당사자 간 정보교환을 촉진하거나 최종적인 분쟁결과를 예측하기 쉽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당사자 간 의견수렴을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오판비용이 미미한 경우에는 구속적 ADR이나 사전적 ADR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검토 및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소인 조정기간이나 조정위원의 수 등을 완화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역할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객관적인 분쟁조정기구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순수한 준사법적 심사·의결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송 전 분쟁조정제도를 의무화하여 양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능률적이고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넷째, 분쟁조정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협상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보험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제기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의 중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효율을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법원의 재판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재제도를 전문 보험소비자에 한하여 공식적인 보험분쟁 해결제도의 하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보험 분야의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재판 외의 대안을 제시하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분쟁해결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보험분쟁사례를 분석하여 분쟁조정과 법원판결 간의 차이점 및 분쟁조정 신뢰성을 검증하며,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여 보험분쟁의 재판 외적 해결제도를 활성화하고 선진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했다.

였다. 또한 ADR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보험업계 모두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해하고, 당사자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보험의 단체성,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조정이나 중재 등 ADR 제도는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지 재판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이민환(연구위원) · 전선애(중앙대) · 최 원(선임연구원) | 조사보고서

056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초래한 복합금융그룹의 감독 및 내부감시 시스템에 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감독당국의 규제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단일 금융회사에 비해 부실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복합금융그룹은 이에 속한 자회사 간에 규제차익이 존재하면 규제가 미흡한 부문을 통해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차단벽이 존재하는 경우,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평판위험 등이 존재함으로써 그룹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러한 위험으로 초래되는 시스템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제·감독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복합금융그룹은 금융업무에 대한 규제완화가 일찍부터 이루어진 영국이나 은행 본체에서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이 가능한 유니버설뱅크제도가 보급된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반화되었고, 이후 미국과 일본 등 기타 국가까지 확대되었다. 복합금융그룹의 형성이 일반화된 것에 대해 G10은 글로벌화 및 규제완화의 진전, IT와 금융기술의 발달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처럼 복합금융그룹이 일반화되면서 그 업무의 복잡성 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감독업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유럽 등을 중심으로

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금융그룹을 둘러싼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복합금융그룹은 '공동지배하에 있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집단으로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그룹'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금융그룹은 그 유형에 따라 금융지주그룹, 모회사그룹, 기업집단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복합금융그룹이 형성되는 주요 이유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들 수 있다.

대형화·복합화에 따라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면 매출향상 및 평균비용 감소 등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높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익효율성이 제고되어 외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IT 시설 구축을 통한 설비투자의 감소, 계열사 또는 자회사 간 정보공유, 공동 마케팅 및 판매가 가능하므로 일정 수준의 규모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여 리스크의 분산이 용이하다. 지정학적 또는 금융권역별 상품의 조합을 통하여 자산구성 다양화가 가능하므로 수익성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소수의 대형금융회사 구조로 개편될 경우, 시장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복합금융그룹 고유의 리스크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필요자본을 도출하는 한편, 복합금융그룹 감독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에 의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되어 금융회사 간 위험전염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복합금융그룹화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시스템리스크의 증가이다. 복합금융그룹은 실질적인 업종들을 포함한 거대조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발생한 경영환경 악화가 여러 분야의 시장으로 확대되어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금융권별 규제가 개별 감독규제를 채용하는 데 따른 규제차익의 문제이다. 동일한 리스크에 대해서 필요요구 자본량이 상이하면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이를 활용한 이익추구 행위가 발생한다. 또 금융상품의 복합화 등이 이루어지고 글로벌한 전개가 보편화됨에 따라 감독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품 및 회사가 등장하여 이를 활용한 규제차익이 발생한다.

셋째, 금융기관의 부실이 그룹 전체 및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전염효과의 발생이다.

넷째, 동일한 자본이 복수로 계상되어 자기자본이 과대평가되는 double gearing의 문제이다. 이는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을 산출할 때, 자회사 간 출자분을 상쇄하지 않고 단순 합산하거나 한 자회사가 레버리지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다른 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그룹의 자본량이 실제 자본량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별·채권자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여 부실발생 시 처리가 지연되고 그 결과 정리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구별·국가별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감독기구 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된 감독기준을 마련하여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은행·증권·보험 등의 자본금 규제방법이 상이한 데 따른 차익을 없애기 위해 자본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부실이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리스크 집중 및 그룹 내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 EU 은행지침의 경우 은행·증권의 익스포저를 외부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25%, 내부의 경우에는 10%로 제한하고 10%를 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넷째, double gearing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Basel II의 금융그룹 규제자본 접근법, 경제적 자본 접근법, Joint Forum의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 접근법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자본 산출법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규제당국은 위기 시 복합금융그룹이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각국별로,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정리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통합감독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감독기구가 분리된 국가에 비해 금융환경 악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은행, 보험복합금융그룹의 경우 대부분 주력 금융회사의 비중이 높아 주력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룹 전체의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계열금융사에 대한 출자 및 상호보증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위험전이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볼 수 있듯이 금융지주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복합금융그룹에 있어서도 위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 자회사는 연결 BIS 기준을 채용하고 있고, 비은행 자회사는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운용하고 있으나, 복합금융그룹 전체를 포괄하는 연결감독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현행 금융지주회사에서도 보험 자회사에 대한 연결기준을 채용하고 있지 않아 엄밀한 의미에서 복합금융그룹의 전체 위험이 고려되지 못하므로 이를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럽보험연금 감독자위원회가 Solvency II 도입을 위해 실시한 제3, 4차 계량 영향평가에서 제안하고 있는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등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회사 역시 유럽 보험회사처럼 리스크 관리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시키고, 또한 보험회사의 자본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olvency II는 이와 동시에 보험회사의 수익 및 자본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재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에 더 많은 취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Solvency II의 추진배경, 리스크 평가모형과 측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더 나아가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리스크 평가모형뿐만 아니라 내부모형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자본구조를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 및 감독기관은 Solvency II 등의 제도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보험회계기준의 특성과 대응과제

김해식(전문연구위원) | 2009 발간 예정 보고서

061

연구배경 유럽 일부를 대표하는 회계기준에 불과했던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2012년에는 전 세계 공통의 재무회계기준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도 현행 국내회계기준의 틀을 유지하되 IFRS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국내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K-IFRS)하는 방식(full adoption)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IFRS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이다.

현재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는 회계정보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한다는 목적과 모든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틀에서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부문의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즉 보험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부채측정과 관련하여 보험권과 회계제정기구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접근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8년의 보험회계현안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대다수 논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IASB가 일반금융회계기준의 시행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제정한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4, 1단계 기준)에는 본래 의도했던 보험부채의 평가부문을 담지 못하고 2단계 작업으로 미룬 상태다. 더구나 보험부채의 평가를 다루는 2단계 작업도 2010년

까지 최종 보고서가 제시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편, 감독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규제는 보험부채의 평가를 담은 회계정보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IASB가 제시한 공정가치의 틀은 국제보험회계기준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먼저 보험부채를 둘러싼 이슈를 중심으로 IFRS 4의 확정된 내용(1단계)과 아직 논의 중인 주요 내용(2단계)에 대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이 감독당국의 자기자본규제의 맥락에서 어떻게 기능하며,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자산-부채 관리 관점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보고 보험사업의 주요 영역에 대한 IFRS 4의 영향을 전망해 본다.

주요내용 IASB는 보험계약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로 본다. 또한 현재가치의 속성을 시장에 신계약을 판매할 경우 산출되는 유입가치가 아니라 기존 보유계약을 판매할 경우 산출되는 유출가치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을 지닌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시장의 이자율로 할인하며, 보험회사의 기대가 아닌 시장의 기대와 일치하는 리스크 마진을 보험부채의 현재가치에 더하

여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익은 보험계약 판매와 동시에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 유출가치적용에 대한 보험권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자산운용 수익률이 아닌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현재보다 보험부채의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구나 보장한 리스크의 소멸과 함께 이익을 인식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판매와 동시에 이익을 인식하는 손익구조는 당기순이익과 자본의 변동성을 수반할 것이다. 리스크 마진을 설정하는 데도 계약군이 아닌 개별 계약을 살핀다면 포트폴리오 내의 리스크 분산 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부채 총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의 논의 경과를 볼 때, IASB는 보험부채의 현금흐름과 기초율에 대한 기존 입장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IFRS 4의 2단계 논의 역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IFRS와 Solvency II는 모두 ‘국제적 조화’라는 틀 위에서 원칙 중심의 기준 및 감독을 표방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준의 마련이 전제되지 않으면 작동하기 어려운 시스템이고, 세부규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시장 작동체계와 전혀 다른 점이다.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4)은 공정가치라는 공통 평가 척도를 가지고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금융회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 한편, 보험감독회계가 은행권의 Basel II에 상응하는 Solvency II에 따라 재편될 준비를 하고 있다. IFRS 4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감독당국의 리스크 감독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제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결론 2011년부터 보험회사는 IFRS 4(1단계)를 적용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IFRS의 적용배제 또는 중소기업을 위한 IFRS 축소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2005년 이미 IFRS를 적용한 EU 보험회사들의 경험과 국내 조사를 고려할 때, IFRS 4의 1단계 적용이 보험회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회계기준의 변화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운영리스크는 최소한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IFRS 4는 다르다. 2단계 IFRS 4의 영향을 현재로서는 계량화하기 힘들지만, 보험부채의 평가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점은 보험회사의 영업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IFRS 4가 보험회사의 관리회계와 감독당국의 감독 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평가와 경제적 자본의 산출을 전사적 리스크 관리라는 관리회계체계에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으로서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평가와 유출가치를 적용한 IFRS 4의 보험부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는 측면이 있으나, 안정적 지급여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감독회계가 제공해 온 지급여력에 대한 정보수요를 IFRS 4가 제공하는 변동성이 큰 정보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Solvency II의 맥락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의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조용운(연구위원) · 김세환(수석연구위원) · 김세중(연구위원) | 2009 발간 예정 보고서

063

연구배경 우리나라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장기손해보험만을 보더라도 위험보험료 기준으로 FY2005에 5천 128억원이던 것이 FY2007에 8천 613억원을 기록하여 규모면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규모의 성장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와 자본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국제보험계리사회(IAA)는 2004년 「A Global Framework for Insurer Solvency Assessment」를 통해 위험기준 지급여력 평가구조를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리스크 종류를 정교하게 분류하면서 각 리스크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자본량 산출모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본량 산출방법론을 제시하며, 표준모형법과 내부모형법을 소개하고 있다. 2012년 도입 준비 중인 EU의 Solvency II의 주요 특징을 보면 IAA와 같이 건강보험은 별도로 다루면서 표준모형뿐만 아니라 내부모형이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스크량에 상응하는 자본량을 산출하기 위해 국제단체 및 기구들이 내부모형인증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대한 리스크량을 측정하는 모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9년 4월에 RBC(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RBC제도는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첫째, RBC제도는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그리고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어서, 동일한 건강보험상품 일지라도 판매처에 따라서 다른 리스크 계수가 적용된다. 둘째, RBC제도는 모든 보험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표준모형으로서, 보수적으로 산정된 자기자본량이 일부 보험회사에게는 과도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자본량 산출모형에 근거하여 산출된 리스크 계수를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실손형 민영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증함으로써 내부모형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실손형 의료비보장보험의 보험가격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했다. 보험가격리스크를 변동성리스크와 불확실성리스크로 나누어 이론적 모형을 검토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변동성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서 총손해액 분포가 복합포아송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NPA(normal power approximation)을 이용하여 TVaR을 계산하였다. 불확실성리스크 측정방법으로 보수적으로 설정된 시뮬레이션 방법, 로그노말분포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방법, 보수성을 완화시킨 푸리에 변환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RBC제도는 민영건강보험을 위한 별도의 리스크 계수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일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계수를 적용한다. 민영건강보험을 위한 리스크 계수를 설정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위한 '내부모형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동일한 리스크 측정모형이 모든 보험회사에게 적용될 경우 규제의 공평성이 어느 정도 저해되는지를 살펴보고자 대형 4개사와 중소형사로 구분된 손해보험회사의 실손형 장기건강보험 실적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리스크 계수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NPA를 이용한 변동성리스크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대형 4개사의 경우 리스크 계수가 0.00395이며, 중소형사의 경우 0.0072이었다. 독립적으로 가입된 피보험자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평균적인 보험금 청구액의 변동성이 감소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불확실성리스크에 대해서는 모든 모형에서 대형 4개사의 리스크 계수가 중소형사의 그것보다 작게 산출되었다. 이는 리스크 분산효과가 모형에 적절히 반영된 결과로서, 요구자본을 산출하기 위해 모든 보험회사에게 동일한 리스크 계수를 사용하면 요구자본에 대한 규제의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것이 바람직하다.

변동성리스크와 불확실성리스크에 대해서 대형 4개사의 리스크 계수 측정 결과가 중소형사보다 작게 산출되었다. 동일 계수를 모든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시 규제의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내부모형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공평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결론 규제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 민영건강보험을 위한 리스크 측정 및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리스크 계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실손형 건강보험상품과 생명보험회사의 그것은 보장제외항목이나 환자본인부담액 등 보장내용이 다르므로 이를 감안하여 생·손보 간 상이한 리스크 계수를 적용하는

4

Chapter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회 확대 연구

-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 방안
-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탄소배출권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 퇴직연금의 급여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글로벌화 요인 분석 및 정책방향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 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김동겸(연구원) | 연구보고서

066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대책 마련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은퇴기간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단축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근로자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외견상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부담 가중, 개인연금의 저조한 세대가입률, 퇴직연금제도의 미정착 등으로 선진국과 같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적극 해소하면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비교한 후, 현행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사적연금

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소득 및 소비행태를 통해 근로자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추정함과 더불어 최근과 같은 노동여건 및 연금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제도가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대체율 추정결과와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보장기능의 제고라는 큰 틀하에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우리나라 근로자의 적정 및 실질 소득대체율 추정을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를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인구고령화와 고령화리스크의 발생구조, 고령화 대비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기준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방안을 모색하고자 근로자의 소비행태를 통해 적정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더불어 현행 노동시장의 여건 및 연금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적연금제도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도 운용상 나타나는 제반 문제를 공적연금 재정 위기 구조화, 공적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취약,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계성 미흡, 사적연금의 역할 및 기능한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책과제를 시사점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OECD, World Bank, ILO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모형을 살펴본 후에 OECD 주요국의 연금제도 운용현황,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공사연금의 역할분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특징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에 대비하여 OECD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방향 및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 등을 활용하여 가계소비함수를 도출한 후 이를 기초로 적정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또한 평균소득 근로자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지를 실질 소득대체율 추정을 통해 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 효과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및 역할 제고 차원에서 공적연금의 시스템적 개선 필요성 및 개선모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결론 인구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OECD 주요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는 반면, 시장기능의 원리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역할은 점점 증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시켜 고령화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낮추고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효과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금소득(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의한 실질 소득대체율이 55.2% 수준으로 근로자의 적정 소득대체율(61~6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연금소득에 의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퇴직연금 중간 정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 또한 3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28.2%(가입기간 30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OECD 및 ILO 기준과 비교해 볼 경우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여건하에서는 퇴직연금을 통해 30%대의 소득대체율을 실현하는 데는 실질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한 연금제도의 파라메타적 개선과 더불어 공사연금 간의 역할분담체계와 같은 시스템적 개선이 고령화리스크 대응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연금제도의 파라메타적 개선 차원에서 볼 때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①퇴직급부체계의 개선, ②연금세제체계의 개선, ③적립금 운용체계의 개선, ④연금지급 보장체계의 개선, ⑤적립금 운용형태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제도의 경우 개인연금 운용방법의 다양화, 개인연금 이전제도의 보완, 저소득계층 연금가입에 대한 실질수익률 향상을 위한 소득공제방식의 재검토 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연금제도의 시스템적 개선 차원에서 볼 때 적절한 공사연금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연금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즉,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특수직역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하에서 ①다층보장체계의 통합연계, ②적용 제외를 통한 공사연금연계, ③국민연금소득비례부분의 완전대체 등과 같은 공사연금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감소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적용 제외를 통한 공사연금 방안보다는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을 퇴직연금이 완전 대체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령화시대에 공사연금 간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

한 정부·기업·근로자 모두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년조정 등 근로자의 연금가입 기간과 관련된 노동정책의 변화를 통해 사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제고하도록 하고, 은퇴자의 재고용 등이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한상용(연구위원) | 경영보고서

069

연구배경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주체들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설비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직접적인 재물손해(direct loss)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사고로 인해 공장이 가동되지 못한 경우 생산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과 계속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 부담 등의 기업휴지리스크(business interruption risk)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등의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에 화재 등의 사고가 나면 재물손실부분은 복구가 되지만, 가동 중단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기업휴지리스크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원자재의 공급·조립·완성·판매 등으로 분할되면서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경영의 글로벌화는 그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기업휴지리스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정부·보험회사가 상호 균형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기준(enterprise risk management standard)이나 사업연속성 기준(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을 제정하고 이를 기업들에게 제시하여 기업휴지리스크 관리를 촉진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기업휴지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리

스크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리스크 전가수단으로 기업휴지보험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선진국들과는 달리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보험가입 수요는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다. 이는 국내 기업휴지보험 도입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 기업휴지보험은 196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에 따른 외국의 요청에 의거하여 영국이나 미국의 보험상품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일본 상품을 벤치마킹한 기업휴지보험이 도입된 이후 국내기업들의 수요나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외국 상품을 답습한 기업휴지보험상품이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다. 기업휴지보험 가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미미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사건에서 전체 피해액의 1/3이 기업휴지보험금으로 밝혀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하여는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을 포함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휴지리스크 관리의 필요성과 국내의 기업휴지보험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후, 국내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기업휴지보험은 공장의 제조장치나 설비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생산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재물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중단 기간 동안 생산감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축소분과 종업원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와 같은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동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공장설비 등에 화재 등의 사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업휴지리스크에의 노출 위험도를 영업레버리지도로 측정해 보았을 때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중화학공업보다는 경공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종이 제조업에 비해 기업휴지리스크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휴지보험이 위에서 언급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10년간 상장기업 중 화재사고로 인한 손실발생 등 재해사실을 공시한 4개 기업을 조사하여 비교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화재보험과 기업휴지보험을 같이 가입한 기업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영업이익률, ROE, 부채비율 등 재무성과에 있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휴지보험이 기업의 사업연속성 관리에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보험회사의 영업부서를 통한 설문 조사와 500개 상장기업에 대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기업들의 경우 21%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입 이유로는 리스크 관리 필요의 인식, 주주나 외국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 보험사고의 경험 등이 있다. 또한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업휴지 손실발생의 낮은 가능성과 높은 보험료 등을 꼽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휴지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기업휴지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독립적인 상품 또는 다른 담보위험과 연계한 복합담보상품으로 제공해야 한다. 1960년대에 도입된 국내 기업휴지보험상품은 보험상품으로서 수요가 없을 뿐더러 현재의 국내 산업구조가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유사한 구조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들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인 높은 보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휴지보험 가입률을 제고하여 국내 통계에 기초한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 손보사들의 담보력을 더욱 확대하여 해외 재보험자의 보험료 산출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다양한 보험료 차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촉진을 위한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설명이나 세미나 개최, 리스크 관리 컨설팅이나 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들이 향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내외 기업휴지보험의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휴지보험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휴지보험 활성화되는 경우 국내 기업들의 사업연속성 관리의 제고와 손해보험회사들의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규격과 사업연속성 관리규격을 제시하여 기업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자연재해 중심으로 시행 중에 있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화재, 폭발 등과 같은 위험을 사업연속성 관리의 대상 위험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부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휴지리스크는 무형의 재무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손해보험의 전문 언더라이터 양성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 언더라이터 자격증제도(CPCU, CII)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결론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은 기업들 간에 서로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과도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기업의 사업연속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영국·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기업휴지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사업연속성 관리에 기업휴지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시하며, 기업휴지보험이 기업의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률은 현재 아주 미약한 수준에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0.05%, 재산종합보험의 경우에는 9.4%로 보험료는 260억원 규모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향후 국내 기업들이 기업휴지보험에 100% 가입할 경우를 추정해 보았을 때 기업휴지보험료는 개략적으로 5천억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성화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사회적 역할이 가계성리스크 관리에서 기업성리스크 관리 또는 국가경제리스크 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배출권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진 익(연구위원) · 유시용(중앙대) · 이경아(연구원) | 경영보고서

072

연구배경 우리가 생존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대기권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의 증가는 기후변화를 유발한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국내에서도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의 변화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UN의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를 마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상품이 도입되면서 탄소금융시장이 조성되었다.

조만간 국내에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과 탄소금융시장 형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탄소배출권 금융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은 배출권 가격의 효율적 형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탄소배출권 가격결정 원리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금융상품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내용 EU-ETS를 참조하여 탄소배출권 가격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기시점에서의 배출권 가격은 0이나 벌금수준으로 수렴한다. 탄소배출권이 초과공급된 상황(배출권 발행량이 할당량 초과 배출량보다 큰 상황)에서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0이 되는 반면, 탄소배출권에 대해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벌금수준과 같아진다.

둘째, 만기 이전에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0과 벌금수준 사이에서 형성된다. 만기 시점에서 실현될 배출권 초과수요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미래수익에 대한 기대치 주변에서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셋째,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높은 변동성은 불확실한 수요와 비탄력적인 공급에서 기인한다. 수요 측면에서 볼 때, 배출권 가격은 경제 내의 전체 배출량에 대한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 만기 이전에는 전체 배출량 관련 정보의 정확성이 낮을 만큼 배출권의 내재가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불확실한 정보에 따른 가격 변동성은 감소된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탄소배출권 공급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특히 만기가 다가올수록 탄소배출권 공급의 조정이 불가능해지므로, 탄소배출권 수요자는 무한 비탄력적인 공급함수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탄소배출권 가격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책당국은 제도 설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필요 시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책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본방향은 탄소배출권 공급곡선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투자자가 위험부담을 기피하여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 가격결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탄소배출권 금융상품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에 탄소배출권 시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보증할 민영보증보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배출권 발행량이 관련 정책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바, 정책 일관성이 결여되면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배출권 거래시장 조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만기에 발생할 수익의 기대치(발생할 수 있는 수익 수준에 각 수준별 발생확률을 곱한 값들을 합산한 것)이다. 그런데 배출권의 만기 수익구조는 2개의 콜옵션으로 구성된 옵션포트폴리오의 수익구조와 동일하다. 따라서 미래수익의 확률분포에 대한 일정한 가정 하에서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활용함으로써 탄소배출권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탄소배출권이 옵션포트폴리오로 복제될 수 있는 만큼, 배출권 거래 시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보증(혹은 이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옵션)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내재된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려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탄소배출권 금융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배출권 가격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탄소배출권 수요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며, 공급도 가격 변동에 대해 비탄

력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을 보유하면 옵션포트폴리오를 보유할 때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는 바, 해당 위험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에 탄소배출권 시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거래이행을 보증하고 발생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민영보증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퇴직연금의 급여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이경희(전문연구위원) | 정책보고서

074

연구배경

선진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비중이 증가하고, 퇴직연금제도가 성숙하여 본격적인 수급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급여지급단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지급단계 측면에서 리스크 부담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간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법규상 일시금방식으로 퇴직자산을 제한 없이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 대한 일정 조건을 만족하고 가입자가 연금방식을 원할 경우에는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자산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가능한 급여지급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본 후 주요국의 규제 현황을 소개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급여지급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일시금·연금·프로그램 인출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구조를 소개하고,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영국·미국·칠레·호주의 사례를 살펴본다. 실증분석으로서 우리나라의 일시금방식에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특히 장수리스크 측면에서 일시금방식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지급 단계에서는 투자리스크, 장수리스크, 재무행태리

스크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이런 리스크 측면에서 볼 때 각 국에서 지급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시금·연금·프로그램 인출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시금은 이들 세 가지 리스크가 가장 높은 데 비해 전통적인 확정연금은 가장 낮고, 프로그램 인출은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근로기간 동안 축적한 연금자산을 지급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동화시키는가에 대한 국가별 현황은 매우 상이하다. 영국의 경우 확정기여형제도에 대해서도 연금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칠레의 경우에는 민영연금이 공적연금을 완전 대체하였기 때문에 지급방식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해서 연금지급이 가장 우세하다.

이와 같은 국가별 지급방식의 차이는 정부의 철학과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측면이 높다고 보아진다. 규제당국은 지급방식 제한을 통해 퇴직자와 보험회사들의 인센티브 및 선택행위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퇴직자들의 지급옵션 선택결과를 분석해 보면 규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종신연금을 의무화한 영국과 일시금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칠레의 경우에는 연금 선택 비율이 압도적인 반면, 지급방식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일시금 선택이 주도적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각 국 정부는 퇴직자산의

일시금방식은 연금에 비해 생존 기간 중 자산이 부족해지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분석결과, 인출 금액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금자산 부족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연금자산 부족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금이나 프로그램 인출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일시금 인출을 제한하고 프로그램 인출이나 연금방식과 같이 소득흐름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연금방식과 비교할 때 일시금방식은 투자리스크 및 장수리스크를 퇴직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생존 기간 중에 퇴직자산이 소진될 수 있는 부족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퇴직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자산을 활용하여 종신연금 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한다고 가정하고 부족리스크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일시금방식의 자산부족 확률은 자산배분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동한다. 100%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부족 확률이 30%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적절한 분산투자를 할 경우에는 6%대 수준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 부족 확률에 대한 용인 수준을 10%로 고정시킬 경우 55세 연령 및 60세 연령의 일부 포트폴리오에서만 일시금방식의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방식과 비교할 때 일시금방식에서의 특정 포트폴리오는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산부족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 경우 벤치마크 연금 연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족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높은 계층일수록 일시금방식의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결론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다양한 지급방식과 주요국의 현황에 대해 살

펴보고,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기대여명을 활용하여 일시금방식에 내재된 리스크를 연금방식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시금방식은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리스크 수준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시금방식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인출 및 연금과 같은 소득흐름방식과 일시금방식을 적절히 결합시킬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결합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1안은 프로그램 인출방식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일시금 및 연금방식의 절충형으로서 일시금에 비해 투자리스크와 장수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설계방식에 따라 유연한 소득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데 적합하다.

제2안은 일시금(프로그램 인출)과 연금을 혼합한 방식이다. 먼저 공적연금과 연계하여 적정 소득 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최저의무연금을 검토해야 한다. 전체 퇴직자산에서 최저의무연금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산을 차감한 후 나머지 퇴직자산은 일시금 수령이나 프로그램 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제3안은 지급 옵션의 기본형을 퇴직 시점에서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하도록 하지 않고, 퇴직자가 일정 기간(2년) 동안 프로그램 인출 및 연금과 같은 소득흐름방식을 체험한 후 최종적으로 선택하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 및 사용자가 일시금 이외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가능한 지급방식을 제시하고,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하위 법규에서 지급방식 관련 구체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 및 운영(자산)관리 계약에 일시금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인출이나 연금과 같은 일시금 이외의 지급방식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퇴직연금사업자와 상관없이 가입자가 일시금 이외의 형태로 수급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지급받거나,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금방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개인연금을 구입한 경우에도 연금세제를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퇴직자산을 활용하여 일시납 개인연금을 구입할 경우에는 가입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납 보험료 규모 및 투자수익을 감안하여 현행 예금보호한도(5천만원)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례 없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층의 기대여명 증가와 짧은 근로기간으로 인해 근로소득 없이 생존해야 하는 퇴직 이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지급 방식에 대한 국제적 현황과 논의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바람직한 지급방식과 정책에 대

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지급방식은 어느 특정 형태로 한정할 수는 없고,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일시금·프로그램 인출·연금을 배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다각화시킬 수 있고, 재무리스크 및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긴급 자금수요 및 상속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최영목(부연구위원) · 최 원(선임연구위원) | 2009 발간 예정 보고서

077

연구배경 지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 보험회사들이 도산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쳤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은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하강 압력이 거세지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형사의 고성장 전략이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라면 영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한계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 경영활동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안정성 위주일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잠식당할 수 있으며,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은 성장전략을 실행할 경우 영업환경이 악화되면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성장기업의 조건에 대해 설명한 Charan(2005)은 기업의 바람직한 성장을 ‘수익성을 동반한 성장’이라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 리스크를 낮춤으로써 지속가능한 매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매출과 수익성 양쪽에서 바람직한 성장을 나타냄으로써 동종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

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생명보험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수익성이 수반된 성장기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회사는 이를 위한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수익성과 성장성의 조화를 통한 성장구조, 즉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과제의 모색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Higgins(1977), Ross et al.(1999), Olson and Pagano(2005) 등에서 사용된 지속가능성장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률을 산출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실제성장률 수준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소 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형 및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실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속가능성장률보다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회사가 많은 과대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제성장률과 지속가능성장률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실제성장률이 지속가능성장률보다

낮고 실제성장률과 지속가능성장률의 차이가 작은 회사가 성장률과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생명보험회사의 실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설명변수로 하는 패널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 기업규모 · 사망보험비중 · 단체보험비중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반면, 일시납 보험비중 · 실효해약률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다섯째, 과대성장 회사는 적정성장률을 기록하는 회사에 비해 보험영업활동에서 개선점이 많고, 과소성장을 기록하는 회사는 적정성장률을 기록하는 회사에 비해 투자영업활동에서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대성장회사들의 경우 목표성장률을 지속가능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상품 포트폴리오(사망보험비중 · 일시납보험비중 · 단체보험비중)와 고객관리(실효해약률)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지속가능한 성장기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략수립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대성장이 문제가 되는 보험회사는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보험영업부문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과대성장 회사는 수익성 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고, 과소성장 회사는 재원마련을 위한 자금조달방법의 다원화,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진출 등과 같은 방안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고려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들 회사는 기본적으로 매출성장을 위해서 수익성이 희생되는 수준의 저가격 책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 회사는 현재보다 사망보험과 단체보험의 판매비중을 높여 안정적 성장기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일시납 위주로 판매되어 해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성 보험의 비중을 축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회사는 신규 고객확보를 통한 매출 성장에 집착하기보다는 해약률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기존 고객과의 관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과대성장을 지속하는 회사는 적정성장을 지속하는 회사에 비해 현금보유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유동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현금보유비중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과소성장을 지속하는 회사는 적정성장을 지속하는 회사들에 비해 보험영업부문에서 사망보험의 판매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이외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 회사는 성장 및 재무건전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자금조달방법의 다원화,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진출, 신성장동력의 발굴 등과 같은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산업 글로벌화 요인 분석 및 정책방향

서대교(부연구위원) · 오영수(선임연구위원) · 김영진(연구위원) | 2009 발간 예정 보고서

079

연구배경 FTA의 확산 및 WTO 체제로 인한 무역장벽의 해체, 국가 간 자본 및 기술 이동의 원활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세계경제는 하나의 통합된 방향, 즉 경제주체들이 매우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갖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험, 증권 및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글로벌화는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외국의 글로벌 보험사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여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진출의 대부분을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시장 공략에 대한 중요성을 비교적 최근 들어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 금융시장 및 국내시장의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정부는 2~3년 전부터 보험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07년 10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는데, 2007년 중점 추진과제로 외국 자회사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및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적극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정과 동북

아 금융허브 전략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 금융감독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화 정책 중의 하나이다. 금융위원회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 금융당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제 금융기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보험산업 글로벌화 정책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글로벌화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촉진요인과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한 기타 선진국의 사례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분석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국가의 글로벌화 정도를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국내 또는 EU 회원국 내 보험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보험산업 글로벌화 정책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선진국의 글로벌화 현황 및 지원사례를 분석하여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기 위해 미국과 EU에서 행해진 정책적 지원내용을 살펴보았다. 글로벌화 정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보험수출입, 해외 직접투자, 해외 보험사의 국내시장 점유율, 국내 보험사의 국제화 정도 등의 통계자료를 조사하였다. 정책적 지원내용은 주요 관련 당국이 자국 보험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최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는 실증적 접근방법으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금융 FDI 결정요인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해외 직접투자 행태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밝혀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7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해 온 국내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조사 대상국은 자료수집이 가능한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례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사례 및 정책지원 분석결과,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들은 보험산업의 글로벌화와 관련된 이슈 해결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주요국의 관련 당국과 규제회담을 갖거나 주요 국제금융 규제기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자국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보험시장의 잠재적 수요가 높으며 보험침투도가 높은 국가로 진출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경쟁법 체계는 아직 미비한, 즉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 경험이 많은 보험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진출 대상국의 규제에 대한 이해와 영향력의 정도,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경험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대상국의 진입 및 퇴출 분야 규제와 더불어 영업활동과 관련한 제반 분야에 대한 규제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기구인 OECD와 IAI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OECD와 IAIS를 통한 신흥 보험성장국의 시장개방 및 규제제도 선진화 작업은 향후 국내 보험회사들의 신흥 보험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미국과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투자 대상국과의 보험회담 등을 통하여 투자 대상국의 보험시장구조 및 규제와 관련된 중요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투자 대상국과의 쌍무적 협력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Chapter 5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연구

-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 분석
-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기관 성과 평가체계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 분석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장동식(수석연구위원) | 조사보고서

082

연구배경

최근 생명보험시장은 가격자유화, 금융업종 간 영역붕괴 등에 따라 보험회사 간 경쟁뿐만 아니라 타 금융권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상품의 질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노력 등을 통해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및 해약을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및 해약은 생명보험상품의 질이나 서비스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효력상실 및 해약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금흐름방식의 가격산출체계 도입, 국제보험회계 도입 등과 같은 제도변화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해약행동이 생명보험사의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및 해약 실태와 결정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생명보험계약자가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도 보험계약 유지 및 해약을 결정하므로 생명보험계약자의 해약행동이 유사합리적 행동임을 보이고, 효력상실 · 해약률의 변화 추이와 실업률 · 시장이자율 등의 거시경제변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효력상실 · 해약률이 거시경제변수(예, 실업률 · 시장이자율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금리확정형 보장성 보험과 금리연동형 연금에 대해 효력상실 · 해약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보험자의 특성은 효력상실 · 해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확정형 보장성 보험은 금리연동형 연금과 달리 남자와 여자의 효력상실 · 해약률 수준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금리연동형 연금과 금리확정형 보장성 보험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수준의 효력상실 · 해약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리연동형 연금은 60세 이상의 효력상실 · 해약률이 40~49세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리확정형 보장성 보험은 60세 이상의 효력상실 · 해약률이 40~49세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보험자가 성 · 연령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제공하는 보장을 다르게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보험계약의 특성은 효력상실 · 해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연동형 연금과 금리확정형 보장성 보험 모두 무배당보다 유배당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효력상실 · 해약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리연동형 연금과 금리확정형 보장성 보험 모두 분할납보다 일시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효력상실 · 해약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의 보장니즈가 이미 보험계약의 특성(일시납 또는 분할납, 유배당 또는 무배당)에 반영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벡타오차수정모형에 기초하여 금리연동형 연금 및 금리확정형 보장성보험의 효력상실·해약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보험회사의 효력상실·해약관리의 제반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했다.

상이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보유연수는 효력상실 및 해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연동형 연금의 경우 보유연수가 5년 이상 6년 미만인 보유계약은 보유연수가 7년 이상인 보유계약보다 높은 수준의 효력상실·해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유연수가 5년 미만인 보유계약은 7년 이상인 보유계약보다 낮은 수준의 효력상실·해약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금리확정형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유연수가 7년 미만인 보유계약은 보유연수가 7년 이상인 보유계약보다 높은 수준의 효력상실·해약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유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보유계약은 가장 높은 수준의 효력상실·해약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보험사가 해약수수료 효과, 비과세 효과 등을 보험계약의 보유연수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 벡터오차수정모형 등과 같은 분석모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효력상실 및 해약 행동분석을 위해 효력상실 및 해약과 관련한 자료를 집적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결론 금리연동형 연금보험과 금리확정형 보장성 보험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제반과제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효력상실 및 해약 행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업률, 시장이자율 등의 거시경제지표, 그리고 피보험자의 특성(예, 성·연령) 및 보험계약의 특성(예, 배당 유무·납입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효력상실 및 해약행동을 보험종목별로 분석하여야 하며, 이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김해식(전문연구위원) | 조사보고서

084

연구배경

생명보험시장 하면 흔히 소비자인 보험계약자와 공급자인 보험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1차 시장이나,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라는 공급자들로 이루어진 2차 유통시장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보유한 생명보험증권을 판매하는 유통시장도 존재한다. 판매자인 보험계약자를 상대하는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도 다르다. 기존의 시장은 보험회사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으로서, 해지에 따른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정산한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본시장의 투자자가 구매자로 나서는 새로운 시장도 등장하고있다. 이른바 생명보험 정산시장(life settlement market)이다.

생명보험 정산시장에서는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새로운 보험증권이 아니라 이미 발행되어 보험계약자가 보유 중인 기존의 보험증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현재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보험증권을 해당 보험회사에 되팔려고 하면, 즉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해약환급금이 보험증권의 공정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약환급금이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산정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평균 사망률에 기초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가 해지하는 시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건강(사망률)은 계약체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건강상

태에 따라 좌우되는 보험증권의 공정가치도 달라진다. 하지만 개인별 건강상황을 일일이 점검하여 해약환급금을 차별화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해약환급금은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결국 해약환급금과 공정가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새로운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정산시장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보험계약자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2006년 금융감독원 조사보고서가 있다. 이후 최근까지 정산거래의 긍정적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산거래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주요 이해당사자인 보험회사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미국 생명보험 정산시장의 현황 조사를 통해 정산거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투자자의 거래유인과 정산시장 성장의 요인을 주요 이해당사자인 보험회사의 대응과 더불어 살펴봄으로써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보험계약자로서는 소득이 줄고 건강이 악화되면, 치료비나 생활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동기가 커지는데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실제 보험증권의 가치와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금액

생명보험 정산시장은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후생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미래 고령사회와 장수리스크 관리에 유용한 시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을 받고 자신의 생명보험을 팔 수 있다면, 보험증권의 유통가격은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되어 계약자는 보다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경제적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정산거래는 자본시장 거래보다 투자 측면에서 우월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생명보험 정산거래는 자본시장의 주가나 금리 등의 변동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산거래는 사람의 사망이라는 보험리스크를 다루고 있어 시장리스크와는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이다. 정산거래가 효과적인 분산투자가 될 수 있는 이유이다.

둘째, 자본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산거래는 평균 10% 내외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고수익 분산투자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 보험증권의 가치는 보험증권과 관련하여 지불되는 보험료와 유입되는 보험금의 현재가치로 측정된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이 적을수록, 사망보험금 지급이 빠를수록 보험증권의 가치도 커진다. 이렇듯 피보험자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하면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보험회사의 정산시장 참여도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해지되었을 보험계약이 유지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동안 보험회사는 정산거래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오히려 정산시장 참여가 늘고 있다.

보험회사는 정산거래를 사망보험 부채에 대응하는 헷지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투자자로서의 참여가 아닌 자체 상품개발을 통해 정산거래를 원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도 한다.

결론 정산시장은 생명보험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후생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미래 고령사회와 장수리스크 관리에 유용한 시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일본의 판례와 미국의 정산거래규제는 초기 정산시장의 형성이 쉽지 않을 것이며 정산거래로 인한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이 모색될 때 안정적인 시장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한편, 보험회사는 고객접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국내에서 정산시장이 형성될 경우 정산거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약환급금초과대출은 적극적 대응의 대표적 사례다.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기관 성과 평가체계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이창우(부연구위원) · 서성민(연구원) | 2009 발간 예정 보고서

086

연구배경 근로자 및 사용자는 운용기관의 운용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운용시스템과 운용성과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기금의 안정성과 기금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운용평가가 단순한 과거의 성과에 대한 비교에 그치지 않고 운용프로세스에 의한 중요한 피드백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은 주로 정량적 성과평가에 의해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차원에서 정량적 성과평가 이외에 정성적 성과평가를 가미한 평가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정형화된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정량적 성과평가체계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정성적 성과평가체계 모두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성과평가체계와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성과평가체계는 평가주체 및 평가목적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체계의 국제 기준 및 평가사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퇴직연금운용기관의 평가 관련 규정 및 체계를 미·일 중심으로 고찰한 후에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측면에서 시사점 및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운용기관에 대한 평가는 적절성·지속성·정확성·표준화·보편성 등과 같은 원칙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상황에 적절한 통계가 사용되어야 하며,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통계나 자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통계적 오류나 부적절한 요소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운용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 성과평가와 정성적 성과평가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량적 성과평가는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로 수익률, 위험조정수익률 측정, 시장 타이밍 평가, 기여도 분석, 스타일 분석 등이 이루어진다. 정성적 성과평가는 운용기관의 전문성·서비스·안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주체는 국가가 아닌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해당된다. 그리고 이들이 모든 운용리스크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의 비용부담, 근로자의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 평가 위주로 운용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운용기관의 건전성, 운용기관의 서비스 질, 운용성과, 수수료체계 등을 고려하여 운용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일본 또한 운용기관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에서 운용기관에게 어느 정도의 건전성,

퇴직연금사업자인 운용기관의 평가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평가기준을 살펴보았다. 또한 평가사례를 미국 및 일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운용기관의 평가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적 및 물적 인프라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운용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익률 및 수수료 등과 같은 정량적 성과평가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일부 운용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평가 결과를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제시하고는 있지만, 운용기관마다 평가시스템이 상이하고 결과의 해석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달리 정량적 성과평가 이외에 정성적 성과평가를 가미하여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어떠한 정량적 성과평가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국제적 기준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성적 성과평가방법 역시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평가체계를 정량적 성과평가체계와 정성적 성과평가체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운용기관 평가체계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용기관 평가체계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의 특성에 부합한 평가체계가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다. 즉, 정량적인 성과평가보다는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등을 고려하여 운용기관의 안전성·건전성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성적 성과평가위주로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미국과 일본 등처럼 퇴직연금 평가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퇴직연금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용기관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량적 성과평가지표 및 정성적 성과평가지표의 선정작업이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운용기관 성과평가지수를 개발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운용기관을 평가하는 방안 마련도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운용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제반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Chapter 6

금융 · 보험 이슈 연구

- 보험금융연구
- CEO Report
- Insurance Business Report
- 주간 이슈 · KiRi Weekly

보험금융연구

090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규제 비교 분석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이경희(전문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1호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도 전환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는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는 책임준비금 적립, 연금재정검증, 적립금 평가 및 적립 과부족 시 시정조치, 연금재정 재계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국가에서는 퇴직연금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며, 부채 대비 자산비율인 적립률은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적립률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추가 부담하도록 하며, 초과 적립 시에는 사용자에게 환수하거나 각출 휴일을 허용하고 있다. 연금재정에 대한 재계산은 주기적(1년, 3년, 5년 등)으로 시행

하도록 하며, 과거 근무채무에 대해서도 20년 내에 상각하도록 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금부채의 전액 적립을 의무화하지 않고 6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사문화된 규정이 될 우려가 높다.

또한, 과거 근무채무에 대해서는 60% 이하 범위 내에서 상각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완전 상각이 이루어져도 40%에 대해서는 미상각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기업도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보장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적용하는 기초율 측면에서는 연금부채를 원가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가방식에 비해 시장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적립 과부족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해 연금재정의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산출, 최저 적립금 산출, 최대 적립금 산출 등의 목적에 따라 계산 기초율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재정의 검증 차원에서 부채 상정에 대한 계리적 기준 및 절차마련이 필요하다. 적립금 부족 시 부담금 각출 의무화, 각출비율 수준에 따른 상각기간 설정 등과 같은 시정조치가 정비

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각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변수가 생명보험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

최영목(부연구위원) · 최 원(선임연구원) |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3호

현재 보험계약자의 해약옵션 행사에 따른 해약률 추정은 주로 시장이자율과 부리이율의 차이인 금리스프레드와 해약률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개별 보험계약 단위에서는 해약환급금 수준, 계약유지기간, 금리스프레드 등이 해약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만으로 예측모형을 설정할 경우 계약자가 해약옵션을 행사하는 원인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설정된 모형의 설명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해약옵션을 행사하는 원인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통해서 해약률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해약행동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리고 계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GDP 성장률 · 실업률 · 시장이자율 · 인플레이션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생명보험의 실효 ·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해약률 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모형수립과 경제상황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수립에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해약행동과 관련하여, ① 실업률이 증가하면 보험상품의 해약률이 증가한다는 긴급자금가설, ②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보험계약유지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해약률이 증가한다는 이자율가설, ③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 보험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해약률이 증가한다는 인플레이션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 종목별 및 회사별 해약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GDP 성장률 · 가처분소득 증가율 · 실업률 · 회사채수익률 · CD 유통수익률 ·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의 경제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종목별 분석결과에서는 실업률과 시장이자율의 회귀계수가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긴급자금가설과 이자율가설이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존보험 해약률이 종속변수인 모형의 결정계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경제변수가 생존보험 계약자의 해약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회사별 분석결과에서도 실업률과 시장이자율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긴급자금가설과 이자율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결과와 강건성을 테스트한 결과에서도 해약률과 대부분의 경제변수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시장이자율뿐만 아니라 실업률 · GDP 성장률 · 가처분소득 증가율 ·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과 같이 경기 및 소득 관련 경제변수들도 생명보험상품의 해약률 예측에

적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각 종목별로 독립적으로 해약률을 예측하기보다는 상호관련성이 높은 종목의 해약률은 SUR 모형을 이용하여 동시에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구고령화가 인적자본 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기호(한국은행) · 유경원(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3호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은 인구구조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경제학자로부터 은퇴와 노후를 준비하는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에 대한 연구 수요는 그만큼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가 보험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의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논의는 향후 보험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선결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높은 관심에 힘입어 고령화 이슈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소비), 자산의 수요가격 등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 및 잠재성장률의 하락, 저축률 및 자본수익률의 하락 등 고령화로

인한 보다 부정적인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무엇보다도 고령화 현상을 전체 인구에 있어 고령인구 비중의 증대로 해석하고, 이들 고령층의 마이너스 저축과 높은 위험회피 성향 등의 특성을 토대로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단순히 고령인구의 높은 비중이라는 고령화의 결과만을 강조할 뿐 인구구조 변화의 동태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편, 이들 두 가지 요소는 고령화의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인적자본의 축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 저출산과 인적자본 투자 간 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아울러 인적자본 축적에 따른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을 재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우리나라 고령화 과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출산율 급락에 주목하여 이를 미시적 차원에서 자녀수와 교육투자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출산율 저하와 인적자본 축적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출산율 저하와 인적자본 축적 간 관계 분석을 토대로 고령화가 초래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함의가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시적 분석을 통해 저출산 현상에 따른 교육의 양과 질 사이의 상충관계(quantity-quality trade-off)의 발생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중첩세대 연산가능일반균

형(overlapping generations CGE)모형 분석을 통해서 인적자본 축적의 효율성 변화가 금융시장 및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와 같은 미시적 실증연구와 거시모형 분석을 균형 있게 수행함으로써 인구고령화의 시사점을 보다 종합적으로 구하고자 한 것도 기존 연구와의 차별된 접근방법이라 할 것이다.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고령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산을 저하로 고령화의 빠른 진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교육 투자 지출이 급속히 늘어날 경우, 인적자본의 사회적 축적 및 활용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기존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에 관한 부정적인 전망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차모집에서 설계사의 보험회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정세창(홍익대)·안철경(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3호

본 연구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교차판매회사, 해당 교차판매회사를 선호하는 요인, 교차판매 시 선호하는 상품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교차모집제도의 양상을 예측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에게는 판매채널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총 600명의 설계사를 대상으로 교차

모집회사 선호도와 그 이유 그리고 교차모집상품 선호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생명보험 9개사, 손해보험 7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그리고 시장조사 분야, 특히 선호도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최적화 척도법(optimal scaling)인 대응일치 분석(correspondence analysis)과 다중 대응일치 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이 실증분석을 위해 이용되었다. 다중 대응일치는 표본 각각의 개체 점수(objective scores)와 범주의 수량화 점수를 두 점수 간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에 의해 계산하여 범주 간 유사성 정도를 파악하게 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범주 간 유사성을 담보하는 절대적 거리 값이 없으므로, 각 항목별 중심점 좌표를 산출하고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상호 좌표 간 상대적 거리로 순위를 정하여 선호도의 순위를 평가하였다. 즉, 각각의 범주별로 산출한 거리 값이 가장 작은 케이스를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우선순위로 분류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설계사는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상품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설계사는 중소형 손해보험회사의 실손형 의료보험 및 기업성 보험의 교차판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설계사는 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과 저축성보험상품을, 중소형 손해보험회사 설계사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및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및 저축성 보험의 교차판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형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설계사는 교차모집회사 선택 시 수수료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중소형사 생명보험회사 설계사는 가격 경쟁력, 손해보험회사 설계사는 회사의 인지도를 교차모집회사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측면에서 교차판매를 보면, 생명보험회사의 설계사 수가 손해보험회사의 설계사 수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교차판매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판매를 상대적으로 더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교차모집제도를 통한 상품판매를 그룹별로 예상해 보면 첫째,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건강보험의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고, 대형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생긴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소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종신보험의 판매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손해보험회사는 장기보험과 실손형 의료보험 및 기업성 보험의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열사가 있는 중소형사는 교차모집제도를 통해 판매량의 증진이 예상된다.

셋째,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변액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 구조가 경영성과 및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전선애(중앙대) · 이민환(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3호

외환위기를 경험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규모면에서나 수익면에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에도 일부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이 심화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은행 계정으로서는 부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실규모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 건전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마저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저축은행의 경영성과와 위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주주는 유한책임으로 인하여자산의 레버리지를 높여 고위험을 추구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다. 특히, 고정보험료율제도하에서는 예금보험의 옵션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험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소유지분 제한이 있는 은행과 달리 산업자본의 소유가 허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작아 적은 자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대주주의 소유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인이 대주주인 상호저축은행의 수는 감소하고, 법인이 대주주인 은행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외이사 등으로 참여하여 간접경영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최근 대형화 추세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 형태의 상호저축은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대주주의 존재 및 경영참여 형태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성과 및 위험추구 행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주주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경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는 경우 책임경영이 확립되어 상호저축은행의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 구조가 은행의 경영성과 및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주주지분율더미, 대주주형태더미, 경영참여형태더미 변수를 이용하였다. 즉, 대주주지분율이 50% 이상인 은행과 미만인 은행, 대주주의 형태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 대주주가 직접·간접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주주지분율 50% 이상인 저축은행이 대주주지분율 50% 미만인 저축은행에 비해 수익성 및 운영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이 대주주인 저축은행이 개인이 대주주인 저축은행에 비해 운영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지배 구조가 은행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예상부도확률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대주주지분율이 50% 이상인 은행의 위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경영이 갖는 책임경영의 장점과 경영감시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경영인체제의 경영참여 형태는 경영성과나 위험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전문경영인체제가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고,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경영자는 대주주가 경영활동에 개입할 것이라고 예상함으로써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감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EO Report

096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방안

기승도(전문연구위원) | CEO Report

2008-1호

자동차보험산업은 2000년 이후 매년 영업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FY2006에는 영업수지 적자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으며, 최근까지도 영업수지 적자추이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영업수지 적자규모는 FY2009 이후에도 매년 5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FY2007 영업수지 적자의 담보별 기여율을 살펴보면,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이 영업수지 적자의 주요 담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대물배상의 손해율이 다른 담보보다 월등히 높아 대물배상 손해를 악화가 자동차보험산업 손해를 악화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배상의 손해를 악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고가 차량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즉, 자동차가 고급화되고, 외제차가 시중에 많이 팔리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액(또는 보험료)에서 물적담보(대물배상 및 자기차량 손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되었고, 고가 차량 증가에 부합하는 요율이 적용되지 못함으로써 손해율이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개선을 위해 물적담보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도로 규명하고, 자동차보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대물배상 손해를 악화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인 보험료 관련 요인, 손해액 관련 요인, 기타 제도 관련 요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보험료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의 원인이 된 대물배상의 보험료 수준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물배상의 손해액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료는 여기에 비례하여 증가되지 못하였다.

둘째, 손해액 측면에서 보면, 매년 고가 차량의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기존 차량의 고가 차량으로의 교체 및 고가 차량인 외제차의 증가가 물적담보 손해액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물적담보 손해액의 원인을 부품가격과 공임으로 구분해 보면, 부품가격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공임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요금 공표제의 영향으로 공임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셋째, 기타 제도 관련 요인은 언더라이팅 기능 미흡과 위험도에 비탄력적인 차량담보 요율체제이다.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의무보험의 성격인 자동차보험에 대한 사회의 엄격한 잣대 등으로 자동차보험산업에서 언더라이팅 기능이 상실되었고, 이는 손해를 악화 및 영업수지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차량담보 요율체제의 비

탄력성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부분이 오래된 자동차인데, 이들 자동차에 적정 보험료가 적용되지 못하여 손해율이 악화된 측면도 있다.

이상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차량담보 요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중고차 요율제도를 위험도에 부합하게 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즉,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에 적정 위험도에 부합한 요율적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차량담보 요율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차명 모델별 요율차등화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11등급을 21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대 등급과 최소 등급 간 적용률 차이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돌실험결과 산출된 수리비 정보가 차명 모델별 요율차등화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차명 모델별 요율산출시스템을 개선하고, 충돌실험 대상을 외산 차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산차 부품가 및 정비수가를 낮출 수 있도록 시장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생부품 활성화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재생부품 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를 절감해 주는 제도(재생부품 특약 등)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CEO Report

2008-2호

097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2008년 5월 보험회사에 소액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보험회사에도 금융투자업과 같이 one 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업권 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의 소액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하여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참여유형, 해외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전체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이슈로 나누어 하나씩 검토해가는 형태로 작성되었다.

첫째 이슈는,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보험산업이 금융겸업화 시대에 종합금융서비스체제를 갖추으로써 공정경쟁여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다. 일부에서 지급결제 수수료의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결제계좌 유지 및 활용 정도에 따라 수익이 매우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및 금융결제원 가입비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이슈는,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사례이다. 참여사례를 검토한 결과 보험산업은 비예금 수취기관이나 주요 금융산업이라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여방식에 있어서는 서민 금융기관과 같은 대표금융기관 방식보다는 금융투자업과 같은 방식, 즉 금융결제원에는 직접 참여하고 중앙은행과의 결제는 간접 참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이슈는,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한 해외사례이다. 캐나다와 EU 등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보험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비은행 기관에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별 회사가 직접 참여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넷째 이슈는, 고객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계약이다. 캐나다 및 EU의 제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계정을 활용해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지급결제 계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엄격한 고유영역 구분과 결제리스크 통제를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고려하면, 특별계정의 자산을 전액 외부에 위탁하는 위탁금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이슈는, 인터넷 뱅크와 같은 다른 유형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식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 뱅크를 자회사로 확보하는 것은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한 대체수단이 될 수 있으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 논의과정을 주시하면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서성민(연구위원) | CEO Report

2008-4호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도입되어 3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수급권보호 미흡 등 퇴직연금제도상의 제반 문제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유연성 및 수급권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칭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현행 퇴직연금제도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시장 및 금융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퇴직연금시장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퇴직연금 운용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 및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중간정산 요건의 강화, 확정급여형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마련,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 도입, 신설 사업자 퇴직연금 자동설정,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제도 확대 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은 신규퇴직연금시장의 증대, 근로자 및 사용자의 퇴직연금 선택 폭 확대를 가져오고, 이 때문에 금융권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확정기여형 및 개인 퇴직연금의 활성화 등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보

험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은행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개정안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설계사 중심의 판매채널을 퇴직연금 가입유도에 적극 활용하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서비스 체제 구축 등을 통해 타 금융권과의 차별화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 및 근로자의 상품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한 다양한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연함형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제도도입 등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형태 변화와 연계된 시스템 도입 및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심의 법 개정으로 연금자산 운용능력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에 대한 재정검증 및 확인을 강화하는 등 적립금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금수리 및 회계전문가 양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차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우위는 대체로 제도도입 초기의 운용전략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험회사가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고 구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퇴직연금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확정기여형의 활성화에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선점강화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확정급여형 위주의 퇴직연금시장 진출전략 이외에 중소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진출전략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surance Business Report

보험부채의 리스크 마진 측정 및 적용

이경희(전문연구위원) | IBR

제27호

2007년 5월에 발표된 보험계약 관련 국제회계 기준서의 보험부채 측정과 관련된 핵심이슈는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 화폐의 시간가치, 리스크 마진 및 서비스 마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 리스크 마진은 보험회사의 위험인수에 대한 보상으로서 시장참여자들이 리스크 보유에 대해 요구하는 공정한 추정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 관련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리스크 마진을 측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호주와 스위스에서는 부채가치 평가 시 리스크 마진을 명시적으로 추정하여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리스크 마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사항, 각 방식의 장단점, 구체적 적용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감독 당국 및 보험회사들에게 부채측정방식에 대한 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리스크 마진의 측정 방식에 대한 논의는 백분위방식(quantile approach)과 자본비용방식(cost of capital approach)으로 대별된다.

백분위방식은 주어진 신뢰수준과 기간하에서 기댓값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백분위

관점에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75% 백분위수 기준으로 계산된 부채는 담보기간 동안 보험금을 충족시킬 신뢰수준이 75% 정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 방식은 확률분포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 데이터가 있을 경우 손쉽게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사항은 확률분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호주의 경우 2005년부터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백분위방식에 의해 부채를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다.

자본비용방식은 보험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을 보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념에 입각하여 리스크 마진을 측정하는 것이다. 스위스(SST: Swiss Solvency Test)에서는 2006년부터 자본비용방식으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부채에 대한 리스크 마진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재무건전성 체계인 Solvency II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자본비용방식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비용방식이 상품의 고유 리스크 반영,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시 계약자 보호, 적용의 간편성, 투명성·검증 가능성·이해 가능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 및 Solvency II에서는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시 리스크 마진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면 자본비

용방식이 국제회계기준에서 정의한 시장가치 마진과 더 근사하기 때문에 IFRS와의 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경우에도 2011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 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IBR

제28호

2006년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보험분쟁은 모든 금융상품 분쟁건수 26만건중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등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과 유사한 한국판 금융상품판매법을 2010년까지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밝혔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은 2001년에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법과 시행령 조문은 각각 10개, 12개로 비교적 짧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의 제정 배경은 1990년대 후반 일어난 금융빅뱅 이후 투자신탁상품, 금융상품, 파생상품, 워런트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으나, 이들 상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의 분쟁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공백이 야기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 법은 2006년에 금융상품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종합적인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한 법규로 보완되었다.

보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단정적 판단의 제공금지조항이 추가되었고,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설명의무제도를 보완하였으며,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특정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게만 행위규제(광고·적합성 원칙·계약체결 전후 서면교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동 법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권유방침을 작성하여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판매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이 보험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금융상품판매법의 시행 후 보험소비자의 구매행위나 판매채널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며, 보험상담건수가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판매행위 주체인 보험회사와 대리점 등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의 이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영업활동을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보고서는 일본과 같은 금융상품판매법의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보험산업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금융상품별 주요 설명사항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설명방법을 메뉴얼 형태로 작성하여 보험판매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둘째, 적합성 원칙, 설명방법 등 판매권유 규

제를 반영한 ‘보험상품 권유방침’을 마련하여 사전적으로 설계사나 대리점 판매자들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이미 현 보험업법상에서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한 다양한 권유와 행위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 등의 행위규제를 일본과 같이 보험업법에 규정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된 행위규제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적으로 준수한다면 완전판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사업 진출방안

오영수(선임연구위원) | IBR

제29호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전문인력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회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장기병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상 노인장기요양 관련 사업을 자회사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물론 보건복지가족부도 노인장기요양 관련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은 노인성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불편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양 등에 중점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크게 시설요양사업과 재가요양사업으로 나뉘는데, 최근 들어서는 재가요양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도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들 중 53.9%가 재가서비스를, 41.3%가 시설서비스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요양시설과 재가노인시설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대로 확충된다면 2008년 말에는 각각 100%와 116%의 충족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력이 약한 일부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인수·합병되면서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효율성 경쟁과 아울러 서비스의 질적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사업은 투자 후 이익을 회수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익규모도 크지 않은 사업의 특성을 보일 것이다. 다만, 노인인구의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잠재적 시장규모는 2020년에 9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작지 않은 시장규모를 보일 것이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2인 이하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가족기능이 변화하여 가족 또는 친지 등이 직접 노인을 수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2008년 3월 말 현재 삼성생명이 복합실버타운의 형태로 너싱홈(nursing home) 분야에 진출해 있을 뿐 아직은 이 분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8.6%가 이 분야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85.4%가 보험사업과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가지고 유추해 볼 때 보험회사는 주관적으로도 노인장기요양사업 진출의 타당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보험회사는 자본 및 브랜드와 같은 여건을 기초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의 진출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장 성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별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최신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의 복합화 및 다기능화를 고려한 서비스 개발을 중요하게 여기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장기간병보험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사회공익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효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안철경(연구위원) · 권오경(연구위원) | IBR

제30호

103

국내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는 보험설계사가 이중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교차모집제도는 금융시장에서의 대형화와 겸업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수익모델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다. 또한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상품의 동질화 경향 및 시장참여자의 종합금융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설계사의 소득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는 교차모집제도의 시행에 앞서 보험회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수립 및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차모집제도 활용을 위해 보험회사에 실무적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국내 보험시장에서 교차모집제도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예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는 교차모집의 의사결정자인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향후 활용의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설문대상은 국내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600명(유효표본)이며,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0\%$ 이다.

먼저 설계사들은 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80% 이상이 참여할 것이며, 37%는 교차모집을 통해 소득증가가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고소득 설계사일수록 소득증가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어 설계사들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차모집을 할 회사의 선호도는 생보사 설계사

응답자의 48%가 대형 손보사를 선호하고, 52%는 중소형 손보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손보사 설계사 응답자는 63%가 대형 생보사를 선호하며, 20%는 중소형 생보사, 17%는 외국계 생보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보사 설계사 의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차모집 선호 보험상품에 대해 손보사 설계사의 43.1%가 변액보험을 선호하며, 생보사 설계사의 34.1%가 실손의료보험, 28.5%가 자동차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계 생보사의 설계사들은 53.4%가 실손의료보험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사 설계사와 차이를 보였다.

보험설계사의 70%가 교차모집 실시로 보험회사 간 상품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았으며, 46%가 보험계약 및 보상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설계사의 50%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어 설계사에 대한 상품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완전판매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교차모집제도는 국내 보험판매 채널의 다양화를 촉진할 것이며, 보험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소비자는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을 동시에 구입하게 되어 종합적인 보험서비스가 가능해지므로 구매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교차모집으로 인한 이질적 상품 판매(정액보험과 실손보험, 장기보험과 단기보험) 시 불완전판매 가능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영향과 대응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김동겸(연구위원) | IBR

제31호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준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퇴직연금회계 처리 등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퇴직연금회계 관련 규정을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이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국제 비교 및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통해 보험회사의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채택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미국연금 회계기준 간의 비교 및 분석과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연금부채의 변동성을 추정하여,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퇴직급여부채 평가가 청산기준방식에서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한 계속기준(예측금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급여 채무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리적 가정(퇴직률 · 사망률 · 임금상승률 · 할인율)이 적용되어 기업의 재무리스크는 크게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재무건전성이 낮은 일부 기업은 과도한 퇴직급여 채무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급여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연금상품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되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제반 영향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험회사는 퇴직급여부채 평가방식 등을 고려한 자산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직연금자산의 운용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금부채 및 자산의 시가평가, 연금계리 적 가정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계리 및 제도설계 등의 컨설팅 능력 제고가 요구된다.

셋째, 장기운용자산의 운용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확충해 나가며, 이를 통해 채무변동리스크를 억제하고 연금자산의 운용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중소기업 등 기업 형태별 연금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시스템의 차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적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퇴직연금시장 변화 및 보험회사의 대응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직연금시장에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회사의 헷지펀드 활용방안

진 익(연구위원) | IBR

제32호

국내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유가증권자산이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유가증권자산 구성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회사가 (재간접)헷지펀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국내 보험회사의 전체 영업이익 중 투자손익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손익이 보험손익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수익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에서 투자손익이 갖는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회사가 위험노출 증가를 기피함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보험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을 제고하고자 대체투자자산인 (재간접)헷지펀드를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간접)헷지펀드를 활용하면 시장 하락기에 자산가치를 안전하게 보전하면서 시장 상승기에는 초과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재간접)헷지펀드를 추가할 경우 투자다변화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재간접)헷지펀드의 수익률과 위험은 전통적인 투자자산과 상당히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헷지

펀드 투자위험을 보다 면밀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헷지펀드 투자는 전통적인 위험 조정수익률로는 식별되지 않는 대형 손실위험을 수반하는데, 보험회사가 시장위험 및 대형 손실위험을 기피하는 정도에 따라 (재간접)헷지펀드 투자의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 및 공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헷지펀드의 특성상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만큼, 투자자인 보험회사가 (재간접)헷지펀드의 운용전략을 파악하고 그 운용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궁극적으로 보험회사가 헷지펀드 운용전략 및 운용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헷지펀드 투자 초기에는 외부 (재간접)헷지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특히 각 헷지펀드 운용전략에 익숙해지고 운용자들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투자과정 대부분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보험회사 스스로가 헷지펀드 운용전략의 우수성을 판단하고 운용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헷지펀드 운용자 선별을 보험회사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재간접)헷지펀드를 기존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을 때의 시장위험과 대형 손실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위험에 대한 스스로의 위험기피 성향을 감안하여 편입 비중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시장위험과 대형 손실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대체로 국내 채권이 (재간접)헷지펀드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형 손실위험까지 감안하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가능액 (VaR)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보험회사는 이를 감

안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보다 신중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보험부채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보험회사로서는 자산가치의 장기적 보존에 적합한 헷지펀드 운용전략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감지되지 않던 대형 손실이 갑작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바, 보험회사는 엄격한 실사와 스타일 분석을 활용하여 헷지펀드 운용자가 운용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이경희(전문연구위원) · 서성민(연구원) | IBR

제33호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의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2에 8조원에 불과하였으나 FY2007에는 22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볼 때 생명보험시장이 연금보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금보험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시장현황과 변화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보험시장이 성숙한 영국·미국·일본과 상호 비교를 통해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생명보험회사가 연금보험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한 경영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연금보험의 비중은 FY2007 기준 전체 수입보험료 대비 29.3%, 전체 초회보험료 대비 57.7%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는데, 연금보험이 급속히 확대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수리스크의 증대로서 55세 생존자가 75세까지 생존할 확률(2006년 기준)은 남자 67.3%, 여자 84.9%에 달할 정도로 높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95.1%에 달할 정도로 높아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연금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둘째, 2006년 하반기 이후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라 변액연금 판매가 급성장하였다. 변액연금은 금융시장 호황 시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최저 사망보증(GMDB: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최저적립금보증(GMAB: 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등 각종 보증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침체 시에도 하방리스크(downside risk)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처럼 높은 유연성으로 인해 보수적인 계약자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었다.

셋째, 판매채널 측면에서 방카슈랑스제도가 허용됨에 따라 은행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저축상품과 유사한 연금판매가 용이해졌다.

한편, 선진국과 연금보험 비중을 비교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연금보험 비중이 더 확대될 여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연금시장이 성숙한 영국의 경우 연금 비중이 64.9%에 달할 정도로 높다. 미국도 50% 수준을 넘어섰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일본 역시 40%를 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 비중은 보험선진국 대비 10~35%p 정도 낮기 때문에 기대여명증대 현상을 감안할 때 향후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도 생명보험회사가 연금보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유지가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변액연금의 경우 투자리스크, 가격설정리스크, 계약자행동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저보증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헷징, 책임준비금 적립,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 보유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금리확정형 연금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장기간 예정이율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시점에서 금리가 하락할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사망률의 급격한 개선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에 대비하여 과거 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주간 이슈 · KiRi Weekly

108

보험지주회사 규제개선 방향 및 운영모델

안철경(연구위원) | 주간 이슈

제120호

세계의 주요 금융그룹들은 겸업화·대형화의 유용한 전략으로 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0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우리금융(2001), 신한금융(2001), 한국투자금융(2003), 하나금융(2005) 등 4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보험지주회사가 설립된 사례는 없다.

이에 보험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지주회사 규제 개선방향과 효율적 운영모델을 검토하였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은 금융권역별로 업종 간 특성 및 규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은행·보험·증권지주회사에 대한 구별 없이 단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의 보험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을 위해서는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상당수가 대기업

집단 소속이고 이들이 현실적으로 보험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과의 차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선진국 규제환경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들이 보험지주회사가 될 경우 소유지배 구조의 개선이 기대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사회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험지주회사의 규제개선 방향으로 ①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소유지배 및 업무영역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 ② 상호순환출자 해소 등 계열사 간 출자구조 단순·투명화, ③ 개별 금융업법에 의한 지주회사 운영 및 감독, ④ 보험지주회사 조직 운영방식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보험지주회사 운영모델로서 ① 수직계열화 모델, ② 비금융 손자회사 허용모델, ③ 중간보험지주 모델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및 ② 모델은 금산분리 규제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지만, ①의 경우 수직계열회사와 지주회사와의 의사소통 문제, ②의 경우 비금융 손자회사의 15% 주식소유 허용 시 의결권 문제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③의 경우 당사자 간 이해조정이 수월할 수 있는 반면, 금산분리원칙상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금융위기설 진단

신종협(부연구위원) | 주간 이슈

제121호

2008년 9월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대량 국고채의 만기 도래, 유동외채 증가에 따른 외환보유고 유동성 부족,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율 급증 등의 영향으로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당국은 국고채의 일시 청산가능성이 희박하고, 실질적인 유동외채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며, 금융권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대응논리를 펼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시장 지표 및주요 경제지표를 주변 국가들과 비교·평가하여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금융지표 동향을 살펴보고 이들 지표가 장기적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금융위기의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기로 한다.

먼저 외환시장에서 2008년 중 원/달러 환율급등 현상이 관찰되었는데여기에는 경상수지 적자지속, 외국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이외에도 금융위기설과 환율상승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절하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주가폭락 현상은 유독 한국 증시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미국발 금융위기

가 초래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대규모 국채 만기 물량 도래일인 9월 10일을 전후하여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로 촉발될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직전에 당시 IMF 경제분석가 Morris Goldstein이 제시한 분석기법에 기초하여 한국의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외환보유고/단기외채 비율, 수입충당 개월 수, 외채/GDP 비율 등 9개거시경제 변수에 대해서 과거 외환위기 발생 직전의 멕시코·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 등의 상황과 2008년 9월 현재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에서 금융위기 또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위기설을 불러일으킨 통화약세 및 단기외채 비중 증가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환율상승, 경상수지 적자 확대, 단기외채 증가, 높은 저축은행 연체율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므로 한국 역시 상당기간 금융 및 실물 두 부문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실물

경기 후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되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선 가장 시급한 사안부터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IG의 부실원인과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이민환(연구위원) · 최영목(부연구위원) · 이경희(전문연구위원) | 주간 이슈

제122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기관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세계 최대의 보험복합금융그룹인 AIG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AIG는 투자은행과 달리 130여 개국에 걸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존재하므로 AIG가 파산처리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

본고에서는 AIG가 경영위기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AIG와 여타 보험지주회사의 경영형태를 비교함으로써 타 보험사의 경영위기 발생가능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AIG의 대규모 손실 및 자본부족 사태는 전통적인 보험영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파생금융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투자은행 부문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투자은행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 AIGFP는 모기지 관련 채권을 보유한 은행 및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 4,410억달러에 달하는 CDS(Credit Default Swap)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GFP로부터 CDS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AIGFP에 기초자산에 대해 Libor + α 만큼의 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AIG는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시 약정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과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파산위험이 증가하면서 2007년 4분기부터 2008년 2분기까지 AIGFP의 CDS 손실이 약 18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보험지주회사의 상황을 파악해 보면, 알리안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이 발생한 은행 자회사(드레스너 은행)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메트라이프 · 푸르덴셜과 같은 여타의 대형 보험지주회사는 AIG와 같이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IG · 메트라이프 · 푸르덴셜은 보험업을 주력으로 하는 미국의 보험 금융그룹이란 공통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업무의 다각화 범위, 그룹의 내부통제시스템 등 경영 스타일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IG 사태는 보험회사가 고유업무 이외의 분야에 대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리스크를 과다하게 인수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와 더불어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내부통제시스템과 감독당국의 감독 실패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도 업무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보험 본연의 업무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IG 본점이 파산에 이를 경우에도 책임준비금

의 국내 보유, 예금자 보호제도와 같은 예방조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지점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G와 같은 다국적 금융기관이 파산에 처할 경우에 대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정리과정에 있어서 자산부채의 처분에 관해 본점 소재지 법원 및 감독당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법과 본점 소재지 관련법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생명보험회사의 통합상품 동향과 시사점: 장기간병보험을 중심으로

이경희(전문연구위원) · 서성민(연구원) | 주간 이슈

제123호

최근 생명보험상품에 다양한 생존급여를 부가하는 통합보험(combination product · hybrid produc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보험이란 동일한 계약하에서 다수의 리스크를 보장하는 개인보험 계약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미국의 통합보험 현황과 판매되는 상품유형 및 소비자 선호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7월 도입된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계기로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간병보험을 중심으로 한 통합보험의 성장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보험회사가 통합보험상품 개발 시 가격설정, 언더라이팅, 판매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미국에서는 최근 생명보험·연금보험과 연계된 장기간병보험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장기간병보험을 통합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가입 목적 측면에서 볼 때 생명보험은 부양가족의 재무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며, 장기간병보험은 피보험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한 상품이다. 생명보험 가입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부양에 대한 니즈는 감소하고, 장기간병 서비스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양자를 결합할 경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판매 측면에서 통합보험상품에 대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생명보험에 장기간병 급여를 통합한 상품은 장기간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생존급여제도(accelerated death benefit)라고 한다. 동 상품에 대한 주요 목표고객은 생명보험에 대한 니즈가 높은 45~65세 연령의 10만달러 이상 소득계층이 된다.

2006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장기간병보험의 29%가 통합보험 형태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신규로 판매된 통합보험(생명보험+장기간병보험) 규모는 일시납이 3억 5천만달러이며, 분할납은 3천만달러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통합보험의 도입이 주계약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응답자의 50%가 장기간병보험과 연금보험의 주계약 판매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통합상품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장기간병보험 전문가의 25%는 향후 통합보험이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장기간병보험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통합보험의 성장이 기대되는 데, 치명적 질병(CI)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을 통합시

킨 상품의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미 일부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동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다른 생보사들도 유사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보험은 복잡한 주계약 2개를 1개로 통합한 상품이므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가격설정 시 제반 계리적 가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이 납입면제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더라이팅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장기간병에 대한 보험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급심사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판매과정에서 통합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가입동기 및 급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납부제도 개선방안

서대교(부연구위원) | 주간 이슈

제124호

보험회사들은 1998년부터 소비자 편의증대와 TM 등 비대면 채널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생명보험사의 경우 FY2007 기준 계속보험료의 2.2%인 1조 493억원이 신용카드로 납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카드납부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카드 납부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저축성보험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예정이율 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저축성 보험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보험사로 현금이 입금되는 것은 카드 결제일로부터 3~7일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실제 입금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 예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부리하여 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현금 등 기타 지급수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계약자 동등 대우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보험료의 카드 납부 시 기존 계약 또는 신규 계약에 관계 없이 카드 납부를 허용하게 되면 기존 계약에 대한 사업비 증가분을 보험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시 수금비에 변화가 생긴 것이므로 이를 사업비에 반영해야 하지만 기존 계약에 반영이 불가하여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변동된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초과사업비 지출로 인해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다도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다. 이를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 4-33조 2항의 '보험료는 현금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배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면 먼저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이전부터 관행으로 허용되어 보장성 보험과 일부 비대면 채널(TM, 홈쇼핑 등)의 상품에 한해서 허용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신규 계약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

일부 보험종목에 국한하여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더라도 이의 시행 여부는 보험사와 계약자 간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형사처벌 조항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아마토생명의 파산원인과 시사점

이상우(선임연구원) | KiRi Weekly

제1호

일본의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인 아마토(大和)생명은 2008년 10월 10일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도산 신청을 하였다. 아마토생명의 파산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일본 내 금융기관의 첫 번째 파산사례로 일본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 아마토생명의 파산 원인을 분석하여 국내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아마토생명 파산의 주요 원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험-고수익 투자자산의 지나친 확대에 의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실패와 이로 인한 대규모 투자손실이다. 즉, 동 회사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인 해외투·융자 자산과 대안투자(alternative investments)의 투자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해외투자자산의 수익률이 2007년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와 글로벌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국내외 유가증권의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 아마토생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결과 대규모 유가증권 평가 및 매각손실이 발생하였다.

둘째, 아마토생명의 사업비율이 일본 생보 업계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 경영구조로 만성적인 보험영업 적자 상태였다. 또한, 실효계약률도 타 회사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아마토생명의 파산사례를 요약하면 금융시장 등이 급변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보험영업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자산운용 위주의 사업모델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아마토생명의 파산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다.

가격변동리스크가 큰 변액보험과 금리리스크가 큰 저축성 보험 및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보험회사들은 해외 유가증권 투자 등 해외 자산운용에 대한 글로벌 금융리스크 관리강화와 특정 위험자산 및 국가의 투자 쏠림 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과도한 대안투자 및 해외 유가증권의 투자를 지양하고 당분간 해외 국공채 등 안전자산 및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GA 채널의 현황과 향후 대응

안철경(연구위원) · 권오경(연구원) | KiRi Weekly

제2호

114

금융산업의 규제가 완화되고 유통채널이 대형화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제조기능과 유통기능이 분화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출현하면서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재정설계와 객관적인 투자자문서비스에 역점을 두는 판매채널이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로, 독립채널인 GA(General Agent)의 성장이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보험시장이 전속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단기간 내 급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보험시장에서 GA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의 금융상품을 비교·분석하여 고객에게 전문적 조언과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비전속 대형 법인대리점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 판매채널로는 미국의 PPGA(Personal Producing General Agency)와 영국의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가 있다.

국내 보험대리점은 영세한 대리점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그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100인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GA도 크게 늘어나 지속적인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GA 채널의 상품 선별력, 보험회사 협상력, 판매지원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GA 채널의 순기능인 고객지향성, 공정한 자문 등 긍정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발휘되지 못한 채 수수료 중심의 영업 패턴, 수수료 선지급 방

식의 폐해 등으로 설계사 소득구조의 불안정성과 모집질서 혼란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GA 채널의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과도한 사업비 지원 및 고수수료 중심의 운영으로 보험사의 손익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GA 사용인 측면에서도 잦은 소속사 변경으로 인한 경유계약과 승환계약의 발생 그리고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및 책임주체에 대해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보험회사 측면에서, 대형 보험사는 소속 설계사들의 GA 채널으로의 이탈과 기존 설계사 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신규 설계사 충원이 수월하지 않는 등 기존 모집조직의 경쟁력 상실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중소형사와 일부 외국계 보험사는 GA 채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판매확대를 도모할 수 있겠지만, GA 채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제후파기 시 급격한 판매력 상실로 인한 유동성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향후 GA 채널이 판매전문회사 등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조직체계의 정비 및 고객지향적 전문적 채널의 특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현행 법령상 GA에 대한 정의, 각종 규제 및 통계집적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GA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GA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경영 공시·판매 정보 공시 등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기능에 대한 검토: 최종대부기능을 중심으로

이민환(연구위원) · 최형선(부연구위원) | KiRi Weekly

제3호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초래된 금융위기는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8월 이후 Main Street 은행, Ameri 은행, Silver State 은행 등 다수의 예금취급기관들이 파산에 처하고, Bear Sterns, Lehman Brothers, Merrill Lynch, AIG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경영위기 및 파산에 직면하면서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다. 또한 유럽이나 아시아 등에서도 투자회사들을 비롯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책당국은 세계적인 정책공조를 이루면서 저금리와 금융완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기능은 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경우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중앙은행의 최종대부기능에 대한 정의는 '건전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은행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Bagehot(1873)에 따르면 최종대부자정책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격자산을 담보로 건전한 금융기관에 실시하고 둘째, 금융기관들이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장적 금리로 제

공하며 셋째, 적용범위를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의와 견해에서 살펴보면 현재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확대에 대한 논의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금융기관의 위기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부실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의 지원이 정해지면 과연 지원대상은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우리나라 현행 제도는 부실 여부가 불투명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앙은행은 여타 다른 정부기관과는 달리 독점적인 발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실 여부가 불투명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은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경우 대출확대로 인해 중앙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금융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스템 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의 위기확산 방지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발전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논란에 대한 검토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최형선(부연구위원) | KiRi Weekly

제4호

116

최근 겸업화 확산에 따라 비예금 취급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산업의 결제시스템 참여는 금융시스템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은행의 대출자금 부족을 초래하여 대출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금융시장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은행을 통해 제공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이다.

셋째, 보험산업에는 현재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을 제공할 만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여 문제는 중앙은행과 차액정산을 직접하는가 여부와 지급결제망에 직접 연결되는가 여부의 두 가지 문제로 정리된다.

우선, 차액정산의 경우 보험회사가 중앙은행과 직접 수행하는 사례가 없으며,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보험회사가 대행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차액정산을 하는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대표금융기관과 대행은행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차액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은 개별 회사가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차액정산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액지급결제망 연결유형은 금융투자업과 같은 직접참여와 서민금융기관과 같은 간접 참여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을 경유하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산업은 서민금융기관의 방식과 금융투자업의 방식 등 이미 허용되고 있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다.

지급결제리스크와 관련해서 보험산업은 지급결제용 자산을 계정분리함으로써 보험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전액 은행이나 공인된 외부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급결제용 자산의 차액결제리스크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반대 주장에서 제기하듯이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고객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고수익률 제시를 통한 시중 유동성 유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 직접 참여사례는 아직 전무한 상황이지만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또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어렵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금융 겸업화 시대에 부응하고 공정경쟁의 틀에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또한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통해서 금융시장이나 타금융권에 불합리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보험감독 체제 개편 논의와 전망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이상우(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제5호

미국 재무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하여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에 직면하자 2008년 4월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에는 현행 금융권역별 금융감독체제를 통합하고, 연방 보험감독청을 신설하는 등 현재 미국의 비효율적인 금융감독체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보험감독체제 개편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보험감독체제는 주 정부가 제정한 주 보험법을 근거로 주 정부 보험감독청이 보험회사의 감독권한을 행사하므로 주별 보험법과 감독규제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미국 전 지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상이한 주 보험법과 감독규제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이 미국 재무부의 지적이다.

즉, 보험감독이 연방법이 아닌 주 보험법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미국 내부는 물론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보험감독체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방정부 주도의 보험감독체제의 도입을 위해 재무부 산하에 연방통화감독청(OCC)과 유사한 연방보험감독기구(ONI)를 신설하여 종합적 규제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무부 산하에 보험감독실(Office of Insurance Oversight)을 설치하여 국제보험규제 분야의 이슈 분석 및 대응, 금융보증, 모기지보험, 자연재해보험 등에 대해 재무부장관의 자문기능을 부여했다.

둘째, 선택적 연방감독제도(OFC)가 도입되었을 때 ONI의 허가를 받은 경우 미국 전 지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보험법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모집 종사자, 외국계 보험회사의 미국 내 지점, 자율규제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들에게 설립인가·면허·규제 등 감독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다만, OFC를 선택하지 않는 보험회사 등은 주법의 감독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 등이 OFC를 선택하더라도 주 보험청은 종전의 ① 주의 세법, ② 정책성 보험의 인수업무, ③ 임의보험의 적용이 불가능한 공동인수제도 및 지급보증기금의 가입 등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무부의 보험감독제도를 포함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본격적인 심의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다. 동 개편안에 대해 전미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등의 보험유관단체들은 모든 주에서 상품인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규제비용을 절약하여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하였다.

반면, NAIC·손해보험협회 등은 OFC를 도입할 경우 주별 규제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연방정부 주도의 규제에 인하여 전체적인 보험감독제도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향후 미국에서 OFC가 도입될 경우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외국 자본에 의해 미국 전 지역에서 보험업 및 전국적 규모의 대리점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다. 현재 동 법안이 상하원에 제출된 이후 보험업계 및 NAIC 등 이해관계자 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향후 오바마 정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의 우선 과제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가계저축률 저하, 그 원인과 시사점

유경원(연구위원) | KiRi Weekly

제6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 은퇴 후 또는 노후소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개인)저축률은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다. 1980년대 후반 18% 내외였던 개인순저축률은 2007년에는 2.3%까지 하락하였으며, 우리나라 개인저축률의 급락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현격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저저축률 현상으로 인해 노후대비 자산부족이 제기될 수 있으며 경제적 충격에 가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개인저축률 급락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정리하였다.

거시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계(개인)저축률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 개인소득의 낮은 증가세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 이외에 본고에서는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하여 개인저축률 저하현상이 교육비 부담의

증가, 이자상환 부담의 증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출증대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먼저 가계의 높은 교육비 부담은 여러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소비지출 대체와 금융저축의 감소를 통해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소비자금융의 발달과 저이자 기조의 정착으로 인해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아진 가계가 부동산자산 구입을 위해 금융자산을 소진하고 금융부채를 활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이 가계저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과 함께 의료보험 등 비소비지출의 확대가 가계의 저축을 일정부분 대체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보았을 때 저저축률 현상의 핵심은 낮은 저축률이 아니라 저축의 구성변화로 귀결될 수 있다. 저축을 광의로 해석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우리나라 가계의 대부분은 수치상으로는 낮은 저축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높은 저축률을 보인다. 즉, 이로 인해 현세대의 소비지출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개인)저축률 제고를 위해 소비 구조조정보다는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저축을 제약하는 지나치게 높은 인적자본 및 실물자산에 대한 저축을 적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즉,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교육문제 해결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때 이들 계층의 저축률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와 세대 간 교육비의 적정부담이 이루어질 때 가계의 노

후대비 금융자산 축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손익구조 평가 및 시사점

김해식(전문연구위원) | KiRi Weekly

제7호

미국발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말 현재 국내 다수 생명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 하락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의 자본력을 측정하는 지급여력비율 이외에 향후 자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손익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이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축소시킨 것은 금리 및 기타 시장변수에 취약해진 상품구성 과 손익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먼저 보험상품과 관련해서는 종신보험 판매 이후 침체된 생명보험시장에서 중소형 보험회사와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 등 투자형 보험상품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삼아 2004년부터 적극적인 판매에 나섰다. 이는 자본시장의 호황과 맞물리면서 중소형사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났으며, 2003년 70%를 넘었던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58%로 축소되었다. 상품구성은 보장성 중심에서 저축성·투자형 우위로 바뀌었고, 유가증권 투자와 파생상품 투자도 늘어났다.

다음으로 손익구조를 살펴보면 보험영업이익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었고, 외부 환경에 민감한 투자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2004년 이후부터 투자영업이익의 규모가 보험영업이익의

규모를 앞질렀다.

이러한 보험상품 및 손익구조로 인하여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 급락은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성과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자본항목의 포괄손익이 2007년 이후 12개월 만에 2조 4천억원이 줄었다. 투자영업이익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2007년 6월의 24.6% 증가에서 2008년 3월에는 12.2%로 증가 폭이 절반으로 줄었고, 2008년 6월에는 -1.9%로 반전됐다. 더욱이 자본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보험영업이익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신계약 감소로 초회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해지율도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면 보험영업은 훨씬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생명보험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투자부문의 변동성이 크므로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지급여력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침체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생명보험회사는 유동성 및 자본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브레튼우즈체제 도입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신종협(부연구위원) · 황진태(부연구위원) | KiRi Weekly

제8호

120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규제강화 및 감독기능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신브레튼우즈체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중국·러시아·브라질 등 신흥 국가들도 일부 동조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제금융 시장에서 미국의 발언권이 약해지는 대신, 유럽 및 신흥 국가들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어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브레튼우즈체제는 1983년 5월 선진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환율의 급등락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당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었던 브라운에 의해 다시 한번 신브레튼우즈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영국식은행 규제방안—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은행의 국유화—이 눈길을 끌면서 현재 영국 총리가 된 브라운의 신브레튼우즈체제 도입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G20 정상회의 이전 EU가 구상하고 있던 신브레튼우즈체제 금융개혁안은 IMF를 대신할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 모든 금융거래의 감시 및 규제,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투자 방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의 강화, 국제회계기준 국제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시강화, 그리고 미국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체제 대신 주요국 통화가 링크된 새로운 국제 기

축통화의 사용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 G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기축통화체제를 의미하는 신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한 논의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건전한 규제와 감독강화,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국제적 협력강화,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라는 5개의 공동원칙과 해당원칙에 대한 액션플랜만이 제시되었다.

일각에선 국제금융시장 및 개별 외환시장의 안정성 증대,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다양화된 금융상품 및 발전된 금융기법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 신브레튼우즈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현 IMF 시스템 및 미 달러화 기축통화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금융규제 강화 및 감독기능 확대라는 유럽국가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대신 신브레튼우즈체제 도입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신브레튼우즈체제 도입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 집결이 어려워, 당면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신브레튼우즈체제의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최근 한국은 투자자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감독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본시장법, 금산분리 완화, 보험업법 개정안 등과 같은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금융규제 강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한국의 금융규제 완화는 국제적 기준에 아직 미달하는 수준이므로 실제 신브레튼우즈체제가 주장하는 금융규제 강화와 상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향후 국제금융질서 재편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를 위해선 G20 정상회의를 포함한 국제적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적 위치를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륜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김대환(부연구위원) · 기승도(전문연구위원) | KiRi Weekly

제9호

우리나라의 경우 이륜차 사고에 의한 높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이륜차 관리 감독 및 차량안전관리체계로 인해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모든 차종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이륜차의 경우 각각 15.2%, 8.1%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륜차의 관리제도와 면허제도 및 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성년 운전자를 포함한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이륜차 관련 제도들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등록제로 운영되는 자동차와 달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도난과 불법구조 변경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신고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준 또한 경미하여 법률적 강제성이 미흡하다.

둘째, 미흡한 이륜차 운전면허제도와 안전교육기관의 부재는 이륜차 교통사고율과 치사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운전방법이 다르지만 이륜차의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

시험이 제외되어 있어 도로주행 경험이 없어도 운전면허의 발급이 가능하여, 높은 차량 단독사고율(승용차 1%, 이륜차 38.8%), 치사율(승용차: 2.1%, 이륜차: 5.8%) 및 청소년 관련 사고(15~20세 사망자: 20.3%)를 보이고 있다.

셋째, 저조한 보험가입률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한계로 보험의 사고예방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륜차는 사용신고 시에만 의무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변경·폐지 신고 시에는 확인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30%에 불과하여 각종 사고와 피해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넷째, 이륜차를 이용한 운송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간 단축을 위한 난폭운전이 빈번하지만 온정주의에 기반한 소극적인 단속문화는 이륜차의 안전문화 구축을 저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50cc 미만의 이륜차는 미성년자의 높은 교통사고율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의 전·후 관리에 매우 취약하다. 고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의 50%가 이륜차 승차 중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내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36.1%에 불과하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이륜차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과 같이 이륜차의 안전운행관리 및 의무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 관리·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일반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면허제도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가 요구되며

의무보험 가입관리 강화를 통해 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여 우량가입자의 위험담보비용을 감소시키고 보험의 사고예방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법규위반자 단속강화 및 적극적인 안전운전 캠페인으로 이륜차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국민의 이륜차 안전운행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50cc 미만 이륜차도 주요국과 같이 자동차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주이용자인 미성년 운전자의 철저한 감독 및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미성년자에 대해서 예비면허제를 운영하고 주요 선진국처럼 학교에서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미성년자의 이륜차 운행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통합감독대상 프로그램 실패의 교훈

이승준(부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0호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의 부실에서 출발해 2008년 후반기에 금융회사들의 매각과 파산을 촉발한 금융위기는 1980년 이후 영미권 경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탈규제정책, 특히 금융부문에서의 규제완화와 자율규제정책의 공과를 다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시행된 대표적 자율규제정책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통합감독대상(consolidated supervised entity) 프로그램과 이번 금융위기와 연관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및

건전성감독에 대한 시사점을 구하였다.

통합감독대상 프로그램은 SEC가 2004년 8월부터 시행하다 2008년 9월, 5대 투자은행의 파산·합병·은행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해 종료되었다. 주요 내용은 1933년에 제정된 증권법(exchange act)의 순자본규제를 수정하여 통합감독대상에 속한 투자은행의 순자본 비율규제를 개별 기업의 내부모형에 의한 자율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 대신 투자은행 지주회사는 그룹 전체의 재무현황에 관한 정보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자율규제의 주체인 투자은행들이 리스크관리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형 투자은행 모델의 몰락과 통합감독대상 프로그램의 종료를 가져오고 금융위기를 심화시켰다.

금융산업에 있어 자율규제는 장단점을 함께 가지는데, 의도한 대로 운용될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규제비용을 낮추어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후 감독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규제 자체가 작동을 멈추어 전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상당한 위험요인을 내포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통합감독대상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였다.

첫째, 규제대상 산업 출신 인사들이 규제의 주체가 되면서 이해상충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둘째, 투자은행의 건전성 감독을 VAR(Value At Risk)이나 시나리오 분석 같은 개별 기업의 위험관리모형에만 의존하여 위험에 대비한 충분한 자본금을 축적하지 못하였고, 금융시장의 하락과 함께 제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부실이 커졌다.

셋째, 순자본 자율규제 허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얻은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오랜 공적 금융감독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를 시도하던 도중에 금융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는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감독의 원칙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보다 다소 높은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영업 관련 규제완화는 지속하되 건전성 감독강화를 병행하여, 금융시장의 혁신적 성장과 지속적 안정을 함께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입되는 자율규제가 기존의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며 사후 감독과 함께 하나의 완성된 규제 틀로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율규제가 허용된 분야에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용이하도록 지배구조의 단순화,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감독당국은 자율규제의 기능여부를 철저히 감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의 전이를 차단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실패사례를 참고하여 규제 완화를 지속하되 감독주체의 책임과 권한설정을 명확히 하고 주도면밀한 사후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리스크 관리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김대환(부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1호

123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건축물과 시설물의 고층화·대형화·밀집화와 도시인구의 집중화 등으로 인해 재난사고 발생빈도와 재산피해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3년(2005~2007) 동안 재난사고 발생건수는 16%, 재산피해는 53%, 인명피해는 9% 증가했는데,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무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신체손해배상책임부화재보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하 「화보법」이라 칭함)이 운영 중이고, 가스사고에 대해서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이외의 재난사고에 대비해 다양한 의무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재난 발생사고와 관련한 피해들은 재난보험 관련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며, 전반적으로 안전예방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낮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난보험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화재 및 가스폭발사고 등에 기인한 인적사항에 대한 의무보험이 도입되어 있지만, 대형 재난 발생의 대표적 원인인 폭발(가스폭발 제외), 붕괴, 환경오염 사고 및 기타 원인들로 인한 재난사고는 보험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난발생자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재해복구가 어려운 문제

에 직면해 있다. 또한 재난위험에 대한 의무보험이 도입되어 있더라도 대규모 시설물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중·소규모의 다중이용 시설을 비롯해 상당수의 재난시설이 보험영역 밖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둘째, 저조한 보험가입률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한계로 보험의 사고예방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보험의 경우 최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최저 보험가입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재난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셋째, 재난발생 시 재난발생자가 보상대책이나 복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정부 등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시설물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용하는 보상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재난복구와 피해자 구호 및 배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사회적 부담으로 귀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재난보험 의무화를 비교적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장기간 실시되어 온 배상책임제도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재난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재해발생이 크게 감소하거나,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신속한 안전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오히려 의무보험제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화재 중심의 화보험을 재난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화재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폭발(가스폭발 제외), 붕괴사고 등을 담보위험으로 추가해야 한다. 가입대상 물건도 중·소규모 다중이용 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건물이나 시설물(철도·항만·도로·터널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안전진단기구를 두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손실을 축소하기 위한 안전점검 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난보험은 재난의 예방과 피해자 구제수단의 확충 및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것이므로 보험업법의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가 인수주체로 적합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배상책임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에 기반한 확실적인 의무보험보다는 개별 경제주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발적인 재난보험 활성화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신탁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선진화

진 익(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2호

신탁은 고객이 원하는 투자목표와 위험목표에 따라 은행상품·보험상품·금융투자상품을 복합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으로 포괄됨에 따라 본연의 신탁기능이 제한되고 맞춤형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된 신탁 제도가 자산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국내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신탁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객의 생애는 재무적 측면에서 세 가지 국면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준비국면으로 이때 교육과 기능의 습득을 통해 인적자산(소득생성능력)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향후 누릴 수 있는 소득수준도 결정된다. 두 번째는 축적국면으로 경제활동과 저축을 통해 인적자산이 재무적자산으로 전환되며 재무적자산의 비중은 점점 증가한다. 세 번째는 소진국면으로 재무적자산으로부터 생성되는 소득을 기반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남은 부분은 후세로 이전된다.

자산관리서비스 목표는 축적국면과 소진국면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투자위험·사망위험·수명위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생성하는 것이다. 즉, 개별 고객을 위해 투자성과가 좋지 않아 필요수준의 재무적자산이 축적되지 못할 가능성, 사망으로 인하여 인적자산이 소멸되고 소득생성이 중단될 가능성, 사망하기 이전에 재무적자산이 완전히 소진되어 소득생성이 중단될 가능성을 관리해 주는 것이 스폰서의 역할이다.

그런데 안정적인 소득흐름의 생성이라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이 결합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위험은 은행상품이나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관리될 수 있으나, 사망위험은 보험상품을 통해 그리고 장수위험은 연금상품을 통해서만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수의 투자목표(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보장, 평균적인 생활수준 유지, 생활수준의 개선)가 복합적으로 추구되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

수준의 보장을 위해 보험상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신탁을 활용하면 다양한 유형의 자산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고 재산권이 다양한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신탁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특히 신탁에 내재된 전환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전 생애에 걸쳐 소득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수 있다.

하지만 신탁업법을 대체하는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신탁업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탁경영 보험회사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 신탁업무 범위, 수탁재산 종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규정들은 금융투자상품과 은행상품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현 규정상으로는 보험상품을 활용한 신탁의 개발이 불가능하고 보험회사의 역할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보험업법에서 신탁업무 범위, 신탁재산 종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관련 규정들을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은 투자성 부담이라는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현행 신탁법에서는 수탁재산 종류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때, 보험업법에 보완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신탁제도가 개선되어 국내에서도 보험신탁(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수탁자로, 보험금을 목적물로 설정하는 신탁)의 활용이 가능해지면 맞춤형 프로그램이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변액보험 시장점유율 변화와 판매 측면의 시사점

최영목(부연구위원) · 최 원(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3호

126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을 좌우하는 변액보험의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면서 FY2008 생명보험 시장 전체의 성장률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는 2008년 들어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어 변액보험의 성장은 계속보험료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성장세 위축은 경기하강 및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의 투자여력 축소에 기인한다. 특히, 2008년 들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하락세는 변액보험 판매위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변액보험의 매출은 시장 외부여건에 영향을 받지만 회사별로 외부충격에 대한 내성이 달라 시장점유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개별 회사의 판매채널, 마케팅 전략, 상품 포트폴리오전략 등의 경쟁력 차이에 따라 매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장점유율 변화를 외부요인에 기인한 부분과 내부요인에 기인한 부분으로 분해하여 판매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변액보험 판매둔화는 시장여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별 보험회사의 내부요인에 기인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모형을 통해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시장점유율을 시장여건 변화에 기인한 부분과 내부경쟁력에 기인한 부분으로 분해하였다. 변액보험 판매여건이 좋은 호황기(FY2007)와 불황기(2008년 4~9월)를 기준으로 하여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들의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변액보험의 외부요인(시장여건)에 기인한 수입보험료 부분이 증가하더라도 회사 내부요인(개별보험회사의 경쟁력)에 기인한 수입보험료 증가분이 감소한 회사는 호황기일지라도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액보험 시장여건이 악화되는 불황기에도 시장점유율 증가 및 감소는 시장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부분보다는 개별회사의 내부경쟁력에 기인한 부분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수입보험료 중에서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일부 보험회사들의 경우 호황기에는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불황기에는 내부경쟁력이 낮아 시장점유율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변액보험 판매전략과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의 내부경쟁력 배양과 함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불황기에는 경쟁력이 높은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불황기는 마케팅 비용을 높여 공격적인 판촉 전략을 실행하는 회사가 등장하여 업계의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특수한 상황이다.

특히, 변액보험의 운용성과 및 사업비 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됨에 따라 개별 회사의 경쟁력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변액보험 상품개발 및 판매채널 등에 있어 경쟁력을 배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상품개발 측면에서는 타 금융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은퇴 이후 노후자금 마련, 유산상속, 자녀

학자금 마련 등과 같은 변액보험 선택과 관련한 가계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영수(선임연구위원) · 김대환(부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4호

미국은 서유럽 선진국들과는 달리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빈곤층에만 적용되는 메디케이드와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는 메디케어가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2007년 기준으로 무보험자가 4,5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최고수준의 의료기술과 의약품을 양산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세계 의료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은 낮은 편이다. 심지어 민간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기부담금제도(deductible)와 정률제(coinsurance) 등의 본인부담금제도로 인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전 국민 보험가입과 가구당 연간 2,500달러의 의료비 감소 등 의료제도 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위한 변화: 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적 청사진(Change for America: A Progressive Blueprint for the 44th President)'이라는 정책제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오바마 당선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의료비부담 경감과 전 국민건강보험 실현을 의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계획하고 있지만, 시장원리를 통해 개혁하는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

즉, 급증하는 의료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독과점 형태의 민영건강보험시장과 의약품시장을 지목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민영건강보험산업 내 경쟁을 강화하여 관리비용과 이윤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공적건강보험 도입을 통해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함과 아울러 민영건강보험과의 경쟁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된 저렴한 복제 의약품(generic drug)을 수입하여 공적건강보험에 적극 활용하는 등 의약품산업에 시장원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비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대체할 최신 전자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질병예방·공중보건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증대를 통해 의료비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사실 오바마 당선자의 이러한 개혁의지는 미국 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가깝게는 1993년 10월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에 건강보장법(Health Security Act)을 제출한 사례가 있다. 그 당시에는 제도의 변화가 급격하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이해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여 법안이 부결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오바마 정부도 정책 추진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현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조달이 필요하므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의 개혁은 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정부의 통제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사회보장

을 확대하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보장체계 개혁이 입법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 평가 공개에 따른 의료 공급자의 선별적인 진료행위,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제한된 재정여건하에서 다른 사회보장서비스를 구축하는 문제 등과 같은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장 개혁 추진사례가 시사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 개혁은 시장원리를 중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은 의료제도개혁과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미국 생보사의 변액연금 최저보증 헷징과 시사점

이경희(전문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5호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상품의 대다수는 최저사망보증(GMDB: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최저적립금보증(GMAB: 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최저인출보증(GMWB: 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 최저연금보증(GMIB: 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 옵션을 부가하고 있다. 이들 옵션은 저조한 투자성 과에도 불구하고 최저 금액을 보증하므로 판매 측면에서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2000년대 초반 최저보증으로 인한 실패를 경험한 이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리스크 관리

활동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발생한 금융위 기에도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고는 미국 생명보험 회사의 구체적 헷징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생명보험회사는 최저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경험하였다. 이를 계기로 감독당국에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고, 보험회사들도 리스크 관리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주가변동성 및 이자율 관련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헷징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헷징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최저보증 부채에 대해 복제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 파생상품 선정·헷지 실행단계로 연결된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10월 최저보증으로 인한 손익 분석결과 헷징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생명보험산업은 전체적으로 약 40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구자본 측면에서는 90 백분위 시나리오의 기대값(CTE90: conditional tail expectation)에 대한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헷징 프로그램을 통해 CTE 측정방식의 요구자본 증대를 상쇄시키는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들의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현상을 방지하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도 금융시장 침체 시 계약자 적립금 가치가 보증금액 이하로 하락하는 보증리스크를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수단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미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는 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사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품설계와 리스크 관리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최저보증 급부가 부가되는 단계부터 헛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전반적으로 요구자본량, 자본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어떤 리스크를 보유하고 헛지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 보험 · 트레이딩 관련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리스크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금융위기를 통해 변액연금 최저보증 관련 기존 전략의 성과를 점검하고, 좀 더 정교하게 리스크를 측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구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에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 시행 3년에 대한 종합평가 및 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김동겸(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6호

2008년 12월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6조 6,122억원에 이르고, 5인 이상 사업장의 10%인 50,246개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와 가입률 측면에서 뚜렷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근로자 및 기업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부족, 엄격한 퇴직연

금자산운용규제 및 연금세제혜택의 부족 등으로 인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DB(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DB형 퇴직연금시장은 보험권과 은행권 간의 경쟁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DC(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시장은 은행과 증권사 중심으로,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경우는 은행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DC형 퇴직연금 및 IRA 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보장기능으로서 퇴직연금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 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미국 및 호주 등의 수준을 감안하여 과감한 연금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연금지급보증제도(pension benefits guaranty corporation)를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를 양적규제에서 질적규제로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근로자에게 운용상품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수탁자책임의 강화, 수급권보호 등과 같은 규제완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상해 및 질병 등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간정산제의 완전 폐지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익분배형 · 주식분배형 등과 같은 다양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개인과 중소기업의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 증대를 고려하여, DC형 퇴직연금시장 공략을 위한 수익성 위주의 상품을 개발하고, 자산운용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보험권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은행권의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비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권은 근로자의 니즈에 부합한 원리금보장형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은 보험권 중심의 DB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은행 중심의 DC형 퇴직연금, 은행 중심의 개인퇴직계좌를 선호하는 현상에 비추어볼 때, 보험회사들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전략을 적절히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보험회사와 같이 일괄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타 금융권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점검과 대안적 제도 검토

최형선(부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7호

최근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기침체는 저금리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금융중개기능의 약화로 인해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침체 해소에 보

다 효과적일 수 있는 비금융권에 유동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그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금융중개기관을 거쳐 파급되는 전통적인 통화정책과는 달리 비금융권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은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정책대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책당국이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긴급 대응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향후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이와 같은 정책대안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금융권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은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M. Friedman에 의해 헬리콥터 드롭식 유동성 공급으로 소개되었다. 이것은 화폐발행을 통하여 비금융권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지원에 대한 재원을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을 통하여 조달하고,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기업과 가계에 유동성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이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기업자산 매입과 가계에 일시금 환급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한국은행의 화폐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화폐발행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감세 및 세금 환급 등의 재정정책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고, 기업과 가계도 미래에 조세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에 대한 조세부담이 적은 만큼 기업의 투자 촉진과 가계의 소비진작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화폐발행은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정책대안인 만큼 그 시행시점과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위축으로 인해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계는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한 예비적 동기로 인해 소비지출이 위축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수부진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선 압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한국은행이 아직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있고, 디스플레이선 압력도 낮은 만큼 기존 통화재정정책의 경기부양효과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향후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비금융권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다.

보험계약의 강력범죄 악용 방지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이상우(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8호

2009년 2월 말에 검거된 강력범죄 피의자 K씨의 범죄사례는 한 개인이 보험계약을 악용할 경우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에 K씨의 사례조사를 통해 보험사기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 2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는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2008년 2,410억원이나 되며, 이 수

치는 잠재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하는 경성사기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성사기는 보험제도의 왜곡은 물론 인명사상과 타인의 재산피해 등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지방안이 필요하다. 피의자 K씨 사례에서는 보험사고 직전에 보험계약에 가입한 역선택 문제, 중복 및 다중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실 인지부족, 보험사기 정보시스템 활용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본고에서는 강력범죄 피의자 K씨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보험사기방지 및 적발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보험계약 및 보험금 다중 지급에 대한 사전조사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인수와 보험금 지급단계에서 엄격한 심사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보험사기방지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계약정보를 통합한 DB 구축이 미진하여 역선택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사기방지 정보시스템운영을 일원화하거나 시스템 운영주체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보험사기 혐의에 관한 첩보 및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보험산업과 수사기관이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민영보험과 유사보험 간 역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가 부재하므로 민영보험과 유사보험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역선택 방지에 권역을 초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형법에서 사기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에 대한 전문적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 등에서 보험사기행위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명확하고 전문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험경제학에서 본 보험사기 등 부정행위 유발요인

송윤아(부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9호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의 원인에 대한 정교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보험사기의 심도 및 빈도에 대한 기존의 요인 분석은 보험사기 조사 실무자들의 논리적 추론에만 근거해왔을 뿐, 실험이나 데이터에 근거한 검증이 없었다.

한편, 횡령·뇌물수수·탈세 등의 부정행위는 의무를 회피하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남을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혹은 속이려는 불법적이고 은밀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속성이 보험사기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유발요인의 본질이 보험사기의 그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보험사기와 유사한 부정행위의 유발요인에 대한 기존의 실험연구를 검토하는 것은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업계와 보험감독당국의 방안에 실증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실험연구들을 소개하여 보험사기 유발요인에 대한 기존의 논

리적 추론이 현실에 의해서 지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 내용은 크게 부정행위 유발요인별로 세 가지 이슈로 나누어 하나씩 검토해 가는 형태로 작성되었다.

첫째 이슈는, 부정행위가 발각될 가능성과 부정행위를 할 유인과의 관계이다. Castillo et al.(2009)은 부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편물의 분실률을 사용하고자 우편물의 수신여부를 기록하는 실험을 실시하고, 우편물을 절취하는 부정행위가 발각될 가능성이 우편물의 분실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우편물의 수신 주소지가 고소득층 밀집지역이고 가족이 발신자인 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의 분실률은 16.7%로, 중·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분실률에 비해서 낮았다. 이 실험은 부정행위가 전략적 행위의 결과이며, 해당 부정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부정행위의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이슈는, 적발된 부정행위의 기회비용과 부정행위를 할 유인과의 관계이다. Barr et al.(2003)은 관료의 임금이 200% 증가하면 그의 횡령 가능성이 30% 줄어든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더불어 Abbink(2002)는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잃을 것이 많을수록, 부정행위를 할 유인이 작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셋째 이슈는, 부정행위의 도덕적 비용 또는 죄책감과 부정행위를 할 유인과의 관계이다. Falk & Fischbacher(2002)는 부정행위가 또래효과(peer pressure)나 근접효과(neighborhood effect)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현상에 일부 기인함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또한, 개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줄어들면(즉, 희생이 있는 부정행위

라고 인식되면) 동 행위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 실험들을 통해 보건대, 비용 대비 편익이 큰 보험사기방지책은 계약자들의 인식전환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보험회사나 감독당국은 잠재 보험사기행위자들이 사기행위 적발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추정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사기자의 사기행위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계약자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기승도(전문연구위원) · 이승준(부연구위원) | KiRi Weekly

제2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칭함)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981년 법률 제3490호로 처음 제정되었다. 이것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뺑소니 등 10대 중대교통법규(현재는 11대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사고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자가 대인배상 Ⅱ에 가입하고 있으면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률제도이다. 1997년 3월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의 가입률이 94.8%에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동 법률의 제정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률의 제정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법률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곤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26일에 자동차사고 중 ‘중상해 사고’도 교통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통법 위헌판결로 첫째,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안전운전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협상의 우위에 있는 피해자는 운전자(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는 합의를 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총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비용증가 현상과 감소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동차사고 발생률의 일부 감소, 보험사기 감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고처리 행정비용 증가 및 피해자의 입원 증가에 따른 피해자 보상금액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대인배상 Ⅱ의 가입률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운전자의 안전운전으로 보험금의 일부가 줄어들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가 대인배상 Ⅱ를 가입할 경우 사고 시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 Ⅱ의 보험료 수준이 연간 6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으므로, 대인배상

II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금 측면에서는 운전자의 기억력 감소효과 및 상쇄효과⁽¹⁾로 교통법 위반판결이 자동차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의 일부 내용에 대한 위반판결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위반판결 대상 사고인 '중상해의 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고, 중상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상해 기준을 강화하면 운전자의 안전운전으로 일시적인 사고발생률 감소효과가 예상되나 사고처리 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반대로 중상해 기준을 완화하면 첫째, 행정비용 증가 효과는 줄어든다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총사회적 비용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 증감효과가 균형을 찾거나, 감소되는 수준에서 중상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법 위반판결의 효과가 한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통법 위반판결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운전자의 망각효과, 상쇄효과로 교통법 위반판결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에 한시적으로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교통법 위반판결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교통법 위반판결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회사는 교통법 일부 내용의 위반판결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한 이후 그 효과를 요율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반판결로 보험금 지급 패턴이 변화될 개연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1) 자동차 사고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법률로 ABS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의 성능을 과신하여 자동차 속도를 높이는 것처럼 두 가지 상황이 서로 겹쳐(상쇄효과)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줄어 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관련하여서는 형사합의금을 강화하는 보험상품이 많아질 경우에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가 중상해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방카슈랑스 실적추이와 향후 과제

안철경(연구위원) · 박정희(연구원) | KiRi Weekly

제21호

방카슈랑스가 국내 보험시장에 도입된 이후 만 5년이 지났다. 도입 이후 방카슈랑스는 연금 등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는 주도적 보험채널의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초기에는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와 일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중심이 되어 방카슈랑스의 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대형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방카슈랑스 채널을 이용한 보험판매를 늘리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의 급성장 이면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등 은행의 과도한 영업확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시되어 왔다.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은행이 소극적 판매전략을 취하면서 방카슈랑스에 의한 보험판매가 급감하는 추세이다. FY2008 3/4분기 방카슈랑스의 초회보험료 실적은 전년 대비 -16.4%(일반계정 : -10.2%, 특별계정 : -24.1%)를 기록하였으며, 계약건수로는 -8.4%로 나타나 방카슈랑스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초회보험료 성장세를 보면 방카슈랑스 비중이

높지 않은 대형사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카슈랑스 비중이 높은 은행계 보험사, 일부 외국사 및 국내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방카슈랑스에 의한 판매량이 일시에 급감하면서 경영실적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일부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채널 포트폴리오의 집중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 설계 시 일시납 중심의 기형적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납입방법(일시납/월납)에 있어서도 중소형 및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는 기존의 보험판매채널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일시납방식이 높게 선호되었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는 이들 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저금리하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일시납방식 의존도를 낮추고 월납방식을 확대하는 등 경제상황에 부응하는 보험판매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성향 및 특성에 따라 월납 또는 일시납 계약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적합한 납입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월납방식의 경우 일반 중산층 고객을 대상으로, 일시납방식은 VIP 고객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판매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소비부진과 부(富)의 효과

변혜원(부연구위원) · 유경원(연구위원) | KiRi Weekly

제22호

135

최근 소비지출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시험하고 있다. 민간소비의 경우 2008년 4/4분기에는 전기 대비 4.8%가 감소했으며, 2009년 1월 중 소비재 판매는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소비지출전망 CSI(consumer sentiment index) 역시 3개월 연속 100 이하로 떨어져 향후 소비지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대외부문의 기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내수부문의 회복이 경기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최근의 소비부진 원인을 살펴보고, 특히 자산가격 하락기의 부(富)의 효과를 분석하여 이로부터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소비부진의 원인으로서 먼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이 제기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가계의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소득 계층별로 살펴보면 다른 계층에 비해 고소득계층의 소비심리가 가장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소비지출 감소가 소비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와 이로 인한 상환부담의 가중이 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계열 자료 분석결과 소비와 가계부채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증가

보다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요인 이외에 최근에는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마이너스 부의 효과가 소비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을 때 주택가격지수는 증가율이 낮지만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점 대비 (2007년 4/4분기) 약 22%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부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주식가격 하락이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 마이너스 부의 효과가 소비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부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의 효과는 자산종류에 따라, 또한 자산 가격 상승기와 하락기 기간에 따라 부의 효과 크기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산가격 상승기보다 하락기에 소비가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에 대한 비대칭적 효과의 원인은 자산 가격 하락 시 직면하게 되는 유동성 제약이나 손실에 대한 거부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우리나라 경우를 분석하고자 1987년 1/4 분기와 2008년 3/4분기 사이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자산가격 상승과 하락 기간의 부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주식과 부동산 부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의 자산가격 하락기 부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구입과 부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자산가격 하락 시 그 상환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으나, 향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소비부진이 더욱 심화되어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소비부진의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중요하다. 아울러 고소득계층의 소비심리 위축완화 및 가계부채의 안정적 상환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미국 보험평점제도 관련 동향 및 시사점

김세환(수석연구원) | KiRi Weekly

제23호

신용정보는 대출자의 신용리스크 계량화를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험리스크의 평가 및 언더라이팅 목적으로 보험산업에서도 신용정보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신용기반 보험평점 활용현황과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았다.

신용기반 보험평점이란 과거의 연체경력, 파산이나 개인회생경력·부채비율·신용조회 신규 신용획득 행동·신용이력(credit history) 기간·자동차 할부론 등 보험리스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증명된 신용관리 패턴을 모아 개인별로 수치화한 점수이다.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신용기반 보험평점이 보험리스크의 우수한 예측 및 평가도구임을 주장한다. 이들은 신용기반 보험평점제도가 신용평점이 좋지 않은 소수계층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미국 연방공정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Credit-Based Insurance Score: Impacts on Consumers of Automobile Insurance」(2007)는 자동차보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신용기반 보험평점과 관련된 세 가지 이슈에 대한 답을 제공하였다. 첫째, 보험평점이 상승할수록 보험계약당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보험평점이 자동차보험리스크를 예측하는 효율적인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둘째, 보험평점을 적용하여 정확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지면, 보험평점이 양호한 가입자가 리스크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평점이 불량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해소되어 소비자의 효익이 증진됨을 보여준다. 셋째, 보험평점은 인종별·소득별로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험평점 활용 시 인종별·소득별로 평균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지만 보험평점이 인종이나 소득의 대용 변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신용기반 보험평점과 자동차보험리스크 간 부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 재무적 문제에 신중히 대처하는 사람은 차량의 유지보수나 조심스러운 운전습관 형성에 시간과 노력,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는 등 보험 관련 문제에도 신중하므로 우수한 신용이력을 형성함과 아울러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신용기반 보험평점이 낮은 운전자는 재무상황 악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부주의한 운전을 할 수도 있으며, 재무사정 악화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인이 강해져 소액 수리비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보험평점이 낮은 사람은 자동차론을 받기 어려워 자동차 보유대수가 적기 때문에 차량당

운전자 수가 많아 운행거리가 증가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보험시장도 온라인 채널의 비중확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경기침체로 보험가입자의 가격민감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리스크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손해보험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될 것이므로 보험평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II.

FY 2009 주요 연구계획

경기침체기의 환경극복을 위한 경영전략 제시
급격한 제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금융산업 내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금융검업화 대비 종합금융 연구

※ 동 연구계획은 연구자문위원회 등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서 향후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에서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Chapter

경기침체기의 환경극복을 위한 경영전략 제시

-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 자산관리서비스 업무효율성 제고방안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공동연구

142

연구배경 자본시장법 시행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성장성이 둔화되고 수익성·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신성장을 촉진할 새로운 동력을 찾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생명보험은 변액보험 및 연금에 의해, 손해보험은 질병 및 상해보험 등 장기손해보험에 의해 성장이 주도되고 있으나, 이들 종목은 사업의 안정성이 낮다. 또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금융 권역 간 경쟁이 심화되어 보험회사의 경쟁력 확대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환경 및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험산업의 성장성·수익성 정체 현상에 주목하여 보험업법 개정안 등 보험산업 내부의 변화를 비롯한 금융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시장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부문별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보험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새로운 사업영역을 적극 개척하는 데 따른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및 건전성 유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고자 한다.

한편,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영역으로 고령화에 따른 소득 및 건강위험,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적 위험인 재난 등을 담보하는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위험의 전가방법인 보험증권화와 자산관리서비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다양한 분야별(연금·증권화·변액보험·건강보험·보증보험 등)로 주요 이슈를 검토한 후 각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과 감독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융환경 및 정책 변화와 국내 타 권역의 사례를 검토하고, 해외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 및 전략을 분석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를 부문별로 세분화하여 신성장동력을 발굴·제시하며, 더 나아가 제도적 개선방안과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성장 가능성 및 위험요인을 제시하고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및 감독정책상의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김해식(전문연구위원)

143

연구배경 지난 수년간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는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계열사 및 관계사 투자로 인한 집중리스크 규제 이외의 대다수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된 상태이다. 게다가 2009년부터는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이전보다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최근 들어 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전통적인 보험영업보다 투자영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자산운용도 보험상품의 특성을 보다 많이 반영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감독·회계 분야의 각종 국제적 기준의 변화도 보험회사의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완화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감독당국의 사후적 자산운용 규제의 방향은 분명하지 않다. 감독당국은 기존의 사전적인 포지티브 규제를 사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서 사전 규제완화와 사후 규제 및 적시 감독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자산운용 규제 및 환경, 상품구성, 재무건전성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 등에 근거하여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1990년대까지 국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강력한 비율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배경에는 자기자본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자산운용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의도가 사전규제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지급여력제도 도입과 자산운용규제 완화가 국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1999년 이래 지난 10년간 시행된 EU식 지급여력제도가 보험회사 투자전략에 미친 영향을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한다. 또한 해외 보험회사의 자산구성 실태를 국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자산운용 규제, 시장 여건 및 환경, 상품의 구성 등 다양한 요소가 감안될 것이다.

기대효과 보험회사는 자산구성을 수익성뿐만 아니라 자사의 상품구성과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실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산구성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재무건전성 등의 요소를 추가하여 기존 보고서와 차별화된 계량적 분석과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포괄적인 국내외 보험회사 자산구성의 실태파악과 분석을 통해 보험회사의 투자전략과 감독당국의 자산운용 감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자산관리서비스 업무효율성 제고방안

진 익(연구위원)

144

연구배경 지난 2005년 보험회사의 신탁업 겸영이 허용되었으나, 국내 보험회사들은 자산관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자산관리서비스가 본격화되지 못한 것도 한 이유이겠지만, 자산관리서비스 겸영에서의 수익성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겸영에서 업무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신탁업을 겸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퇴직연금과 관련하여서는 연금보험과 더불어 연금신탁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상품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폭 넓은 고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둘째, 보험회사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신탁계약을 통해 재무설계나 컨설팅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신탁업으로부터 생성되는 수익흐름이 보험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흐름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보험회사는 신탁업 겸영을 통해 수익원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탁업 겸영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하지 않는 것은 신탁업 겸영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신탁업 겸영 보험회사는 고유부문과 신탁부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보험회사는 겸영 금융투자업자로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고유부문과 신탁부문 사이의 정보교류 차단, 인적 및 물리적 구분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별도로 신탁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시스템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자산관리서비스에서는 맞춤형이라는 특성상 적합성 원칙이 크게 강조되는데,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적합성 원칙이 강화되면 보험회사의 비용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상충 방지장치와 적합성 원칙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보험회사의 비용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시장실패가 초래될 수 있다. 즉 보험회사가 신탁업 겸영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고객의 생애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상충 방지장치나 적합성 원칙의 충실한 실행을 도모하면서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해 해외 금융선진국의 제

도와 적용 사례를 검토한 후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해외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스폰서(자산관리서비스 제공자)는 표준화된 업무절차와 자동시스템을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내용이 적합한 고객집단에 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과정에서 이해상충 방지장치나 적합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이해상충 방지장치나 적합성 원칙의 강화 속에서도 업무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자산관리서비스 경영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폰서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의 생애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내용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Chapter

2

급격한 제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금융상품 판매제도 변화의 보험산업 영향 및 대응
- 보험산업 내 경쟁정책 연구
- 보험규제의 국제적 조화방안
-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주요국의 산재보험 운용주체 개혁사례 분석
- GLM을 활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산출방법 연구

금융상품 판매제도 변화의 보험산업 영향 및 대응

안철경(연구위원) · 권오경(연구원)

148

연구배경

최근 들어 종합금융서비스 니즈 증대,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의 제판 분리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상품 판매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시장 내부적으로는 전통적인 보험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 및 전속대리점의 활용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반면, 직판 또는 은행이나 독립대리점 등의 활용이 증가하는 등 채널의 다양화 및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판매 전문회사제도가 입법 예고되었고,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 권역 간 장벽이 무너지는 추세가 더 확산해질 것이다. 따라서 통합된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하나의 채널을 통해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 판매전문업이 2010년 도입에 정이어서 이에 대한 보험산업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융상품 종합판매제도가 본격적으로 국내 보험시장에 도입될 경우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보험 및 금융상품 판매제도의 변화요인과 주요국의 금융상품 판매제도 추세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 도입될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의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을 검토한다.

아울러 보험판매 전문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전문업의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에의 영향을 채널영향 분석 측면, 보험소비자의 효익 측면, 산업별(생보·손보) 및 회사그룹별 영향 측면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채널 간 시장점유율 변화, 설계사의 이동과 탈락, 소비자 효익 및 영향 분석 등은 설문조사 및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할 것이다.

기대효과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한 판매채널의 다양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판매채널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보험회사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산업 내 경쟁정책 연구

이승준(부연구위원)

149

연구배경 가격자유화 등의 보험규제완화 이후 보험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양태와 불공정 경쟁문제에 대해서는 이론 및 실증적 기반이 미비하여 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험시장 내 경쟁양태를 조사 및 분석한 후 기존 경쟁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맞는 효율적인 경쟁정책을 제안하여, 보험산업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 내 경쟁정책을 다룬 기존의 연구 중 정호열(2008)은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을 통해 공정거래법의 보험시장 적용사례를 다룬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2008)는 『손해보험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손해보험시장의 경쟁정책을 고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보험산업 및 금융산업의 경쟁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보험시장의 경쟁양태 및 국내외 보험산업 경쟁정책 전반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이중규제체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험시장 관련 규제현황을 조사하여, 보험산업 경쟁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한다.

주요내용 상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미국·영국·프랑스·독

일·일본 등 금융선진국의 보험 및 금융산업의 경쟁정책을 소개한다. 외국의 보험시장 경쟁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해외의 경쟁정책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만약 없다면 어떤 점이 방해요인인지를 분석한다.

해외사례의 조사 및 분석에 이어 우리나라 보험시장 관련 규제현황 및 경쟁양태를 조사한다. 특히, 국내 보험시장 경쟁정책 도입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앞으로의 역동적 시장상황에 과거의 규제 틀이 어떻게 적용될지, 또한 개선될 사항은 없는지 고찰해 본다.

해외 및 국내의 보험시장 경쟁정책 및 경쟁양태의 고찰을 통해 집적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규제현황 및 경쟁양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보험산업경쟁정책이 보험시장의 경쟁양태를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경쟁정책을 평가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이중규제체제를 분석하여 과도한 중복규제의 문제 또는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를 찾아보고, 우리나라 보험산업경쟁정책에 있어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찾아본다.

또한 가격자유화 및 향후 격화될 금융시장의 겸업화 추세에 맞는 보험시장 경쟁정책은 무엇인지를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해외 보험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응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시장 경쟁양태가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한 예측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 보험산업 경쟁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보험시장 참여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험산업 경쟁정책을 고찰해 본다. 또한 향후 격화될 금융 겸업화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격자유화 환경에서 국내 보험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다.

보험규제의 국제적 조화방안

서대교(부연구위원)

151

연구배경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로 촉발된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대한 국제적 협조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와 금융시장위원회는 금융규제와 관련된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강화를 위해 Global Forum을 공동으로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보험회사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시스템 마련을 위해 OECD와 IAIS가 공동으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신뢰할 수 있는 경영, 효율적이고 강화된 규제, 일관성 있는 규제와 조세정책, 국제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감독기준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현재 이와 관련한 많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변화, 즉 금융의 글로벌화, 금융시스템 간 경쟁, 금융규제의 국제적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보험규제의 국제적 조화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시장의 글로벌화 시대에 대응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이론을 제시하고 국제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조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연구 내용으로는 현재 각 국제기구에 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인 금융 및 보험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 등을 조사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기준 설정에 따른 대응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회계·건전성 분야 및 지배구조개선 등에 관한 국제적 핵심 원칙을 검토해 보고 IMF·OECD·IASB 및 IAIS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사업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기준 설정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검토를 위해 정책 및 감독 당국자의 면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보험회사가 보험제도의 국가간 차이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변혜원(부연구위원)

152

연구배경

기업지배구조는 소유권과 지배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소유자와 대리인 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가 대리인의 행동을 소유자 이익의 극대화에 부합시키는 장치를 가리킨다.

기업지배구조는 크게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내부지배구조는 소유자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감시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두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를 비롯해 주주들에 의한 감시 및 통제 활동, 경영자에 대한 보수체계 등을 포함한다. 반면, 주식시장·경영자 노동시장·기업지배권시장 등은 외부지배구조로 분류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많은 연구들과 제도적 개선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보험산업에서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에 대한 영향은 보험회사 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자산운용이나 리스크관리 등에서의 의사결정 체계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지배구조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를 위해서 먼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론적 문헌들을 조사 및 정리한다. 또한 기존의 다른 산업을 기초로 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실증분석들을 검토하고, 해외 보험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다음으로 소유구조, 이사회 구성과 활동상황, 감사위원회 운영 등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실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특성과 자산건전성·수익성·대출채권 연체현황 등 경영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지배구조 특성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제시하도록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개선방안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감시와 규제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율규제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가능할 것이다.

주요국의 산재보험 운용주체 개혁사례 분석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송윤아(부연구위원)

153

연구배경 공영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는 도입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행산재보험제도는 재해율 대비 보험료를 상승 추세, 보험료 수납률의 하향 추세, 재해예방의 유인이 부족한 보험료를 산정방식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1990년대 중후반 산재보험 민영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해당사자들 간 첨예한 대립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논쟁은 일시 중단되었다. 현 정부 들어서 공보험들의 민영화가 논의된 가운데 산재보험에서도 민영화 도입의 가능성이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재논의되었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정안의 공개와 유례 없는 경기침체로 인해 논쟁은 다시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렇듯 산재보험이 안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치유되지 않은 채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논쟁이 일시 중단되었으므로, 운용주체의 개혁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기존의 논쟁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선형적이고 당위론적인 성격이 강했다. 산재보험의 공영독점 옹호론과 민영화론 모두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경험적 근거로서 양측 모두 주요국의 산재보험 운용주체의 정태적 현황을 묘사한 후, 운용주체의 형태별로 횡단면적인 비교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횡단면적인 비교 및 분석의 단점은 각 국가마다 혹은 각 주마다 산재보험료의 수준과 산재급여지출액 등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고유의 요인들이 많고, 이로 인해 분석의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의 정태적 현황묘사와 횡단면적인 비교는 산재보험 민영화론과 공영보험 옹호론 모두에 의해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경험적인 증거로 활용되기에 충분치 않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산재보험 운용주체 개혁을 경험한 국가 혹은 주들을 대상으로 운용주체 개혁의 배경과 운용주체 개혁을 전후하여 산재비용과 산재급여의 수준 등에 대한 종단면적 비교 및 분석을 시도한다. 종단면적 비교연구는 관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조건들의 통제가 횡단면적인 비교연구에 비해 더 수월하여 비교의 정밀도가 높다는 이점이 있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의 순서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운용주체 개혁에 대한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산재보험 운용주체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호주의 산재보험 운용주체 개혁의 배경과 그 결과를 분석한다. 미국에서는

오레곤·네바다·웨스트 버지니아 등 3개 주가 공영독점체제에서 다원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민영보험회사들의 진입을 허용하였다. 반면, 미네소타와 텍사스는 공보험자의 개입으로 인해 민영경쟁체제에서 다원경쟁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호주에서는 3개 주가 산재보험제도를 다원경쟁체제에서 공영독점체제로 전환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원체제에서 민영독점체제로 전환한 스위스와 공영독점체제에서 민영독점체제로 전환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위의 사례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산재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서 운용주체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기대효과 본 보고서는 횡단면적 비교 및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운용주체가 바뀐 국가나 주를 대상으로 종단면적 비교 및 분석을 처음 시도하는바, 향후 산재보험 운용주체 개혁논의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LM을 활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산출방법 연구

기승도(전문연구위원) · 김대환(부연구위원)

155

연구배경 전통적인 요율산출방법은 손해율법과 순보험료법을 이용하여 단변량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위험상대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단변량기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면 요율산출 과정이 단순하고 산출결과를 해석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험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통제하지 못해 정확한 요율산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다.

적정하지 않은 위험요소별 위험상대도 산출은 보험소비자의 역선택을 유도하게 되고, 이는 보험회사의 수익악화로 직결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위험도와 상이한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보험에 대한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

전통적 방법에서도 Baily and Simon method, Baily's method, Minimum bias method처럼 다변량기준으로 요율상대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산출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데이터의 분포와 관계 없이 요율상대도가 산출되므로 산출된 결과가 진정한 의미의 위험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전통적 회귀분석(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이용하였지만, 자동차보험 요율분석에 주로 이용되는 운전자의 자동차사고 빈도와 사고당 평균 손해액은 정규분포를 따르기보다 지수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전통적 회귀분석 방법도 적정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요율산출방법으로 일반화선형모형(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적용하여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통적인 자동차보험 요율산출방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일반화선형모형의 적합성과 유의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다.

자동차보험 요율산출의 계량적 연구에서는 사고발생 빈도와 사고당 손해액이 종속변수로 이용될 것이다. 사고발생 빈도는 카운트 변수인 반면 사고당 손해액은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종류의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카운트 변수를 분석하는 적합한 일반화선형모형에는 포아송(Poisson)을 기본으로 Negative Binomial, Zero-Inflated Poisson,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Hurdle, Zero-Truncated Poisson,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등이 있다. 지수분포를 가지는 연속변수를 분석하기 위한 일반화선형모형은 Gaussian, Log-Normal(또는 Log-Linked Gaussian), Gamma, Inverse Gaussian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일반화선형모형에 랜덤성분($E(Y)=\mu$)과 체계적 성분($x\beta$)을 연결하는 연결함수(Link Function)를 적용하여 최적의 요율결정 모델을 선택한다.

보험가입자가 일부 담보만 가입할 경우 적용되는 요율상대도 값은 실제 위험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실제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담보별로 요율상대도를 산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자동차보험 운영 측면에서 두 가지 큰 축은 요율산출 분야와 언더라이팅 분야이다. 이 두 가지 분야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가 언더라이팅 분야로 쉽게 확장·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보험회사들에게 선진화되고, 통계적으로 합리적인 요율산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요율상대도 산출에 단변량 방법 또는 전통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나 최신 통계적 모델을 적용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Chapter

3

금융산업 내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 보증보험의 효과적 리스크 관리방안
- 최저보증과 투자옵션 결정에 내재된 계약자 행동리스크: 변액연금
- 퇴직연금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방안
-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및 요율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보험거래 선진화를 위한 약관제도 개선방안
-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 요율차등화제도 연구

보증보험의 효과적 리스크 관리방안

김해식(전문연구위원)

158

연구배경 유럽연합(EU)에서 추진되고 있는 Solvency II는 보험회사가 과거보다 다양한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국내에 도입되는 리스크기준 자본금(risk-based capital) 제도의 주요 내용 역시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리스크 관리 추세는 자산리스크와 보험리스크 이외에 운영리스크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리스크 관리를 다루고 있는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더구나 일반손해보험과 보증보험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의 리스크 관리를 따로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증보험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와 보증보험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보증보험 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주요내용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의무를 보증인(보험회사)이 부담하여 계약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보험이다.

일반보증보험에서는 채무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신용보험 형태에서는 채권자가 보험계약자가 된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이외에 주요 이해당사자인 제 3 자가 존재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계약이행보증이나 공급·

면허·소송 등과 관련된 상업보증을 주된 영역으로 한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손해관리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가라는 특성이 미약하여 일반손해보험과 대조된다. 또한 보증보험이 전통적인 보험 리스크보다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일반손해보험과 다르다.

따라서 보증보험의 리스크 관리는 신용리스크와 운영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보증사건의 발생억제, 손실확대 방지, 최종 손실을 줄이는 신속한 구상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언더라이팅 부문과, 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부문의 리스크 관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기대효과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보증보험의 리스크 관리방안은 보증보험의 수익성을 높이고 자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보험회사 경영진과 감독당국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저보증과 투자옵션 결정에 내재된 계약자 행동리스크: 변액연금

송윤아(부연구위원)

159

연구배경 변액연금을 비롯한 변액상품은 투자 성과 및 투자로 인한 리스크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보험으로, 투자성과가 좋지 못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변액연금에 최저사망보험금 또는 최저연금적립금 등을 보증하는 옵션을 추가하여 투자와 연계된 리스크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보증옵션은 기초자산을 약정된 가격인 행사가격에 팔 수 있다는 점에서 파생금융상품인 풋옵션과 유사하다. 풋옵션 보유자인 계약자는 투자적립금이 최저보증금부보다 낮을 경우 풋옵션 행사를 통해 투자적립금과 최저보증금부의 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변액연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두 가지 범주의 리스크, 즉 투자리스크와 계약자 행동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최저보증옵션부 변액연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투자자산에 대한 특정수준의 수익을 보증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내재된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를 투자리스크라고 한다.

또한 계약자의 사망, 해지 및 실효, 중도인출, 주식편입비율 결정 등 계약자 행동은 투자적립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통제가 어려운 리스크로 작용하는데, 이를 계약자 행동리스크라고 한다.

2000년대 초반 주식시장의 붕괴를 경험한 미국은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옵션에 내재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이내믹 헷징, 합리적인 준비금 적립 등 투자리스크의 최소화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반면, 변액연금의 최저보증과 투자옵션에 내재된 계약자 행동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계약자 행동에 대한 경험데이터 부족과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계약자 행동의 일관성과 합리성 결여 등의 이유로, 계약자 행동에 대한 실증 및 이론 연구가 부진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변액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자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될 수 있는 제약조건들의 실효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의 순서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내 변액연금시장의 현황과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옵션에 내재된 투자리스크와 계약자 행동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계약시점의 횡단면 계약자 레벨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약자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계약자 행동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설계 시에 설치된 제약조건들의 실효

성을 게임모델을 이용하여 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언급한다.

기대효과 계약자 행동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에 대해서, 적어도 영향의 방향성과 상대적 크기를 확인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상품설계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계약자 행동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되었거나 고안가능한 제약요건들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상품설계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퇴직연금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김동겸(연구원)

161

연구배경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된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면에서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시장의 선점을 위한 금융기관 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과도한 금융기관 경쟁은 자칫 금융기관의 경영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운영능력을 고려한 퇴직연금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즉, 보험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퇴직연금 운용상품인 이율보증형·금리연동형 상품에 내재된 상품운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한 후 이에 기초한 상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퇴직연금의 손익구조를 고려하여 상품운용리스크를 평가한 후 안정적 수익확보 차원에서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의 순서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퇴직연금상품의 손익구조 특징 및 금융권별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선진보험사의 퇴직연금상품 운용특징 및 퇴직연금상품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어떠한 퇴직연금상품을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내재하고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상품별 금리 및 보험리스크 등을 추정하고자 한다. 즉, 이율보증형상품 및 금리연동형상품에 대한 금리 및 보험리스크를 추정함으로써 퇴직연금 운용상품의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안정적 수익성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전략을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즉, 퇴직연금상품의 운용 및 포트폴리오 방안,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손익관리방안,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퇴직연금상품 개발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안정적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운용전략을 상품 포트폴리오 구축 측면, 손익관리 측면, 상품개발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및 요율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김대환(부연구위원)

162

연구배경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은 보험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제시된 리스크를 선택하고 분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것은 위험요소들의 상대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요율적용을 하는 것 이외에도 역선택과 보험사기방지를 통해 선량한 다수의 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건강보험 영역에서 실증분석을 이용한 계량적 언더라이팅 및 요율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여 선진화된 분석기법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비만·흡연·음주·고령화·운동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니즈가 변하고 있어, 주요국의 보험회사들은 이들 위험변수를 건강보험 상품개발과 언더라이팅 및 요율결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강보험상품은 이러한 선진기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건강보험의 수요 패턴 변화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보험상품 및 언더라이팅 기법을 소개한다.

둘째, 최근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상품 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언더라이팅 모델을 수립한다.

셋째, 보다 정확한 언더라이팅 및 요율체계를 위한 계량분석 모델을 구축한다. 건강 관련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분석하고 위험집단을 세분화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못한 계량분석 모델의 선

택은 위험요소들의 잘못된 상대위험도와 유의수준 평가로 귀결된다.

이는 결국 보험회사의 수익악화와 소비자의 효용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계량분석 모델 구축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대한 소비자 니즈와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보험상품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상품에 반영하고 있지 못한 위험요소들을 발굴하고 언더라이팅에 적용할 방법을 연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평가하는 데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언더라이팅 모델의 구축을 위한 계량분석방법으로 일반화선형모형(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관련 실증분석에 종속변수는 지수분포를 따르는 의료소비 빈도 또는 의료소비 지출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화선형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진국의 보험회사에서는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개별 위험변수에 대해서는 개인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two-part model을 적용하여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기대효과 공적건강보험과 달리 소비자 니즈 변화에 신속히 부합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한 민영건강보험은 보험회사의 수익개선과 소비자의 효용증대를 가능하게 한다.

일반화선형모형과 two-part model 등의 실증분석을 이용한 언더라이팅 모델 구축은 요율분석, 손해율 통제, 마케팅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반화선형모형은 통계적 스코어링(scoring)에 근거한 언더라이팅 모델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즉, 미래에 발생하게 될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집단들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아직 결과를 알지 못하는 개체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

보험거래 선진화를 위한 약관제도 개선방안

오영수(선임연구위원)

164

연구배경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험 상품이 복잡해지고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면서 보험약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당국에서는 설명의무의 강화, 적합성 원칙의 도입 등 약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정작 실제 거래현실에서는 약관 및 설명서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여, 보험소비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을 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보험약관의 평이화를 추진해 왔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보험약관에 예시·도해·설명을 부연하고, 상품설명서에 '가입자 권리 및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이러한 노력은 분명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나, 자본시장법 시행에 대응한 개정보험업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약관에 대한 이해도 제고만이 아니라 약관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는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보험규제의 맥락에서 상이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약관과 관련한 제반 법률의 개정에도 맞추어 약관제도 운용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고 있는 보험규제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비용효율적으로 약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보험약관 규제제도 및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또한 보험소비자와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약관의 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보험모집인이 설명하기 용이하도록 약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진형 약관 규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법적 측면에서 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한 해석 및 적용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약관 이해도와 설명 수용도 등을 조사하고, 보험모집인이 약관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굴한 후, 약관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험약관제도 및 운영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험모집인이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보험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보험분쟁의 축소를 통해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 요율차등화제도 연구

기승도(전문연구위원) · 김대환(부연구위원)

166

연구배경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와 가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개발된 자동차보험제도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활용된다. 특히, 할인할증제도와 교통법규위반제도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고 안전운전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들 제도 이외에 최근에는 운전자의 총운전량을 줄임으로써 자동차사고 발생을 줄이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로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가 주요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다. 주행거리와 자동차사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 제도는 주행거리가 긴 사람에게 운전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동 제도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주행거리 개념 및 연역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적용방법을 연구하였고, 타이어 가격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및 휘발유 등 유류가격에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들은 자동차의 운행거리에 비례한 보험료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으나, 타이어가 마모되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 적용의 불균형

이 발생하고, 자동차의 연료 효율성 차이, 자동차의 크기 차이에 따라 연료 사용량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운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적용방법이 되지 못하였다. 이후 IT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실시간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주행거리정보를 바탕으로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가 미국 일부 주에서 도입되었다.

둘째, 주행거리와 자동차사고 위험도의 관계를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즉, 운전자의 자동차사고 경험과 주행거리의 관계 통계를 이용하여 일반화선형모형(GLM: Generalized Linear Model)으로 주행거리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어느 정도 감소할지를 계량모형을 구축하여 예측해 보기로 한다.

셋째,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의 세부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즉, 동 제도의 적용담보 범위, 적용방법 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 IT 기기 장착 시 비용문제, 자료구축시스템 및 자료배분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IT 기기가 발전하면서 자동차운행 관련 정보를 쉽게 집계할 수 있는 시

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 정보와 자동차보험제도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동 제도는 여러 가지 법률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당장 도입되기는 어렵지만 머지않아 동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4

Chapter

금융검업화 대비 종합금융 연구

- 보험회사 대출고객군의 특성 분석
-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부진의 원인과 보험수요 분석
- 보험계약자 지급결제수단의 내생적 선택과 시사점
- 내부통제를 통한 금융그룹의 위험 감소방안

보험회사 대출고객군의 특성 분석

최영목(부연구위원) · 최 원(선임연구위원)

170

연구배경 은행의 경우 개인고객을 단순한 자금 조달처가 아니라 자금운용처로 인식하면서 소매금융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수익성을 높이고 신용위험을 줄여 가면서 대출마케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보험회사가 대출부문을 주요 자금운용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대출부문의 신용리스크 관리 및 대출상품 개발 등과 관련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금리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채권의 비중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 권역별 대출고객군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대출자산 운용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대출고객(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대출고객군의 특성과 연체(불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은행의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과거 지불 실적과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근거로 한 신용평점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평점제는 대출고객의 채무변제와 관련한 신용능력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출고객의 신용능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성별 · 연령 · 학력 · 연평균소득 · 직업 · 결혼 여부 · 부양가족 · 보유주택 가격 · 직장의 직위 · 직장 근무연수 · 금융기관 대출경험 · 연체경험 등의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적 · 경제적 특성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대출고객도 은행의 대출고객과 차이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출고객의 신용능력을 반영하는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적 · 경제학적 변수를 이용한다.

특히, 본 연구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여 각 금융 권역별 대출고객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다른 금융 권역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한다.

즉, 신용능력을 반영하는 인구통계적 및 사회적 · 경제적 변수 외에 대출상품의 선택이나 채무상환과 관련된 소비자의 의지에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한다.

기대효과 우선 본 연구결과는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개발 및 마케팅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선택과 관련한 소비자의 의지를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어떠한 대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 그러한 대출상품을 선택한 소비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한 본 연

구결과는 대출상품의 개발 및 마케팅전략의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대출고객의 채무상환 의지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결합하여 특성을 파악하므로 신용위험관리에도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회사가 개인신용시장에서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과 적극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출상품 운용과 관련된 신용리스크 관리능력의 배양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타 금융 권역별 대출고객과 보험회사 대출고객과의 차이 및 특징을 파악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대출자산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부진의 원인과 보험수요 분석

유경원(연구위원) · 이해은(연구위원)

172

연구배경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 은퇴 후 또는 노후 소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표명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대응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개인)저축률을 살펴 보면 이와 같은 우려와 상반되게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으며, 특히 우려할 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저축률의 하락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있다.

또한 금융자산 축적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개인저축률 급락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리고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가계의 낮은 저축과 금융자산 축적 미흡은 현재 세대의 노후대비 자산부족과 실업 등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제의 상시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가계부문의 저축률이 급락하고, 금융자산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개인저축률 하락 현상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이론적인 측면과 실증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수행

하고자 한다.

저축의 일반적인 정의가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나머지라고 한다면, 저축률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개인소득의 낮은 증가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시적인 요인 이외에 개인저축률 저하 및 금융자산 축적부진 현상과 관련하여 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가계의 자산구성 행태와 관련이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가계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산, 부동산 등 실물자산, 그리고 금융자산 중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자산보유를 가계의 상이한 특성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므로 가계의 자산구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가계의 저저축 및 금융자산 축적부진 현상은 가계의 금융자산과 다른 형태의 자산 간 대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자산구성 측면에서의 이와 같은 대체 현상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먼저 개인저축률의 결정요인을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예금·주식 등 주요 금융자산 수요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 아울러 주요 자산 간 대체현상을 분석한다.

또한 금융자산 축적과 관련하여 해외 조사를 통해 선진 각국의 자산형성 지원사례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우리나라 가계의 低저축 및 금융자산 축적부진 현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거시변수들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자산구성 측면에서 자산 간 대체현상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축적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금·보험·주식 등 향후 금융자산 축적 및 이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자 지급결제수단의 내생적 선택과 시사점

최형선(부연구위원)

174

연구배경

지급결제란 모든 재화나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의 이전을 말한다. 최근 재화 및 금융거래가 복잡해지면서, 지급결제제도 와 더불어 현금 이외의 지급결제수단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의 전자지급수단 모습으로 개발되면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지급결제수단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나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주요국 현금의 민간보유는 2006년을 기준으로 2,6조달러로 2002년 대비 37%가 증가하였다. 비현금의 경우, 주요국 결제규모는 2001년 대비 10%가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중국·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북미와 유럽 등에서는 비현금결제의 비중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비현금결제를 수표·카드·입금이체(credit transfer)·자동이체(direct transfer)로 세분할 경우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 국가들은 수표를, 독일·스웨덴·스위스 등 유럽지역 국가들은 자동어음교환소를 통한 입금이체와 자동이체를 주요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비현금 지급결제수단별 선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선택은 비용과 혜택,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

어진다. 또한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지급결제수단이 있어도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생산자가 원하는 지급결제수단의 종류가 달라지면 서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급결제수단 이용자의 선호를 분석하여, 그들의 선택과 경제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내용

이러한 배경하에서 보고서의 순서와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연구목적과 동기를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캐나다·EU 등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여, 다음 장에서 논의할 지급결제수단의 선택에 대한 기초작업을 수행한다.

이어서 최근 학계에서 소개된 지급결제수단 선택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현실에 맞게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지급결제수단 선택모형을 구축하여 그 시사점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급결제수단 선택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

자의 상호반응을 통화정책, 지급결제수단 리스크 등의 외부경제상황과 연계하여 그 영향과 반응을 평가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변화하는 지급결제수단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지니는 의미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의 편의성, 안정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지급결제수단 수요는 경제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지급결제수단 선택에 대한 변화는 자금흐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보험·금융산업의 사업환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지급결제수단의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보험·금융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내부통제를 통한 금융그룹의 위험 감소방안

이민환(연구위원)

176

연구배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소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그룹은 대형화되고 복잡화될수록 전체 업무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부도덕한 행위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룹 전체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의 강화는 막대한 감독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위험감소방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 시장참가자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위험요인 감소는 넓은 의미에서 경영진에 대한 보수구조와 주주에 대한 배당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전혀 다른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획일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각국이 처한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가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 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배구조와 더불어 금융그룹의 위험추

구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은 업무의 유효성과 효율성, 재무제표의 신뢰성, 법률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에 포함되어 조직 내부자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지칭한다. 이는 통제환경, 리스크 평가와 대응,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 감시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대부분의 금융그룹에서 외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금융그룹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위험감소방안의 외적인 요인으로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방법, 그리고 내적인 요인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위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고, 그 형성배경과 장단점에 대해 서술한다.

이와 더불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율적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이론적·실증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복잡한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위험최소화 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경

영자의 성과보수체제와 위험추구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금융그룹 경영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제를 위험추구와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복합 금융그룹을 비롯한 금융그룹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외적요소와 내부통제라는 내적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유인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금융그룹의 과다한 위험 추구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II.

FY 2008 연구 관련 활동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금융·보험 산업 연구 관련 세미나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금융·보험 도서 정보제공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는 2006년 1월부터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1990년 12월부터 발간되었다. 1999년 1월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학술지’로 등록될 정도로 일찍부터 학술지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 왔다. 『보험금융연구』는 보험연구원이 보험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순수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적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게재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매년 3월, 7월, 11월 등 연3회 발간되고 있으며,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회는 보험연구원에서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를 맡고, 국내외 보험·금융 전공 교수 6인을 포함하여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초기에는 민영보험 분야에 국한된 학술지로서 역할을 해 왔으나, 2005년부터는 금융 및 사회보험 분야로 게재 범위를 넓혀왔으며, 2008년 보험연구원 출범 이후에는 공사보험과 금융·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학술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2008년 6월 20일부터는 ‘연구윤리기준’을 시행함으로써 논문의 작성 및 심사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2008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제 목	저 자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1호 (2008년 3월)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규제 비교분석	류건식, 이경희
	전화판매 민간의료보험의 정보제공 실태	이원형, 홍지영
	국제선박보험약관(International Hull Clauses)의 도입과 주요 특징에 관한 고찰: 국제선박보험약관(2003년)과 협회기간약관(1983년)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재복
	제 목	저 자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2호 (2008년 7월)	자기부담금 보험계약과 Mossin 정리: 자산가치변동위험과 손실위험이 공존하는 경우	홍순구
	방카슈랑스 효과와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정세창, 송영호
	기온확률모형에 근거한 날씨보험의 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이창수, 권혁성, 하홍준
	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를 위한 정책과제	신동호
	유해산출물을 고려한 생명보험회사의 효율성 연구	정재욱, 김재현
	Testing for the Presence of Moral Hazard in the Automobile Insurance Market using the Mixed Proportional Hazard Model	이용우
	제 목	저 자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3호 (2008년 11월)	경제변수가 생명보험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	최영목, 최 원
	이중일반선형모형(DGLM)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요율 추정	최우석, 한상일
	교차모집에서 설계사의 보험회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정세창, 안철경
	국민연금자산이 개인연금자산 보유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전승훈, 임병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체계의 적정성 분석	미승렬, 김명규
	인구고령화가 인적자본 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기호, 유경원
	우리나라 펀드시장의 토너먼트 현상 연구	고광수, 하연정
	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 구조가 경영성과 및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전선애, 이민환

2.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은 소비자의 보험가입 실태 및 향후 보험가입 수요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영업정책, 채널활용 등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 및 감독당국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집적·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조사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본 설문조사와 관련된 통계는 보험회사의 영업기획 및 판매실무 분석자료, 각종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01년부터 실시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금년까지 총 9회 실시되었다. 설문대상은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세대주 포함) 총 1,200명(유효표본)이며, 표본추출은 인구통계 변수인 연령·성별·지역·수입규모·결혼유무를 기준으로 층화표본추출 방법이 전국 비례별로 사용되며, 자료수집은 1:1 개별면접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보험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에 역점을 두는 조사유형이다. 설문의 주요 항목은 보험가입 실태, 판매채널 분석, 보험수요, 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 금융기관 선호도 및 보험가입 희망 회사이다. 둘째, 이슈별 조사로서 각 연도별 보험업계의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그동안의 이슈별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2009년 1월과 2월 중에 실시되었으며, 조사대행 기관은 코리아리서치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첫째, 보험가입 실태조사로서 보험가입률, 가입건수, 가입경로, 가입이유, 가입상품 만족도 및 보험가입 회사가 조사된다. 둘째, 향후 보험가입 의향 조사로서 상품별·채널별 가입의향, 선호 가입채널 및 그 이유, 선호 보험회사가 조사된다. 셋째, 보험·금융 관련 주요 이슈로서 자동차보험제도, 건강보험,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보험사기, 경기불황 시 금융상품 니즈 및 가계위험을 조사하였다.

이슈별 설문내용 (2001~2009)	연도	주요 이슈
	2001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2년	자동차보험 갱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2003년	주5일 근무제도에 따른 보험상품 선호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4년	자동차보험 선호도, 종신보험, 민영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
	2005년	건강 및 간병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방법, 채널만족 및 방카슈랑스 관련, 자산관리서비스
	2006년	민영건강보험, 고령화 및 연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보험회사 브랜드, 교차모집, 보험사기
	2007년	보험회사 이미지 및 영향 매체,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 보험소비자지수 관련
	2008년	보험회사 및 판매자 신뢰도와 만족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보험광고
	2009년	자동차보험제도,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가계위험, 보험사기

3.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3. 1 국제 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은 선진 금융·보험 시장의 경험과 학자적 지식을 공유하고 보험산업 종사자들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매년 해외의 저명한 금융·보험 산업 전문가 및 학자를 초대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제네바학회와 공동으로 '규제감독체제의 변화 속에서 보험회사의 새로운 리스크 관리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2008년에는 총 3회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국제적 교류와 발전에 기여하였다.

KIRI-Permal Joint Hedge Fund Workshop (2008년 5월 13일)	Institutional Investment on Funds of Hedge Funds	
	소주제	발표자
	Hedge Fund Investment by Institutional Investors	Isaac R. Souede Permal Group 회장
보험연구원 국제세미나 (2008년 6월 10일)	Customized Allocation to Hedge Fund	진 익 박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은퇴 이후의 삶과 노후소득 대책	
	소주제	발표자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	Sarah Harper 옥스퍼드대 교수
	홍콩의 퇴직연금시장	Luzia Hung 홍콩 HSBC 퇴직연금 총괄책임자
	고령화리스크와 노후소득 대책	류건식 박사/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8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2008년 9월 24일)	자본시장의 활성화, 보험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소주제	발표자
	보험회사의 투자기구 활용방안	진 익 박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자본시장의 성장과 퇴직연금 운영전략	류건식 박사/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2 OECD 보험 및 사적 연금위원회 참석

보험연구원은 1993년 7월부터 재무부 국제금융국 주관 OECD 보험작업반에 소속되어 관련 정책자료 작성과 보험·사적 연금위원회(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5년 6월부터 1996년 3월까지의 OECD 보험위원회의 추가요청 자료를 작성하였다. 이후 보험연구원은 1996년 6월의 제57차 OECD 보험회의부터 2008년 12월의 제82차 OECD 보험회의까지 한국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2008년 6월에 개최된 OECD 회의에서는 사적연금 TF 회의, 보험통계 TF 회의, 보험·사적 연금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며, 2008년 12월에는 사적연금 TF 회의와 보험·사적 연금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12월에는 금융위기와 관련된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되어 OECD 가입 국가들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일련의 회의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 한국 OECD 대표부 참사관과 협조하여 올바른 결정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때나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보험정책 수립방향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작성하여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는 금융위기 이후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및 금융시장위원회(Money Market Committee)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산업 감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향후에도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정책연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4. 금융·보험 산업 연구 관련 세미나

4. 1 보험경영인 조찬회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과 보험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험업계 임원, 정책·감독 당국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997년 7월 10일 제1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총 30회 조찬회가 개최되었다. 2008년에 개최된 조찬회는 다음과 같다.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08. 3. 18(제28회)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사공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
2008. 11. 18(제29회)	2009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경제금융 전망	이진면 박사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험산업 전망	이태열 박사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9. 3. 17(제30회)	판매채널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대응전략	안철경 박사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4. 2 연구 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은 보험업계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하여 보험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11월의 연구 세미나에서는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이 ‘보험제도 선진화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보험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보험제도 개선과정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다.

4. 3 연구포럼 운영

연구포럼은 실 단위로 운영되며, 특정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주제발표 및 의견을 교환하는 연구모임이다. 2008년에는 3개의 연구포럼이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다.

4. 3. 1 헷지펀드 운용전략 연구회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08년 5월 22일	Convertible Arbitrage	이석형(금융감독원)
2008년 6월 5일	Sample Matching: Theory and Application	김상수(산업은행)
2008년 6월 19일	주택저당대출담보증권 가격평가	현종석(아주대학교)
2008년 7월 3일	Volatility Trading with Options & Volatility Contracts	서지영(대신증재연구소)
2008년 7월 17일	시스템트레이딩 전략 실증분석	유인금(교보증권)
2008년 7월 31일	고정소득 차익거래	전정용(한국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
2008년 8월 14일	Put-Call Parity	유시용(중앙대학교)
2008년 8월 28일	Volatility & Variance Swaps	오세진(메리츠증권)
2008년 9월 26일	전환사채 차익거래	오세경(건국대학교)
2008년 10월 30일	Managed Futures	석호징(삼성증권)
2008년 11월 6일	Event Driven Long/Short Equity Strategies	김종한(한화증권)
2008년 12월 17일	헷지펀드 자산배분과 스타일분석	진 익(보험연구원)
2009년 2월 19일	글로벌 매크로	장 욱(예금보험공사)
2009년 2월 23일	헷지펀드 투자의 위험과 편익	임영상(플러스자산운용)
2009년 2월 26일	헷지펀드 성과분석	변귀영(모닝스타)

4. 3. 2 보험정책연구포럼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09년 1월 22일	보험 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연구	김경환(보험연구원)
2009년 3월 19일	판매채널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대응전략	안철경(보험연구원)

4. 3. 3 금융제도포럼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08년 11월 21일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 및 전망	이대기(금융연구원)
2009년 2월 20일	In Search of Crisis Resolution: Lessons from Japan and Sweden	김민석(증권연구원)
2009년 3월 27일	키코(KIKO)사태의 위험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	서상원(한양대)

5. 국내외 경제 · 금융 · 보험 동향 정보제공

동향분석실이 주관하여 매주 웹저널로 발간하는 『KiRi Weekly』는 경제 · 보험 · 금융 전반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국내외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iRi Weekly』는 주간 이슈, 국내외 금융 뉴스,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 지표로 구성된다.

주간 이슈에서는 금융·보험 및 실물경제에 관한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working paper 형태로 제공하며,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 말까지 총 28편이 발표되었다. 주간 이슈는 금융위기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세계경제 및 보험·금융권의 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금융뉴스에서는 북미·유럽·일본 및 중국 지역의 주요 경제, 금융, 보험 뉴스와 정보를 연구기관과 정책·감독 당국자 및 보험회사에게 신속하게 요약·전달하고 있는데, 연구소재 발굴과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금융뉴스에서는 한 주간의 국내 주요 금융·보험시장 관련 동향, 법규·제도·감독 관련 뉴스를 소개함으로써 간과하기 쉬운 내용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 지표에서는 국내외 금리·환율·주가·국제유가 및 금 시세의 추이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하여 현재 금융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6.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국내외 금융·보험 관련 전문도서 및 최신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정리·열람하게 함으로써 보험연구원의 업무 및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교수들에게도 도서 정보를 메일링 서비스하고 있다.

자료실은 국내보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NAIC, ISO, SOA, CAS, CII, AM Best, LOMA, ABI,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생명보험협회 등 해외 주요 보험 관련 단체들의 보고서와 단행본, 통계자료, 법률서적 등을 1970년대 초반부터 최신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소장하고 있어 보험지식 정보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료실은 2009년 2월 말 현재 단행본 21,000여 권, 학위논문 1,300여 권, 정기간행물 250여 종, 세미나 자료 및 보고서 2,100여 종, 비도서 자료 10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Maestro-Y」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보험연구원 외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V.

일반 현황

1. 경영비전

보험연구원(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은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8년에는 출범과 함께 ‘금융권 최고의 종합적인 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확립하고, 연구조직의 자율성 확보, 연구역량의 강화, 연구성과의 극대화라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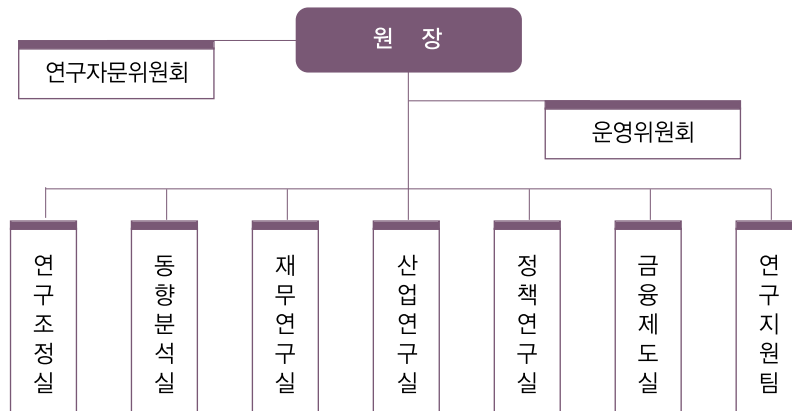
2. 연혁

보험연구원은 2008년 2월 26일 나동민 원장을 초대 원장으로 맞이하면서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초대 원장의 취임과 함께 보험연구원은 금융산업의 점업화 추세에 대응한 종합적 연구기능을 갖춘 금융권의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주요 연혁	일 자	주요 내용
	1995. 09	보험연구소 설치
	1996. 09	인터넷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1999. 09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2004. 07	제1회 국제 세미나 개최
	2006. 01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2007. 11	보험연구원 설립 금감위 승인
	2008. 02	보험연구원 개원
	2009. 02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3. 1 조직도



3. 2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가 1년인 연구자문위원은 금융·보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택된다. 보험연구원장은 연구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2008년 제1회 연구자문위원회는 신임 원장의 취임에 따라 FY2008 연구사업 선정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2008년 4월에 개최되었다. 제2회 연구자문위원회는 FY2009 연구사업 선정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2009년 1월에 개최되었다.

3.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보험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운영위원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기획담당 임원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4. 임직원 현황

(2009년 3월 말 현재)

구 분		임원	연구조정실	동향분석실	재무연구실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금융제도실	연구지원팀	계
원 장		1								1
연구 직	선임연구위원		1		1	1	1			4
	연구위원			1		2		3		6
	부연구위원			3	1	2	3	2		11
	전문연구위원				2	1				3
	수석연구원			1	1		1			3
	선임연구원		1	1		1		1		4
	연구원			3	2	2	2	2		11
행정 직			1				1		4	6
계		1	3	9	7	9	8	8	4	49

5. 실별 연구 분야 및 연구진

연구조정실

- ┃ 경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및 관리
- ┃ 연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연구사업계획 조정, 평가 및 관리
-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기획
- ┃ 운영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연구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주관
- ┃ 신규 연구사업 개발 및 업무 조정
- ┃ 대내외 홍보
- ┃ 운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
- ┃ 홈페이지 구성, 인터넷 관리 및 운영
- ┃ 도서·자료의 수집, 구입, 관리 및 해외연수·출장자료의 관리
- ┃ 연구조사정보 DB의 구축, 도서회원제 운영 및 관리

성 명	직 위	최종 학위	연구분야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실장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거시경제, 계량경제, 금융
김진익	선임연구원	성균관대 경영학 박사과정	재무관리

동향분석실

- ┃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 ┃ 국내 보험시장 동향분석 및 전망
- ┃ 해외보험시장 정보의 조사 및 분석
- ┃ 금융 및 경제 관련 주요 통계의 집적관리
- ┃ 보험수요 예측모델 개발

성 명	직 위	최종 학위	연구분야
이진면	연구위원/실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산업구조, 거시경제, 계량경제
신종협	부연구위원	University of Rochester 경제학 박사	국제경제, 거시경제, 응용계량
황진태	부연구위원	Clems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계량경제, 경제성장
유진아	부연구위원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거시 금융경제, 계량경제
김세환	수석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 및 보험
이정환	선임연구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거시경제, 계량경제
박정희	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마케팅
김세중	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금융경제
최이섭	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마케팅, 경영전략

재무연구실

-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연구
- 회사별 경영성과 평가 및 연구
- 재무건전성 감독방안 연구
- 보험회계 및 세제 연구
- 재무 및 리스크 관련 제반 분석모형 개발

성 명	직 위	최종 학위	연구분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실장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생명보험, 리스크관리, 퇴직연금
이창우	부연구위원	Bos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보건경제
김해식	전문연구위원	St. John's University 리스크관리 석사	리스크관리, 보험회계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생명보험, 퇴직연금
장동식	수석연구원	고려대학교 통계학 석사	리스크감독, 생명보험
김동겸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재무관리
서성민	연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금융경제

산업연구실

-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보험상품, 언더라이팅, 마케팅, 손해사정, 재보험기법 등에 관한 연구
- 업무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연구
- 보험가입 성향 등 수요자 동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성 명	직 위	최종 학위	연구분야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실장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경영, 보험정책
안철경	연구위원	송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마케팅, 판매채널
조용운	연구위원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건경제, 계량경제, 보험경제
송윤아	부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경제학 박사	응용미시, 산업조직, Governance
김대환	부연구위원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계량경제, 보건경제, 산업조직, 노동
기승도	전문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 박사과정 수료	통계학, 자동차보험
이상우	선임연구원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 박사과정 수료	생명보험, 일본금융보험 동향
한상용	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조직행동
권오경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관리회계

정책연구실

- | 보험산업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제 개발 및 지원
- | 보험회사 합병, 겸업화, 진입 · 퇴출 등 보험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 | 대외 보험정책과 관련한 연구
- |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한 연구 및 지원

성 명	직 위	최종 학위	연구분야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실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정책, 사회보장정책
서대교	부연구위원	Kansas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규제
변혜원	부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응용미시
이승준	부연구위원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기업금융, 응용미시
김경환	수석연구원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정책, 보험관련 법규
이종욱	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산업조직
김영진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석사	계량경제

금융제도실

-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연구
- | 예금보험제도 등 보험시스템 안전에 관한 연구
- | 파생금융상품 및 시장에 관한 연구
- | 은행산업 등 타 금융권에 관한 연구
- | 금융제도 및 금융 권역별 비교연구

성 명	직 위	최종 학위	연구분야
진 익	연구위원/실장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자산운용, 헷지펀드, 파생상품
이민환	연구위원	Kyoto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금융경제, 산업조직
유경원	연구위원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소비자금융, 가계재무, 응용미시
최영목	부연구위원	중앙대학교 경영학 박사	재무관리
최형선	부연구위원	University of Iowa 경제학 박사	화폐금융론, 거시경제
최 원	선임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리스크관리, 보험경영
이경아	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이혜은	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연구지원팀

- | 보험금융연구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출판관리
-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연구자문위원회 등 행사 관리
- | 각종 계약체결 및 관리
- | 사무실 비품, 물품, 차량의 조달 및 관리
- | 결산, 인사, 교육, 복리후생제도 기획 및 입안
- | 예산의 편성·배정 및 운영
- | 의전 및 비서 업무
- | 전산기기 도입, 연구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및 계약

193

6.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간행물 명	발간 주기	주 관
정기간행물	보험금융연구	연3회(3, 7, 11월)	정책연구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연간(3월)	산업연구실
	Korean Insurance Industry	연간(7월)	동향분석실
	보험동향	계간(3, 6, 9, 12월)	동향분석실
	KiRi Weekly	주간(매주 월요일)	동향분석실

	보고서 명	저 자
용역보고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류건식 외
	휴면예금관리재단 소액보험사업의 발전방안	유경원 외
	해외 보험사기방지체제 구축방안	이기형 외
	자산운용산업 국제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및 인프라 발전방안	진 익 외
	지적재산권 보험제도 도입방안	이기형 외

2008 연차보고서

발 행 인 나동민
편집위원장 이기형
편 집 위 원 유경원, 이승준, 송윤아
편 집 실 무 이정환
제 작 Tendom Associates Inc.
발 행 일 2009. 4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